

발간등록번호

인천교육 - 2023 - 0142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인천교육의 나침반, 인천미래교육2030

THE 2ND
2030 INCHEON FUTURE EDUCATION
CONFERENCE

INCHEON EDUCATION

제2회

2030인천미래교육
컨퍼런스

대상 인천 시민 누구나

일시 2023. 8. 19.(토) 14:00~18:00

장소 OFF-LINE 인화여자고등학교 별관(꿈터) 도서관 3층 및 404~406호

ON-LINE 인천광역시교육청  유튜브 생중계

유튜브 주소 : <https://youtube.com/live/sbkFdJ80YQM>



온라인생중계 QR코드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 제2회 2030인천미래교육 콘퍼런스

▶ 일시 : 2023. 8. 19.(토) 14:00~18:00

▶ 장소

- 대면: 인화여자고등학교 별관(꿈터) 도서관 3층 및 404~406호

- 비대면: 인천광역시교육청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1부만 중계)

(<https://youtube.com/live/sbkFdJ8OYQM>)

▶ 참석대상 :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 위원 및 인천 시민

▶ 행사일정

구분	시간	장소	운영 내용				
1부	14:00~14:05(5')	인화여고 별관(꿈터) 도서관	▶ 개회				
	14:05~16:10(5')		▶ 축사 • 인천광역시장 유정복 •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장 신충식				
	14:10~14:25(15')		▶ 기조강연: 인천교육의 나침반, 인천미래교육2030 • 인천광역시교육감 도성훈				
	14:25~15:15(50')		▶ 분과별(정책목표별) 세션 발제 •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 최웅 •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사무처장 최정학 • 총신대학교 교수 김수환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마을협력과 장학사 김윤희 •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박철희				
	15:15~15:35(20')		▶ 질의응답				
	15:35~15:40(5')		▶ 2부 안내				
15:40~16:00(20')			휴식 및 이동				
2부	16:00~17:25(85')	인화여고 별관(꿈터) 도서관 및 404~406호	▶ 분과별(정책목표별) 세션 운영				
			세션1 (도서관) [정책목표]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복지 통합체계 구축	세션2 (404호) [정책목표] 모두가 모두에게 배우는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실현	세션3 (405A호) [정책목표]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와 협력의 미래교육과정 실현	세션4 [405C호] [정책목표] 삶과 배움을 잇고 마을 공동체를 가꾸는 마을교육 생태계 조성	세션5 (406호) [정책목표] 우리 삶과 사회를 바꾸는 공존과 상생의 시민교육 실현
	17:25~17:30(5')	인화여고 별관(꿈터) 도서관	▶ 이동				
	17:30~17:55(25')		▶ 전체 질의응답 - 각 세션 운영 결과 발표 및 질의응답				
17:55~18:00(5')	▶ 폐회						

※ 일정 및 세부 추진 내용은 추진과정에서 일부 변경 가능

▶ 세부 운영 내용

<1부-공동세션>

- 인화여고 별관(꿈터) 도서관(3층)

■ 사회: 이은주 부위원장

순서	시간		내용 및 담당자
개회	14:00~14:05	5'	▶ 개회
축사	14:05~14:10	5'	▶ 축사 • 인천광역시장 유정복 •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장 신충식
기조 강연	14:10~14:25	15'	▶ 기조강연 • 주제: 인천교육의 나침반, 인천미래교육2030 [인천광역시교육감 도성훈]
발제	14:25~15:15	50'	▶ 발제(분과별 세션 발제) [좌장: 박영대 공동위원장]
			발제1 (10') • 정책목표: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복지통합체계 구축 [교육협력버너스분과] • 주제: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인천형 학생성장통합지원 발전 방향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 최웅]
			발제2 (10') • 정책목표: 모두가 모두에게 배우는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실현 [평생교육분과] • 주제: 전생애 평생학습 실현을 위한 상호협력체계 구성 방향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사무처장 최정학]
			발제3 (10') • 정책목표: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와 협력의 미래교육과정 실현 [미래교육환경분과] • 주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참여와 협력으로 학생이 주인공이 되는 교육 만들기 [총신대학교 교수 김수환]
			발제4 (10') • 정책목표: 삶과 배움을 잇고 마을 공동재(common good)를 가꾸는 마을교육생태계 조성 [마을교육공동체분과] • 주제: 학교와 마을을 잇는 공공재로써의 공유공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마을협력과 장학사 김윤희]
			발제5 (10') • 정책목표: 우리 삶과 사회를 바꾸는 공존과 상생의 시민교육 실현 [시민교육분과] • 주제: 2030 민주시민교육 정책목표와 방향성 탐색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박철희]
질의 응답	15:15~15:35	20'	▶ 질의응답
안내	15:35~15:40	5'	▶ 1부 마무리 및 2부 안내

<2부-분과별 세션>

- 인화여고 별관(꿈터) 도서관(3층) 및 404~406호

■ 좌장: 최은주 위원

(세션1) 교육협력거버넌스 분과

- 정책목표: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복지통합체계 구축
- 발제: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인천형 학생성장통합지원 발전 방향

순 서	시 간		내용 및 담당자
인사 및 소개	16:00~16:05	5'	좌장 인사 및 토론자 소개
추가 발제	16:05~16:15	10'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 최웅
토론1	16:15~16:25	10'	▶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복지통합체계 [백령초등학교 교장 최덕진]
토론2	16:25~16:35	10'	▶ 성장하는 학생, 성장하는 교직원, 사례를 통한 학생성장통합지원의 발전 방향 [인천송의초등학교 교장 박병춘]
토론3	16:35~16:45	10'	▶ 인천광역시의 교육복지정책의 한계와 협력적 거버넌스 구현 요구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 위원 마경남]
종합토론	16:45~17:15	30'	종합토론
의제정리	17:15~17:25	10'	최종 의제 정리 및 마무리

■ 좌장: 정미영 분과장

(세션2) 평생교육분과

- 정책목표: 모두가 모두에게 배우는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실현
- 발제: 전(全)생애 평생학습 실현을 위한 상호협력체계 구성 방향

순 서	시 간		내용 및 담당자
인사 및 소개	16:00~16:05	5'	좌장 인사 및 토론자 소개
추가 발제	16:05~16:15	10'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사무처장 최정학
토론1	16:15~16:25	10'	▶ 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을 활용한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실현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진학직업교육과 장학관 이덕한]
토론2	16:25~16:35	10'	▶ 학교 안과 밖을 연결하는 대안교육 [대안교육연대 정책국장 박민형]
토론3	16:35~16:45	10'	▶ 인천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 지원을 중심으로 [인천대안교육기관협의회 회장 전경아]
종합토론	16:45~17:25	40'	종합토론

■ 좌장: 전해정 분과장

(세션3) 미래교육환경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목표: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와 협력의 미래교육과정 실현 ■ 발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참여와 협력으로 학생이 주인공이 되는 교육 만들기 			
순 서	시 간		내용 및 담당자
인사 및 소개	16:00~16:05	5'	좌장 인사 및 토론자 소개
추가 발제	16:05~16:15	10'	총신대학교 교수 김수환
토론1	16:15~16:25	10'	▶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참여와 협력으로 학생이 주인공이 되는 교육 만들기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융합교육과 장학사 연수현]
토론2	16:25~16:35	10'	▶ 인공지능을 이해하는 수업 전략 [인천석정초등학교 교사 김도용]
토론3	16:35~16:45	10'	▶ 학생이 느끼는 미래교육: 디지털 대전환 시대, 학생이 꿈꾸는 학교 [인천여자중학교 학생 권시우]
종합토론	16:45~17:25	40'	질의 응답 및 마무리

■ 좌장: 정은주 분과장

(세션4) 마을교육공동체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목표: 삶과 배움을 잇고 마을 공동재(common good)를 가꾸는 마을교육생태계 조성 ■ 발제: 학교와 마을을 잇는 공공재로써의 공유공간 			
순 서	시 간		내용 및 담당자
인사 및 소개	16:00~16:05	5'	좌장 인사 및 토론자 소개
추가 발제	16:05~16:15	10'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마을협력과 장학사 김윤희
토론1	16:15~16:25	10'	▶ 마을 공유공간 '지음(知音)'을 소개합니다 [마을교육공동체 지음 회원 최영이]
토론2	16:25~16:35	10'	▶ 삶과 배움이 일치되는 마을교육에서 공간활용의 문제 [인천목향초등학교 교사 김지은]
토론3	16:35~16:45	10'	▶ 공유공간 관리자와 이용자의 역할 [인천예송초등학교 학부모 하미정]
질의응답	16:45~17:25	40'	질의 응답 및 마무리

(세션5) 시민교육분과			
<p>■ 정책목표: 우리 삶과 사회를 바꾸는 공존과 상생의 시민교육 실현</p> <p>■ 발제: 2030 민주시민교육 정책목표와 방향성 탐색</p>			
순 서	시 간		내용 및 담당자
인사 및 소개	16:00~16:05	5'	좌장 인사 및 토론자 소개
추가 발제	16:05~16:15	10'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박철희
토론1	16:15~16:25	10'	▶ 2030 민주시민교육 정책목표와 방향성 탐색 [인천광역시교육청 세계시민교육과 장학사 김현정]
토론2	16:25~16:35	10'	▶ 교육 현장에서 바라본 2030 민주시민교육 정책 [인천공항중학교 교사 안미경]
토론3	16:35~16:45	10'	▶ 시민교육 속의 시민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 위원 이훈]
토론4	16:45~16:55	10'	▶ 인천의 다양한 시민교육, 모으고 연결하자. 그리고 지금 당장 해보자 [(사)생태교육센터 이랑 사무국장 성은혜]
종합토론	16:55~17:15	20'	종합토론
의제정리	17:15~17:25	10'	최종 의제 정리 및 마무리

목 차



기초 강연

- ▶ 인천교육의 나침반, 인천미래교육2030 1
인천광역시교육감 조성훈

세션 1

교육협력 거버넌스 분과

[정책목표]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복지
통합체계 구축

- ▶ [발제]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인천형 학생성장통합지원 발전 방향 11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 최웅
- ▶ [토론1]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복지통합체계 20
백령초등학교 교장 최덕진
- ▶ [토론2] 성장하는 학생, 성장하는 교직원, 사례를 통한 학생성장통합지원의
발전 방향 29
인천송의초등학교 교장 박병춘
- ▶ [토론3] 인천광역시의 교육복지정책의 한계와 협력적 거버넌스 구현 요구 .. 32
인천도시경영연구원 부평센터장 마경남

세션 2

평생교육분과

[정책목표]

모두가
모두에게
배우는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실현

- ▶ [발제] 전(全)생애 평생학습 실현을 위한 상호협력체계 구성 방향 37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사무처장 최정학
- ▶ [토론1] 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을 활용한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실현 43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진학직업교육과 장학관 이덕한
- ▶ [토론2] 학교 안과 밖을 연결하는 대안교육 56
대안교육연대 정책국장 박민형
- ▶ [토론3] 인천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 지원을 중심으로 59
인천대안교육기관협의회 회장 전경아

세션 3

미래교육 환경분과

[정책목표]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와 협력의
미래교육과정
실현

- ▶ **[발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참여와 협력으로 학생이 주인공이 되는
교육 만들기 71
총신대학교 교수 김수환
- ▶ **[토론1]**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참여와 협력으로 학생이 주인공이 되는
교육 만들기 75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융합교육과 장학사 연수현
- ▶ **[토론2]** 인공지능을 이해하는 수업 전략 81
인천석정초등학교 교사 김도용
- ▶ **[토론3]** 학생이 느끼는 미래교육: 디지털 대전환 시대, 학생이 꿈꾸는 학교 ... 83
인천여자중학교 학생 권시우

세션 4

마을교육 공동체분과

[정책목표]

삶과 배움을 잇고
마을 공동재
(common good)를
가꾸는
마을교육생태계
조성

- ▶ **[발제]** 학교와 마을을 잇는 공공재로서의 공유공간 89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마을협력과 장학사 김윤희
- ▶ **[토론1]** 마을 공유공간 ‘지음(知音)’을 소개합니다 96
마을교육공동체 지음 회원 최영이
- ▶ **[토론2]** 삶과 배움이 일치되는 마을교육에서 공간활용의 문제 99
인천목향초등학교 교사 김지은
- ▶ **[토론3]** 공유공간 관리자와 이용자의 역할 101
인천예송초등학교 학부모 하미정

세션 5

시민교육분과

[정책목표]

우리 삶과
사회를 바꾸는
공존과 상생의
시민교육 실현

- ▶ **[발제]** 2030 인천시민교육의 정책목표와 방향성 탐색 105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박철희
- ▶ **[토론1]** 2030 인천시민교육의 정책목표와 방향성 탐색 108
인천광역시교육청 세계시민교육과 장학사 김현정
- ▶ **[토론2]** 교육 현장에서 바라본 2030 민주시민교육 정책 111
인천공항중학교 교사 안미경
- ▶ **[토론3]** 시민교육 속의 시민 114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 위원 이훈
- ▶ **[토론4]** 인천의 다양한 시민교육, 모으고 연결하자. 그리고 지금 당장 해보자 ... 116
(사)생태교육센터 이랑 사무국장 성은혜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
제2회 2030인천미래교육 콘퍼런스

기조
강연

인천교육의 나침반, 인천미래교육2030

인천광역시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의 나침반, 인천미래교육2030

인천교육의 나침반,
인천미래교육2030

제2회
2030인천미래교육
컨퍼런스

'인천교육의 나침반,
인천미래교육2030'

인천광역시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의 나침반,
인천미래교육2030

제2회
2030인천미래교육
콘퍼런스

“배운다는 건 꿈을 꾸는 것,
가르친다는 건 희망을 노래하는 것”

노래 “꿈꾸지 않으면”

인천교육의 나침반,
인천미래교육2030

제2회
2030인천미래교육
콘퍼런스

희망을 다시 노래할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때

인천교육의 나침반,
인천미래교육2030

제2회

2030인천미래교육
콘퍼런스

1. 미래교육을 위한 사회적 대화

2021년 유네스코
세계 보고서 발표
“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

미래를 바꿔 놓을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미래교육과
사회의 방향을
모색하는
사회적 대화

인천교육의 나침반,
인천미래교육2030

제2회

2030인천미래교육
콘퍼런스

2. 사회적 대화의 출발점은 비전의 공유

“2030
인천미래교육
공동비전”을
선언

“행복한 배움,
다채로운 성장,
함께하는
인천교육”

추구하는
4가지 인간상
제시

인천교육의 나침반,
인천미래교육2030

제2회
2030인천미래교육
콘퍼런스

2. 사회적 대화의 출발점은 비전의 공유



인천교육의 나침반,
인천미래교육2030

제2회
2030인천미래교육
콘퍼런스

3. 세계는 지금 모두 미래교육을 논의 중



인천교육의 나침반,
인천미래교육2030

제2회 2030인천미래교육 컨퍼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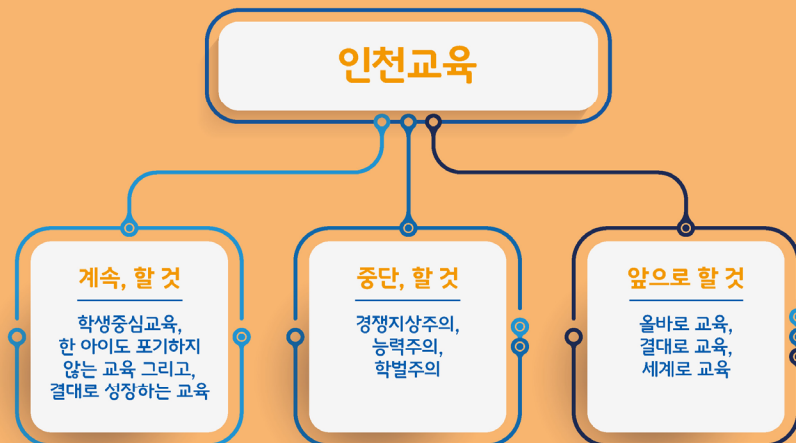
3. 세계는 지금 모두 미래교육을 논의 중



인천교육의 나침반,
인천미래교육2030

제2회 2030인천미래교육 컨퍼런스

4. 인천교육 계속해야 할 것, 중단해야 할 것, 앞으로 해야 할 것



인천교육의 나침반,
인천미래교육2030

제2회
2030인천미래교육
콘퍼런스

인천교육의 나침반, <인천미래교육2030>



인천교육의 나침반,
인천미래교육2030

제2회
2030인천미래교육
콘퍼런스

다시 한번 <2030 미래교육 컨퍼런스>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
제2회 2030인천미래교육 콘퍼런스

세션
①

교육협력거버넌스 분과

발제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 **최 웅**

토론 1 백령초등학교 교장 **최덕진**

토론 2 인천송의초등학교 교장 **박병춘**

토론 3 인천도시경영연구원 부평센터장 **마경남**



발제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인천형 학생성장통합지원 발전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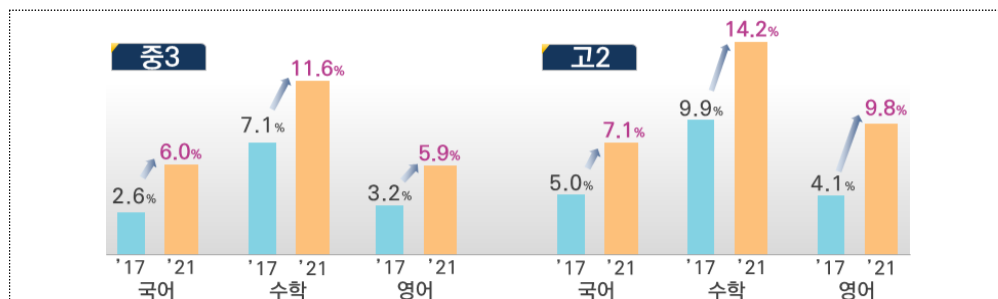
최웅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

1. 인구 감소와 취약계층 학생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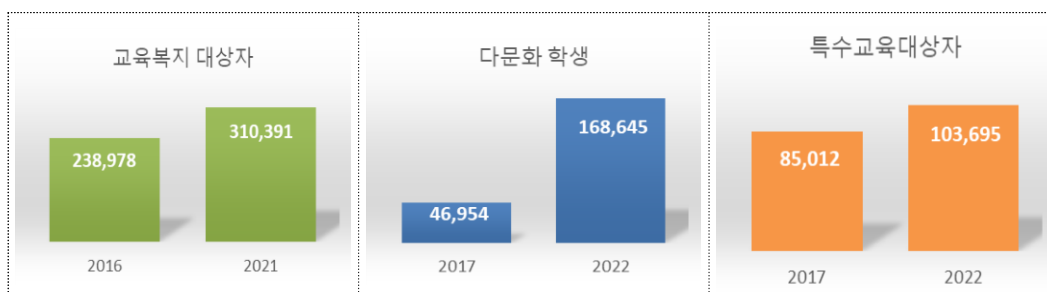
2022년 출생아 수는 249,000명으로, 20년 전이었던 2002년(496,911명)에 비해 절반가까이 줄어들었다(국가통계포털, 2023). 향후 20년간 학령인구가 40% 이상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출생아 수의 급감은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노동시장, 연금제도, 부동산문제, 지역소멸 등 주요 사회정책의 위기와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2012년 42만 명이었던 초등학교 입학생이 2027년에는 26만 명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장 학교 수와 학급당 학생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이미 국회에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 또는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이 교육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다. 세종특별시는 2022년부터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의 학급별 학생 수를 20명 미만으로 줄여나가고 있다.

전체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이지만, 기초학력 미달학생, 교육복지 지원대상 학생, 다문화 학생 등 학업성취와 학교생활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은 반대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그림1] 2017년·202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1수준(기초학력 미달)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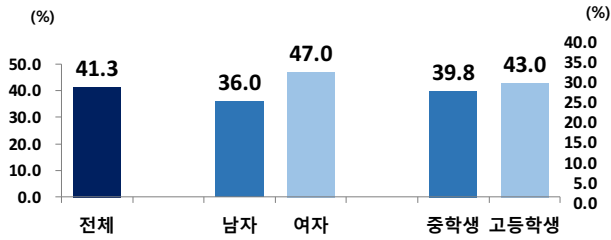


[그림2] 교육복지 지원대상·다문화 학생·특수교육 대상자 증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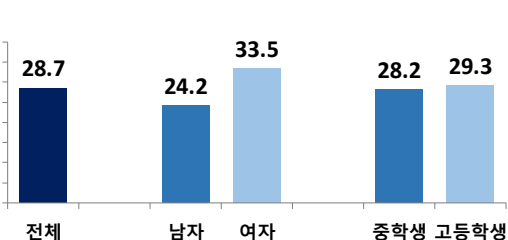


특히, 코로나19 및 재난상황을 경험하면서 우울 및 불안감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증가하였다. 2022년 중·고등학생 스트레스 인지율은 41.3%였으며, 중·고등학생의 28.7%는 최근 1년 내에 우울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23). 교육부에서는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 교육결손학생을 203만 명으로 예상하고 코로나19 이후 교육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다.

[그림3] 스트레스 인지지수(2022)



[그림4] 우울감 경험률(2022)



2. 교육복지정책 확대와 한계

교육복지정책은 문민정부 이전부터 장애학생, 학업중단학생, 학습부진학생 등을 돕기 위해 진행되었다. 교육복지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97년 IMF이후 빈곤계층이 늘어나면서 부터이다. 2003년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부터다. 1997년 IMF이후 빈곤층 증가에 따른 교육소외와 교육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저소득층 학생을 중심으로 학습, 문화체험, 심리지원,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 사업초기에는 학교도서관, 방과 후 교실 등 교육과정운영 외에 다양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이 부족했던 시기여서 다양한 사업들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을 통해 실시되었다. 이후 교육취약계층 학생 및 위기학생이 증가하면서 교육복지정책은 더욱 다양하게 세분화되고 확대되었다. 현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외에도 교육복지안전망, Wee Project, 다문화 학생 지원, 탈북학생 지원, 특수교육지원, 기초학력향상지원, 교육급여 확대, 돌봄교실, 두드림학교 등 다양한 교육복지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표1] 역대 정부 교육복지정책

시기	주요특징	주요 정책사업
문민정부 이전	• 일부 대책에 한정	• 장애아, 중도탈락자, 학습 부진아, 귀국 학생에 대한 대책 수립
김대중 정부	• 외환위기 이후 교육복지 관심 증대	• 만5세 무상교육,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노무현 정부	• 교육복지정책의 양적 확대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 만3~4세 유아교육비, 중학교 무상교육 지원, 저소득 학생 대상 정부 장학금 지급, 대안학교 법제화
이명박 정부	• 학력격차 해소 지원 체계화 • 교육복지 사각지대 보완	• 중학교 무상교육 강화, 장애학생에 대한 무상·의무교육 실현 • 기초학력 향상 지원체계 구축 • 교육복지업무의 시도교육청 이양
박근혜정부	• 무상보육 및 돌봄 확대 • 학교교육 정상화	• 누리과정 확대, 돌봄 교실 프로그램 강화 • 대학 국가 장학금, 다문화 및 탈북 학생 지원 확대
문재인 정부	• 경제·사회 양극화 해소 • 차별 없는 포용적 교육	• 교육급여 지원 확대 및 현실화 • 대학생 주거 부담 경감, 평생교육 바우처 • 고교무상교육, 국립대 입학금 폐지, 국공립유치원 증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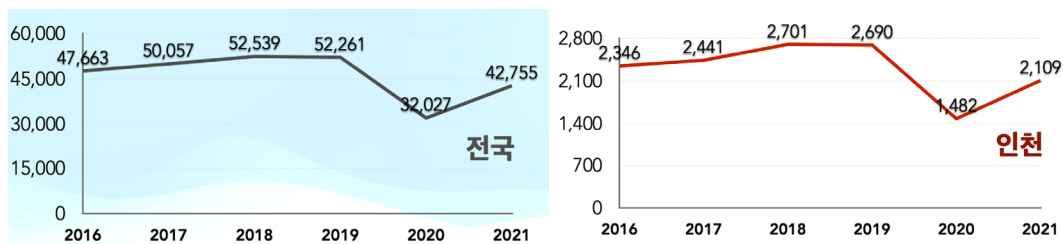
[그림5] 교육복지정책별 사업 확대 현황



3. 교육복지정책의 한계

학생 수도 급격히 줄어들고 정부에서 교육복지정책으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교육현장에서 학업성취 및 학교생활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은 반대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소득 불평등에 의한 교육 불평등은 상대적 소외감을 불러오고 있고, 누적된 학습결손은 심화되어 교육격차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또한 교육취약계층 대상학생의 범위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욕구를 해소하고 있지 못하다. 그 결과 학업중단 학생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52,261명으로 1%를 넘겼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줄었다가 2021년에는 다시 42,775명으로 늘어나고 있다(교육통계, 2023). 2022년 학교폭력피해 응답률은 1.7%로 201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2022년 19세 이하 인구 중 334명이 고의적 자해로 사망하였다(통계청, 2023). 아동학대 신고건수도 2019년 38,380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다문화 학생, 특수교육 대상자를 비롯해 경제·심리·정서·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 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다.

[그림6] 학업중단 학생 수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교육소외, 교육 불평등, 교육격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그 동안 진행되었던 교육복지정책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첫째, 지금까지 교육복지정책은 결핍을 지원하는 지원방식의 모델이었다.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교육복지가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는 전인적인 성장에 이르는데 한계가 있다. 결핍을 지원하는 모델에서 성장을 지원하는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사업이나 프로그램 중심의 운영을 벗어나야 한다.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하면 특정한 대상을 중심에 두고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이런 방식의 운영은 개별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해결하는 것에 한계를 보이고 결국 열심히 사업을 하지만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제 사업중심에서 학생중심으로 통합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학교 내에는 교육복지통합지원팀을 운영하고, 사업예산의 통합 운영도 필요하다.

셋째,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의 부재다. 교육복지정책이 확대되고 사업내용도 다양화, 확대되면서 관련 사업들이 개별사업 중심으로 분절적인 운영이 되고 있다. 분절적인 운영은 서비스 중복과 사각지대라는 문제를 가지게 된다. 교육복지 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사업 지속성을 확보하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다.

4. 교육부의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구축

교육부에서는 학생 수 감소와 함께 앞에서 이야기한 교육복지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2023년부터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구축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에 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구축은 개별로 운영 중인 교육복지정책사업을 학생중심으로 재편하여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과 관련 사업들이 통합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2023년 5월 31일에는 학생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국회에서 발의되었고,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구축을 위한 선도학교, 시범교육청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주요내용

- (1)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2)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소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회복을 위하여 학습·복지·상담 등을 통합한 학생 중심의 맞춤형 통합지원 및 관리를 “학생맞춤통합지원”으로 정의함(안 제2조).
- (3) 교육부장관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 (4)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지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추진체계를 마련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5) 학교의 장이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요청을 받아 학교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선정하고, 교육복지, 심리상담, 학습지원, 긴급지원 등을 학생의 필요에 맞추어 통합적으로 지원·관리하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 (6)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초등학교, 중학교로의 재취학 또는 고등학교로의 재입학, 학력 인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 (7)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에게 교육정보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기관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 19조).

나.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 지정·운영 (전국 100개교)

(1) 학생맞춤통합지원 위원회 운영

교육복지심시위원회, 기초학력다중지원팀, 위기학생관리위원회, 학업중단예방위원회, 학생생활교육위원회 등 사업별로 운영 중인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로 구성하고 안건에 따라 팀원이 유동적으로 참여하는 학교 내 학생맞춤통합지원 전담기구를 마련하도록 한다.

(2) 학생맞춤통합지원 절차 마련

담임교사를 비롯한 학교 내 모든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관찰함으로써 위기학생을 발굴하고 학생에게 필요한 도움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별 학생에 대한 지원과정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그림6] 선도학교 학생맞춤통합지원 예시(안)



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시범교육지원청 지정·운영 (2025년까지 90개 교육지원청)

(1) 학교와 학생지원을 위한 다양한 모델 개발

학생맞춤통합지원 시범교육지원청은 선도학교가 학생 지원을 의뢰할 경우 학생을 지원하고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2)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교육지원청 내 관련 사업 및 센터의 전문인력 간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도 학생맞춤통합지원이 가능한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교육복지안전망, Wee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학습클리닉센터, 학교지원센터, 다문화학생지원센터 등)

(3)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기관들과 네트워크 구축 강화

5.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인천형 학생성장통합지원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05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교육복지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통해 114명의 교육복지사를 학교에 배치하여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사례관리 지원 및 지역사회자원연계, 지역네트워크 등을 활발히 운영하였다. 코로나19 감염병 상황 속에서 일어났던 미추홀구 형제 화재사건을 비롯한 아동방임 및 학대 사건들은 인천광역시 아동·청소년복지 사각지대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들이었다. 다양한 사건들로 인해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긴급대책으로 교육복지안전망센터를 각 교육지원청에 설치하고 교육복지사를 채용하였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민선3기 교육감 임기 내에 교육복지사를 179명을 확대·배치하여 아동·청소년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교육복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교육복지 확대가 학생들에게 보다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과의 정책적 융화가 필요하다. 인천미래교육위원회에서 교육복지정책과 관련해 논의 되었던 교육복지통합지원체계 구축 내용과 교육부 학생성장통합지원체계구축을 바탕으로 인천형 학생성장통합지원체계구축을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가. 교육복지 패러다임 전환

(1) 사업 중심이 아닌 학생 중심의 지원체계

기존 교육복지정책은 사업 중심, 사업담당자 중심으로 운영이 되어왔다. 분절적인 사업운영으로 개별 학생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이 어려워지고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발굴은 더욱 어려웠다. 이제 는 각각 사업 중심이 아닌 학생을 중심으로 사업들이 통합되어 움직이는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2) 사업이 아닌 보편적인 학교시스템

기존 교육복지 패러다임은 특별한 학생들을 위한 정책과 사업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교육복지는 학생들이 학업에 결손이 생기지 않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함께 공유해야 한다. 학교 시스템 속 일상적인 기본 기능 중 하나로 교육복지시스템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3) 예방과 발굴을 통한 조기개입 강화

아동·청소년복지는 조기에 이루어질수록 효과적이다. 현재 교육복지는 결핍을 채우는 사업들이다. 즉, 문제가 발생하고 난 후에 개입, 지원하는 방식이다. 학생들의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더욱 효과적인 정책을 펼치기 위해 예방활동과 조기개입을 강화해야 한다. 예방활동을 통해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할 수 있으며, 결핍해소나 문제해결이 아닌 경험을 통한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

(4)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 구축

교육취약계층 학생의 성장은 가정-학교-지역사회가 함께 연계·협력하고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단순한 교육·복지서비스 지원을 넘어 학생, 학부모, 교사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연대하고 참여함으로써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

나. 학교구성원 역량강화

(1) 학생성장통합지원에 대한 이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구축을 위한 교육복지와 학생성장통합지원에 대해 학교구성원들의 이해를 돕는 연수를 자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한다. (교장연수, 교감자격연수, 교사직무연수, 신규교사연수, 전체 교직원연수, 교육공무직 직무연수, 학부모 연수 등)

(2) 학교구성원 역량강화

학생성장통합지원을 학교 내 모든 구성원들이 이해하고 참여·협력할 수 있도록 교직원들의 역량을 개발·강화하는 연수를 학교단위, 교육지원청 단위로 운영해야한다. 또한 학생, 학부모, 교사에 대한 지지모임이나 연수를 통해 함께 성장해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한다.

- 학교관리자 리더십 연수
- 학교구성원들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역량 개발 연수 및 워크숍
- 교사의 성장(교육현장에서의 치유와 성장 모임,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이해 등)
- 학부모에 대한 지원과 성장(학부모로써의 성장모임, 학교에 대한 이해 등)
- 학생성장을 위한 실천(관계중심의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 성장을 위한 자조모임 등)

(3) 학교 내 사회복지사 배치 및 역량강화

교육복지사업,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구축을 진행하면서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요구되는 내용 중 하나가 학교 내 사회복지 전문인력에 대한 배치이다. 하지만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이미 민선3기 교육감 공약으로 임기 내 179명의 교육복지사 배치를 계획하고 있다. 학교에 배치되는 교육복지사가 인천형 학생성장통합지원체계 속에서 전문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배치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연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 학교현장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을 갖춘 준비된 교육복지사 채용(교육복지, 아동·청소년복지 경험 및 자격조건 강화 필요)
- 학생성장통합지원을 위한 전문가 슈퍼비전 체계 마련
- 통합사례관리, 지역네트워크에 대한 전문성 강화 연수 지속 운영
- 지역 내 전문가 양성을 위해 학교사회복지사 국가자격제도 활용

다. 학생성장통합지원체계구축

(1) 모든 학교에 학생성장통합지원팀 구축

교육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생맞춤통합지원과 마찬가지로 학교 내에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복지사업 및 각종 위원회를 학생 중심으로 재편성하여 학생성장통합지원팀을 구축한다. 교직원, 담임교사, 학부모, 학생 등 누구나 위기학생이나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발견하여 의뢰할 수 있다.

[그림] 학생맞춤통합지원팀 역할 예시(경상북도교육청)



(2) 교육(지원)청 학생성장통합지원체계 구축

- 지역학생성장통합지원센터 설치

학교에서 지원요청이 있거나 학교 내에서 비밀보장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학교와 학생에 대한 통합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 내 지역학생성장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한다(교육복지안전망, Wee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학습클리닉센터, 학교지원센터, 다문화학생지원센터 등). 이는 부서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팀 체제로 운영할 수도 있다. 다만 유기적으로 운영할 때에는 각 부서 간 연계를 고려하여 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 전문가 솔루션위원회 구성

학생성장통합지원 과정에서 전문적인 진단과 지원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 솔루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학생성장통합지원센터 및 단위학교의 학생성장통합지원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3)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강화

- 학교와 교육지원청 내 전문적인 지역네트워크, 자원개발 및 연계 담당자 지정 운영

- 위기아동안전망, 청소년안전망,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기존 네트워크에 적극적인 참여

- 학생성장통합지원을 위한 동주민센터 및 지역사회복지기관 연계를 통해 정보공유 및 공동사례관리 운영체계 구축

라. 인천 학생성장통합지원을 위한 지원

(1) 학생성장통합지원을 위한 교육·복지조례 제정

교육복지정책들은 각기 법령 또는 조례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학생성장통합지원체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간, 지역사회와 학교 간 통합·연계와 관련된 법적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통과여부와 관계없이 인천지역 학생들을 위한 학생성장통합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안정적인 법률 체계 속에서 학생성장통합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2) 인천광역시 교육·복지발전방향 및 계획수립

교육복지정책별 사업에 대한 운영계획이 아닌 인천광역시교육청 차원에서 교육복지의 실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적인 계획 하에 유관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인천광역시 교육·복지거버넌스 구축

인천광역시 학생들에 대한 지원내용과 범위, 연계·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민·관·학, 그리고 관련 당사자들이 함께 논의하며 정책의 방향을 이끌고 가야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교육·복지의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하여 인천시민들과 학생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사업운영을 위한 협의회가 아닌 거버넌스로서 인천광역시 교육·복지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행정·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6. 나가며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학생의 안전과 복지에 있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학습 결손을 막고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교육복지안전망을 처음으로 시도했으며, 교육복지사를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마침 교육부에서도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구축이라는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교육복지 확대 계획은 교육복지사라는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교육부의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는 법적체계를 마련하여 각 정책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부분을 서로 보완해주고 있다. 이를 통해 인천광역시교육청은 모든 학교에 학생성장지원팀을 구축하고 교육복지사를 배치함으로써 전국에서 유일하게 다른 선진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학교사회복지제도의 틀을 갖추 수 있게 될 것이다.

인천형 학생성장통합지원체계를 통해 사업이 아닌 사람이 우선인 교육복지정책이 실현되고, 위기 학생뿐 만 아니라 모든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성장하고 행복한 인천교육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토론 1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복지통합체계

최덕진 (백령초등학교 교장)

1. 교육복지통합체제를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이유

가. 학교교육 이전의 가정교육의 중요성

교육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가정의 안정과 가정교육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점점 증가하고 있는 영유아 유기 및 살인, 가정에서의 아동학대는 학교 교육까지 위태롭게 하는 것을 넘어서 국가·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사회와 가정에서의 문제가 학교에 전가되어 오면서 최근 안타까운 서울 s초등학교 교사의 안타까운 사안까지 발생한 것이라 본다.

사회의 가장 기초인 가정이 붕괴되니 학교도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다시 가정과 학교에 악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나. 한국전쟁 이후 인구변화

한반도는 1950년 비극의 한국전쟁을 겪었다. 한국전쟁 전후에는 지금보다 아동 유기 및 사망, 아동 학대나 방임 수준이 더 심했을 것이다. 아이러니하게 한국전쟁 이후 출생률이 급증해서 “아들 딸 구분말고, 하나 낳아 잘 기르자.”할 정도로 출산억제 정책을 펼치던 시절도 있었다.

앞서 최웅 교수가 발제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출산률의 저하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취학 학생수의 급속한 감소, 양성할 인재의 고갈, 노동인구의 부족, 경제성장의 저하, 사회적 분단과 불평등 심화 등 이로 인한 사회복지 부담의 증가 등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지금보다 훨씬 낙후된 복지정책, 인구정책, 교육환경에도 불구하고 출생률은 지금보다 훨씬 높았고, 학부모들의 자식 교육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에 우리나라는 외국의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가난한 나라를 원조하는 나라까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다.

다. 급속한 경제성장의 후유증

눈부신 경제성장 이면에는 물질만능주의, 지나친 경쟁의식,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공동체성의 약화, 계층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한국전쟁 이후 열악한 경제, 낙후된 복지정책, 열악한 교육환경에도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사회적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 대해서 토론자는 공동체성의 붕괴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 농업국가에서 급격하게 산업화를 거쳐 지식정보화 사회로 전환해온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급성장 국가 중의 하나이다.

농업사회에서 경제성장 정책을 이끄는 산업화를 거치면서 사회 구조의 한 측면에서 분업이 발전하고, 분업은 생산을 증대하는 효과를 내었다. 분업은 작업의 세분화와 전문화에 따른 직업분화를 일으키고, 작업의 효율화와 경제성장에는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일구어내었다. 하지만 직업의 분화는 도시와 농촌의 분리로 이어지며 농촌사회의 문화였던 생명과 자연을 중시하며 노동력으로서의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성은 약해지기 시작했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사회변화와 함께 우리 사회는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그리고 지식정보화 사회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그동안 전통사회에서 유지되었던 공동체성을 그 사회의 변화에 맞게 함께 변화하여 현대적으로 발전시켜야 했다.

토론자는 분업이나 경제성장의 부정적 측면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분업은 어려운 일을 나누어 함께 해결하여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긍정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발명한 인간의 행위일 것이다. 분업 자체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분업체계가 비합리적으로 형성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업체계가 비합리적으로 형성되면 사회적 불평등 및 지배관계 형성, 기술적·지역적 자원배분의 불균형 등 오히려 비합리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 분업체계는 현실적 사회과정에서 분업이 이른바 자아분열, 분절화 등의 상태로 변질되도록 하는 계기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것은 곧바로 통합의 문제를 제기한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철저히 분업화 되어 있다.

라. 코로나로 드러난 분업체제의 한계

토론자가 주장하는 분업의 비합리적 측면을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있었던 아동 방임이나 학대에 의한 안타까운 사망 사건을 안타깝지만 되짚어 보고자 한다.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고 급식이 중단되자 보호자 방임으로 8세 여아가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인천시의 어느 도시에 살던 A(8)양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학교에 제대로 등교하지 않았다. A양의 오빠 B(9)군도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결석했다. 이들 남매가 장기간 학교에 나오지 않자 담임교사는 가정방문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부모의 거부로 가정방문이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았다.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결석할 경우 경찰에 수사 협조를 구할 수 있지만 A양 남매는 체험학습과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기에 뚜렷한 정황을 인지하기 어려웠다.

교육청 관계자는 “A양이 병을 앓고 있어 학교 담임교사도 신경을 더 쓰고 있어 가정에 방문하려고 했으나 미인정 장기 결석 학생이 아니기에 일방적으로 찾아갈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구청 또한 2019년 A양 부모가 운서동으로 전입한 후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적 없고 별도의 사례관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호자의 보호 아래 코로나 감염을 우려해 가정에서 지내는 것으로 파악했다.

지역 주민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가까이 사는 A양이 숨진 것을 두고 “마음이 찢어진다”며 애도를 표했지만, 그동안 아무도 A양 남매가 위기에 처한 상황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지역주민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영종에 지역아동센터가 없고 돌봄 기능이 취약한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희망했다.

구청에서는 보호시설에 있는 A양 오빠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관리를 진행할 것”이라며 “향후 어떻게 아동을 보호하고 관리할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방안을 찾는 중”이라고 했다.¹⁾

2021년 인천 중구의 8세 여아의 사망 사건의 경우 학교는 학교대로 코로나 19 방역수칙과 결석 학생 관리 지침에 따라 학교의 역할을 했다. 구청과 행정복지센터도 매뉴얼과 기준에 따라 취약계층 가정을 파악하고 관리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이 있었고, 안타깝게 8세 여아는 보호자의 방임과 지역공동체의 사각지대에 놓여 사망했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학교는 학생이 장기간 등교하지 않거나 학교생활에 부적응 행동이 보이면 학생을 관찰하고 학생과 상담을 한다. 이때 가정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되면 보호자 상담을 한다. 가벼운 학교 부적응은 이 정도의 단계에서 해결된다.

하지만 결손가정, 다문화 가정, 장애학생 가정, 경제적으로 취약한 교육급여 대상 학생의 경우 학교의 학생 상담이나 학부모 상담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청이나 교육복지안전망 센터에 도움을 요청한다.

이때 학습부진에 대한 지원이나 심리·정서 지원은 학교나 교육청에서 가능하나 방학기간의 결석지원, 신체적 질병이나 정신적 질환에 대한 건강 증진, 보호자 교육, 방역 및 보건·위생 지원, 보호자의 사건 사고에 따른 위기 가정에 대한 긴급 생활 지원 등은 지방자치단체, 관련 병원, 119센터, 복지관, 청소년지원센터, 지역돌봄센터 등의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할 정도의 가정은 어디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취약한 가정이 대부분이다.

관계 기관이 인천의 8세 여아의 사망 사건 발생 전 아동방임 정황을 알아채지 못한 점과 돌봄 공백을 문제 삼으며 예방 시스템 마련을 요구가 있었지만, 이런 유사 사건이 코로나 펜데믹 이후에도 지금도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마. 교육복지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의 연대화 협력

노무현 정부 이후 교육복지정책의 양적 확대와 교육복지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다. 특히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한 학습결손과 사회성 결손의 누적은 교육격차를 더욱 벌어지게 하고 있다.

코로나 펜데믹은 교육과 복지는 함께 가야 하고 관련 기관이 서로 소통하고 연대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기간이었지만, 교육복지의 분절적인 접근은 그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학생의 경우 하루의 반은 가정에서 나머지 반은 학교에서 생활한다. 학교에서는 양질의 급식제공, 정규교육과정, 방과후활동, 돌봄활동을 지원하지만 학교 후에는 가정이나 지역에 머무른다. 학교는 방학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방학기간에는 학교보다는 가정이나 지역에 머무르는 시간이 더 많다. 학교에서 기초학력 회복지원, 심리·정

1) 인천일보(<https://www.incheonilbo.com>)

서 회복 지원 등의 사업에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지만 가정이나 지역에서 머무르는 시간을 위한 지원이 병행되지 않으면 반쪽짜리 교육복지가 된다.

취약계층의 파악과 경제적·행정적 지원은 시·군·구의 지방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맡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의 일부인 교육복지는 학교에서 기초학력 회복지원, 심리·정서 회복 지원, 돌봄활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교육복지는 그 특성상 학교에서만 또는 지역에서만 해서는 안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여 통합적으로 접근해야만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다.

그러나 교육복지의 통합을 누가 주도하느냐가 관건이다. 어느 기관이 나서면 함께 하겠다고는 하지만 통합의 주체가 되기는 꺼려한다.

2.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교육복지통합체제 구축 시도

가. 교육복지안전망 센터 구축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0년 9월 14일 오전 11시 10분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의 한 빌라에서 결식 아동이었던 당시 10세였던 형 A군과 당시 8세였던 동생 B군이 형 A군의 불장난으로 불이 나 형제 모두 전신에 화상을 입었고 동생은 끝내 사망한 사건이 일어나자 교육감과 간부공무원이 모여 원인분석과 대책회의를 한 뒤 교육부에 전담부서 신설을 요청했다. 그것이 현재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교육복지안전망센터이다. 교육복지안전망센터는 코로나 펜데믹을 거치면서 모든 시도교육청에 설치되었다.

나. 온 마을이 돌보는 교육복지안전망 시범 사업

교육복지안전망센터를 신설하면서 센터의 역할 정립을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에서는 온 마을이 돌보는 교육안전망이라는 인천형 교육복지통합모형을 시범적으로 시도하였다.

1) 온 마을이 돌보는 교육복지안전망 시범사업의 목적

- 사각지대 위기학생 발견 체제 구축 및 지원기관 연계를 통한 학생 지원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마을 협의체 참여를 통한 교육안전 네트워크 구축
- 안전망 구축 과정에서 긴박하게 필요한 사항에 대한 한시적 지원(시범학교 운영)

2) 온 마을이 돌보는 교육복지안전망 시범사업의 방향

- 학생 안전, 생활, 학습 등 종합적 교육안전망 구축을 위한 적극행정 도모
- 학교, 마을, 지자체, 교육지원청 내 교육복지안전망센터 등 유관기관 간 협업
- 교육안전망 시범운영교를 통한 지원사례 발굴 및 실질적 지원 사례 공유

3) 시범 사업 추진 경과

시기	추진 내용	비고
2021.2.4.	온 마을이 교육안전망 사업 제안을 위한 간담회 개최	인천시의원, 국회의원보좌관, 동구 관내 학교장, 마을교육지원단장, 정책기획과장, 장학사 총 11명
2021.3.25.	인천광역시청 균형발전부시장 간담회	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팀장, 교육협력관, 정책기획 담당 장학사 등 총 5명
2021.3.26.	온돌안전망T/F 발족 및 제1차 정기회의	위원장 남부교육장 외 71명
2021.4.5.	온돌안전망T/F 정책기획단 및 상임위원, 교육복지사 간담회	인천창영초등학교 교장 외 12명
2021.4.12.	정책연구두레 정책제안(초등)	인천연안초등학교 교장 외 16명
2021.4.23.	정책연구두레 정책제안(중등)	인천고등학교 교장 외 10명
2021.4.30.	인천시의회-인천시교육청 공동 토론회	
2021.5.1.~ 2021.5.17	남부교육지원청, 동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강화교육지원청, 북부교육지원청 찾아가는 온돌안전망 정책설명회	교육장, 국장, 과장, 장학사 40명
2021.6.10.	온마을이 돌보는 교육안전망 적극행정을 위한 감사관 검토 의뢰	담당 장학관, 장학사, 감사관
2021.6.25.	온마을이 돌보는 교육안전망 온라인 현장 설명회	인천시 관내 희망 학교
2021.6.29.	온마을이 돌보는 교육안전망 본회의 통과	3억 6천만원
2021.7.23.	온마을이 돌보는 교육안전망 기본계획 시행	인천시 관내 유, 초, 중, 고등학교 대상
2021.7.23.~ 2022.2.28	온마을이 돌보는 교육안전망 시범학교 운영	희망학교당 최대 2천만원 지원
2021.10.23.	온마을이 돌보는 교육안전망 사업을 학교기본운영비에 반영	급식, 안전, 교통, 건강, 돌봄, 복지, 심리, 정서, 관계, 방역, 보건, 위생, 시설, 학습, 생계, 주거, 피복, 생활, 보편적 대응지원 등 제반 교육안전망 관련 사항 및 그 외 예상치 못한 지원 사항
2021.11.15	온마을이 돌보는 교육안전망 사업 운영사례 나눔	인천송의초, 대화초, 도화초, 용일초, 용현초, 주안북초, 선인중, 선화여중, 인주중, 인천남중, 인하사대부중, 인화여중, 미추홀구청,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남동구야동복지종합센터, 미추홀정신건강복지센터, 다문화가족센터,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청소년수련관, 인천사랑병원, 송의종합사회복지관 등

3) 시범 사업 운영 내용

영역	사업내용	세부 운영 사항(예시)
급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식학생 지원 - 관련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연계 결식 학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말 및 방학 교실, 결식 학생 지원 등 돌봄 보호 프로그램 • 지자체 또는 민간기관 연계 프로그램(예: 공유가게, 공유냉장고[(가칭)온돌 냉장고, 모두의 냉장고 등]) • 지역사회 연계 등 다양한 방식의 결식 학생 지원 방안 마련(예: 배송, 편의점 연계 등)
안전 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운전자 시인성 강화 - 등하굣길 보차도 개선 - 응급처치/안전 관련 교육 - 학교안팎 안전표시물 - 자전거 안전 장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연계 안전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내 자전거 면허시험 • 마을 안전지도 제작 • 학부모와 함께하는 우리마을 안전 확보 프로그램 [‘(가칭)위기탈출 넘버원’] •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캠페인 등 • 운전자와 보행자의 ‘입장바뀔 생각하기’ 프로그램 • 안전지킴이 운영 • 응급처치 / 심폐소생술 교육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상/질환 등에 따른 치료 - 건강 증진 관련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 상황 치료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비, 약제비 등 관련 사항(안전공제회 또는 보험, 유관기관 등 관련 지원이 가능한 경우는 지원 불가. 단, 그외 추가비용 발생 시 지원 가능) - 건강 증진 교내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학교 온마을 댄스 체조 운영
돌봄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학생 직접지원(사례관리) -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를 복지 서비스와 연계한 종합지원 - 지역기관 연계 사례맞춤지원사업 운영 - 개별상담, 부모(가족)상담, 가족참여 프로그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 사례관리를 통한 종합적 복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일반/단시간/긴급), 문화체험, 교내 상담, 청소년센터, wee 클래스, 프로그램 연계 등 • 복합적 문제의 학교 부적응 학생, 보호자의 부재(급작스러운 보호자 사망 등), 기타 위기 상황 등의 학생(들) 보호 및 지역 자원 연계 등
심리 정서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정서·관계 검사 - 심리·정서·관계 프로그램 - 상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정서·관계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이음 프로그램(사제, 또래, 가족, 이웃), 상담(집단/개별), 부적응 등 예방 프로그램
방역 보건 위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 방역, 보건, 위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역, 보건, 위생 사각지대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식실 가림막, 손소독제, 마스크, 발열체크기 등 필요물품 지원(단, 기존 지원 사항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

영역	사업내용	세부 운영 사항(예시)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시설 긴급 보수 - 비상벨 등 위험신호기 또는 안전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 시설에 대한 즉각 처리 및 안전장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해 우려가 있는 시설물에 대한 신속 보수 및 안전장치 마련 (단, 기존 시설예산이 확보되어 있을 경우 해당 예산으로 추진)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문화 체험, 심리 정서, 복지 프로그램 지원 -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육복지 프로그램 운영 - 학교 간, 지역기관과의 협력사업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동기부여 및 기초학습지도 • 1:1 학습지원 멘토링, 독서지도 등 - 문화·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적 체험활동, 학생 동아리, 학생봉사단, 진로 탐색 및 체험 등 - 지역 단위 연계 협력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간 공동사업 • 민관학 공동사업 • 지역사회기관(단체)와의 협력사업 등
생계 주거* 피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한 생활 필요 요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관리 등을 통한 사각지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기관 연계를 통한 지속지원(지속지원 체계 가동 전 한시적 지원 필요시 지원) - 대상학생 발굴·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지원학생 파악 • 학생 정보 수집, 분석, 지원 계획 수립 • 교내·외 서비스 연계 지원, 모니터링 • 가정방문, 상담, 통합사례회의 등
보편적 대응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복지 체계 보완 또는 대응 지원 - 보편적 복지 차원의 관련 지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복지에 대한 대응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졸업앨범비, 수학여행비 비용 등이 기존 지원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그외 긴급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예측이 불가능한 긴급 지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의 중증질환 및 사망 등 학생 긴급 지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 사항 지원(단, 기관 등 관련 지원이 신속하게 가능한 경우는 지원 불가. 단, 관련 지원이 신속하지 못하거나 그외 필수불가결한 비용 발생 시 지원 가능)

4) 시범 사업 운영 형태

구분	영역		운영 형태
단순 참여	마을 중심 모델	지자체 회의 참여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학교장 또는 학교구성원이 참여하는 방식
		마을협의체 참여	- 마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학생안전망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경우 등 기존에 구축된 마을 협의체에 학교장 또는 학교구성원이 참여
복합 구축	학교중심모델		- 위기학생이 많은 경우, 마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학생안전망이 미비하거나 활발하지 못하여 학교가 주도하여 마을 내 교육안전망 협의체 구축
	학교간 협업모델		- 여러 학교가 밀집된 경우, 학교간 협의체 구축을 통해 학생 관련 사항을 교류, 공유하며 위기 학생 발견 등 교육안전망 구축
	학교-마을 병행모델		-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가 조직된 곳 - 민·관·학 거버넌스가 활성화된 곳
	기타 새로운 모델		- 소규모 학교의 경우 인근 학교와 연대하고 협업하여 학교 간 네트워크를 조직한 후 마을단체와 협업하는 경우 등 새롭게 창의적인 운영 모델

5) 시범 사업 추진 성과와 변화

가) 즉각적 위기 개입

교육안전망 사업으로 즉각적 위기 개입 가능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었음.

A가정은 한부모 가정으로“코로나 확진”에 자가격리를 하게 됨. 해당 가정에는 여분의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었음. 울며 구청 및 복지관에 전화했으나 즉각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음. 사례관리 협약이 맺어진 송의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학부모가 전화를 하여 문의하였고 학부모의 동의를 받은 후 학교로 의뢰가 들어왔음. 복지사가 다음 날 핫반 및 식품류를 제공함. 불안감이매우 높았으며 우울감이 보여 SMS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모와 상담함으로써 모의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아동의 결식 우려가 즉각적으로 해결될 수 있었음.

나) 교육복지 대상학생 확대

교육복지 대상 학생, 담임교사가 추천한 사각지대 학생들에게도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위기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하여 학생의 위기에 대처했음. B학생은 교육복지 법정대상은 아니지만 부모, 자녀의 건강상의 이유로 경제적 위기가 있는 가정으로, 담임교사가 학기 중 추천을 해주었던 학생임. 겨울이 왔는데(영하-1°) 학생이 반바지를 입고 등교함. 담임교사로부터 옷을 사줄 수 있는 자원이 없는지 문의가 옴. 다음 날 옷을 샀으며 학생이 반바지를 입고 등교하지 않고 따뜻한 옷을 입고 등교함. 또한 위 가정에는 학교 자체 예산으로 장보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학생이 식, 주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함.

다) 지역사회기관과 연계 결속력이 강화

지역사회기관에서 해당 학교 학생을 관리하고 있어도 개인정보 보호로 공유를 못하는 경우가 있었음. 이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따름. 장보기 및 피복지원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기관 대상 추천을 안내함. 기관에서 사례관리 하고 있는 가정 추천을 받으면서 학부모 동의하에 해당 가정에 대한 상황을 더 면밀하게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됨.

라) 가정방문 횟수의 증가

교육안전망 시범교를 운영함으로써 가정방문의 횟수가 크게 증가 되고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고, 학부모와 긴밀한 라포형성을 할 수 있었음. C가정은 담임교사 추천 복지대상 가정으로 학교와 연락이 잘 되지 않고 위기 상황(코로나 등)에도 전혀 협조가 되지 않는 가정임. 그러나 교육안전망 사업을 통하여 교육복지사와 라포형성을 하였고, 교육복지사와의 연락이 긴밀하게 되는 긍정적 변화가 일어남.

마) 기초학력 능력 증진 및 방학 기간 돌봄 기회 확대

겨울방학 기간 2주 동안 4그룹으로(0-0학년 2그룹) 나누어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2주간 방학 기간 학생 관찰 및 영어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수업 진행하여 기초학력 및 돌봄을 강화할 수 있었음.

바) 교육복지 대상 가정의 긍정적인 변화

교육안전망 사업을 통하여 가정의 긍정적 잠재력을 일깨우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음. D가정은 첫째 아이의 자해 행동으로 의뢰가 들어온 가정임. 또한 “매일 같은 옷”을 입고 다녀 학교에 서 면밀한 관찰,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가정이었음.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되어 관리하기 시작하였으며, 학부모의 노력과 학교의 지속적 관심으로(상담사 및 특수학급 교사 지속적 상담, 심리검사, 담임교사의 관심) 자해 행동은 소거되었으나, 모가 자녀보다는 본인에게 관심이 많았으며 자녀의 회복에 전혀 관심이 없었음. 심리 검사 결과지에도 옷이 특이하다고 적혀있는 학생이었으나 지속적인 관리, 지원(타자원과 병행함)으로 자녀들의 회복에 관심을 갖기 시작함. 지원대상 학생들이 단정하게 옷을 입고 등교를 지속적으로 하여 물어보니 “당근마켓을 이용하여 옷을 구입도 하고 학교에서 지원해 준 옷도 입기도 한다” 하며 고마움을 표현했음. 한부모가정으로 모가 생계를 이끌어가고 있으나, 자활을 통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정이었으나, 회복에 대한 관심, 아이에 대한 긍정적 관심(자해행동제거됨), 학부모로서 책임감을 보이려는 변화를 이끌어 냄.

사) 다양한 지역사회기관 발굴, 연계, 자원 제공자로서의 역할 수행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안전망 사업을 진행

3. 교육복지통합체제 구축의 저해 요인과 극복 방안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사업 내용이 다양한 부서와 협업을 하는 상황에서 부서가 우리 부서가 아니길 바라고 있었으며, 일부학교에서는 새롭게 신설된 업무에 대한 부담감 호소, 함께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음.

토론 2

성장하는 학생, 성장하는 교직원, 사례를 통한 학생성장통합지원의 발전 방향

박병춘 (인천송의초등학교장)

사례1.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네트워크 구축 강화의 제도적 기반 마련

2023년 5월, 학생 김00이 등교하지 않았다. 김00 학생은 평소 학교에서 사례관리를 꾸준히 하던 학생으로 가정환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걱정이 앞섰다. 학부모는 전화도 받지 않아 학생과 연락할 방법을 강구 하였으나, 연락을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당일 오전 10시 담임교사와 연락이 닿아 학부모의 가정에 위기가 있었음을 전해 들었다.

우리 학교는 교장, 교감, 담임교사, 담당부장, 보건교사, 교육복지사, 상담사가 등 위기에 따라 팀으로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으므로 학생이 안정적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재빠르게 대응하였다.

어머니의 우울증으로 지속적으로 사례관리 하던 학생이었으므로 학교-가정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형성되어 즉각적 개입이 가능하였고 가정의 위기로부터 3개월이 지난 지금은 학부모가 극복하고 있으며 나아가 사회 적응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긍정적인 결과에 학교는 학부모를 결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지적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위 사례를 통하여 알게 된 어려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관·학교가 통합, 연계 관련 제도적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현 시스템은 지역 사회와 학교가 정보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학생, 학부모의 상담을 통하여 환경을 파악하는 것이 전부이다. 학생의 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 민간, 관공서에 상담을 요청하여 가정상황을 파악하고자 하지만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학교에 공개하는 정보의 양은 적다. 그렇기에 중복지원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조기개입, 결핍을 지원하는 모델에서 성장을 지원하는 모델로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위기를 가진 학생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기관이 기존 관리 학생들의 정보를 공유하여 통합적인 관점으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민·관·학이 연계, 통합, 협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생성장통합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제정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법령 제정 시 학생들에 대한 지원내용, 범위,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명확히 표기하여 안정적이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하여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기존에 있는 교육복지사업을 재구조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학교 교직원들이 기존 교육복지사업과 상호 보완관계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법률 체계 속에서 학생성장통합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사례 2. 사업이 아닌 보편적인 학교 시스템 구축

2023년 6월, 학생 이00의 얼굴에 상처가 있었다. 담임교사는 즉각적으로 학생과 상담하였고, 상담을 통하여 아동학대를 인지하고 즉각적으로 신고하였다.

담임교사는 경찰, 담당부장, 교감, 교장, 교육복지사, 상담사와 협의하였다. 하지만 담임교사 혼자 한 명 한 명을 개별로 만나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담임교사가 위기 학생을 발견하게 되면, 오롯이 그 학생의 위기에 대처해야 하는 현 실정이 매우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한 위기 발견 후 어떻게 문제해결을 유연하게 하기에 담임교사에게는 어려운 일이었다.

우리 학교는 공사로 인하여 여름 방학이 60일로 학생 방학 중 안전 및 결식 예방을 위하여 가정환경 파악하고, 교장, 교감, 교육복지사, 담임교사가 협의하여 방학 중 위기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방학 및 기초학력증진을 위한 가정방문을 2회 실시, 지역아동센터 연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방학 중 프로그램 참여시켜 6주간 학생 직접 모니터링, 학생의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한글쑥쑥교실참여, 피복 지원, 반찬 지원 등을 지원, 연계하여 위 학생에게 지역사회-학교 의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였다.

한 학생은 학교 부적응 문제로 등교 거부로 이어진 상황이다. 등교 거부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담임교사, 상담사, 교육복지사,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사가 협력하여 가정방문을 진행하였다. 학생의 심리적 위축, 어머니의 건강상의 문제 등 다양한 환경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학생과 부모의 등교 전쟁으로 학부모가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동의하에 상담사, 복지사가 아침마다 가정으로 방문하여 학생을 등교시키기 시작하였다. 이후 학생은 자발적으로 오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자발적인 등교까지 이루어졌다.

위기 원인을 제거하고자 한다면, 학생을 둘러싼 환경을 파악하는 것은 필수일 것이다. 어려움이 있는 학생의 가정환경을 파악하기 위해서 1차로 담임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많은 학부모님들은 담임교사에게 자신이 현재 처한 상황을 말하기를 어려워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에, 우리 학교는 위기 학생 발생 시 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학생 환경파악이 어려운 경우, 교육복지사가 가정방문, 상담을 통하여 파악을 할 때가 있다.

위기에 놓인 학생들은 점차 증가하고 복잡해진 학생의 어려움에 학교는 다양하고 빠르게 대응하여야 한다. 사업이 아닌 보편적인 학교 시스템으로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어야 한다.

인천시에는 우리 학교처럼 한 학교를 전담하는 교육복지사가 배치된 곳도 있지만 2개 학교를 전담하는 거점-순회 교육복지사가 있는 곳도 있다. 거점-순회의 경우 학생의 위기에 즉각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학생상담, 학부모 상담에도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위기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통계를 보면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교육격차 및 기초학력부진의 양극화는 커진다. 교육복지사를 확대 배치하여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과 통합사례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사례 3. 예방과 발견을 통한 조기 개입 강화

2023 4월, 1학년 학급 교실에 학생이 교실에서 부적응하여 힘들어하였다. 교실 밖으로 뛰쳐나가고 운동장에 서 놀고자 했으며 교사의 지시에 불이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학급에는 느린학습자, 특수학급학생, ADHD 등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많았다.

교장, 교감, 담임교사, 교육복지사, 상담사 등 학생이 도움이 필요할 땐, 언제든지 돕는 시스템으로 운영하여 학생이 교실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교사와 협의하여 다양한 인력들이 학생들의 상황에 맞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학급이 운영되었다. 부적응으로 겪고 있던 학생은 적응하여 교실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느린학습자는 학습 프로그램으로 연계했고, ADHD를 가진 학생은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였다.

위 사례를 통하여 개선되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급당 학생 수가 적어져야 한다.

학급당 25명 이상이 함께하는 현 교실은 학생의 환경의 어려움을 발견해내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은 경우 해결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한명 한명의 결대로 학생들이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선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 학급당 학생 수가 줄었을 경우 위기를 빠르게 발견할 수 있고, 해결 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전환되어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다.

둘째, 참여적 인식개선과 함께 기존 교육복지사업들과 상호보완적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우리 학교는 학급 환경 및 학생 파악을 위해 교장이 직접 모든 학급 수업을 하고, 교직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복지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작년부터 진행해 왔다. 교직원 복지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사의 경우 교육복지프로그램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긍정적 결과로 이어졌다.

이처럼 학교 구성원이 학생, 교직원을 돌본다는 인식을 가질 경우, 발견하고, 연계하고 연대하는 것에 보다 적극적으로 변할 것이다.

또한 우리 학교의 교육복지사업은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상담지원, 다문화 학생 지원, 기초학력 향상지원, 특수교육지원, 돌봄교실, 두드림학교, 놀품꿈터, 영어캠프 등 교육 불평등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교육복지사업과 학생성장통합지원이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학생성장, 발달을 촉진해야 한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한마디로 이해해보자면 ‘한 아이를 키우려면 학교 구성원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 현재 학교에서 하는 교육복지사업들이 상호보완적으로 재구조화하고 관리자가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의사결정권을 공유하는 리더십을 발휘하여 모든 교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질 수 있었다.

학교에 체계가 만들어지고,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정착하여 학교, 교육청 구성원 모두가 학생 한 명, 한 명의 결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

토론 3

인천광역시의 교육복지정책의 한계와 협력적 거버넌스 구현 요구

마경남 (인천도시경영연구원 부평센터장)

앞서 최웅선생님의 발제를 잘 들었습니다. 제안하신 것처럼 본 토론자도 대한민국의 ‘학생 수도 급격히 줄어 들고 정부에서 교육복지정책으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교육 현장에서 학업성취 및 학교 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은 반대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이 부분에 대해 깊은 공감과 함께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이러한 문제는 인천시 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 더 해결방안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고민과 방법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움을 바탕으로 인천광역시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토론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발제를 통해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이 ‘2023년 5월 31일에는 학생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국회에서 발의되었고,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구축을 위한 선도학교, 시범교육청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알게 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교육복지 확대 계획은 교육복지사라는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교육부의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는 법적체계를 마련하여 각 정책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부분을 서로 보완해주고 있다’ 들었고 이를 통해 ‘인천광역시교육청은 모든 학교에 학생성장지원팀을 구축하고 교육복지사를 배치함으로써 전국에서 유일하게 다른 선진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학교사회복지제도의 틀을 갖추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도 공감했습니다.

그러나 본 토론자도 현장에서 민원을 대해 봤을 때 ‘해결방안을 만들기가 혼란스럽다’라 느낀 경험을 해 봤습니다. 부평구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통해 교육복지 부분을 검토한 경험이 있는데, 관련기관과 ‘협력적 거버넌스’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느껴졌습니다. 사안마다 ‘담당’이 다르고 ‘주체’가 달라서 ‘주어진 업무만 해결한다’라는 태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제자가 말씀하신 ‘**학생성장통합지원**을 위한 교육·복지조례 제정’이 시급히 필요한 이유라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교육복지정책들은 각기 법령 또는 조례를 통해 운영되고 있고, 학생성장통합지원체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간, 지역사회와 학교 건 통합·연계와 관련된 법적인 근거가 없다’라는 말을 하며 ‘협력적 거버넌스’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여겨집니다. 인천지역 학생들을 위한 ‘**학생성장통합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안정적인 법률 체계 속에서 학생성장통합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천시교육청의 사례처럼 ‘사업별로 진행했다’라는 나열식이 아니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육 주체들과 지속적인 숙의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정책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법안이 마련되고 지속적으로 다뤄져야 하는 것은 ‘**협력적 거버넌스의 실현**’입니다. 본 토론자도 가장 공감하고 시급한 것은 ‘인천광역시 학생들에 대한 지원내용과 범위, 연계·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민·

관·학, 그리고 관련 당사자들이 함께 논의하며 정책의 방향을 이끌고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교육·복지의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하여 인천시민들과 학생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사업 운영을 위한 협의회가 아닌 거버넌스로서 인천광역시 교육·복지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행정·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장에서의 요구를 파악하지 못하는 설계자들의 정책! 그것은 괴리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괴리감 속에 실현되는 교육정책은 불통의 정책으로 표출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인천형 **‘협력적 거버넌스’**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만들고 실현시키면서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지속적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은 진정 인천의 학생들을 위한 귀한 노력이 될 것입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 – 2023년 현재 우리들의 고민과 의견들을 경청해 주시고 실무자들은 더욱더 공감하여 정책으로 반영해 주시길 바래 봅니다.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
제2회 2030인천미래교육 콘퍼런스

세션
②

평생교육분과

- 발제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사무처장 **최정학**
- 토론 1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진학직업교육과 장학관 **이덕한**
- 토론 2 대안교육연대 정책국장 **박민형**
- 토론 3 인천대안교육기관협의회 회장 **전경아**



발제 **전생애 평생학습 실현을 위한 상호협력체계 구성 방향** **생명력 넘치는 지역평생학습생태계를 위하여** (학습력과 학습관계가 역동하는 ‘서로배움사회’를 기대하며)

최정학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사무처장)

1. 인생은 학습의 과정, 우리는 모두 평생학습자

인간은 학습하는 존재입니다. ‘호모 에루디티오(homo eurditio)’. 어디에 있든지 배우고 익힙니다. 학교 안에 서도 배우고, 학교 밖에서도 배웁니다. 교사가 있어도 배우고, 선생님이 없어도 배웁니다. 나쁜 것도 배우고, 좋은 것도 배우지요. 배우지 말라고 해도 배웁니다. 어려서도 배우고, 직장에서도 배우고, 가정에서도 배우고, 나이가 들어도 배우고...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학습은 살아있는 자에게만 일어납니다. 생명이 붙어 있으면 배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죽은 자에게는 학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인간에게는 학습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생학습의 과정이고 현장입니다. 사람들은 전 생애와 삶을 통하여 스스로 자기의 학습을 구성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학습자’입니다.

학습은 ‘소통’입니다. 학습은 ‘세계와 나와의 소통’이며 ‘관계맺기’입니다. 사회는 수많은 학습의 주체들이 서로 소통하며 관계 맺는 마당입니다. 누구와 어떻게 관계 맺고 소통하느냐에 따라 열매가 달라지게 됩니다. 좋은 사람, 좋은 생각과 소통하고 관계 맺으면 좋은 사람이 됩니다. 나쁜 생각, 잘못된 정보, 이기적 관점들과 자꾸 관계 맺으면, 걱정되는 길로 빠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좋은 생각과 소통하고, 바른 관계 맺기를 지향하는 것이 ‘좋은 학습’이고, ‘바른 학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건강한 학습생태계의 기초, 건강한 소통이 살아있는 ‘서로배움사회’

‘바른 소통’은 ‘바른 학습’이며 ‘바른 관계’입니다. 학습주체들이 바른 관계와 소통으로 충만하고, 활기차게 연결되어 상호작용하고 있다면, 그 학습생태계는 건강한 것입니다. 가정, 이웃, 친구, 직장, 지역사회에서 국가공동체에 이르기까지, 그 구성원들의 소통과 관계 수준이 평생학습생태계의 건강성을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지식과 정보의 총량보다 더 중요한 것이 ‘소통과 관계의 수준’입니다.

바른 ‘관계 맺기’와 ‘소통 증진’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배움의 정신’입니다. ‘배움의 정신’은 이해하고 수용하고 공감하며 존중하는 ‘사랑의 정신’이며, ‘상호주의적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랑과 관용을 증진시키는 노력이 절대 필요합니다. 소통이 일어나고 관계 맺기가 진행되는 모든 현장에 상호존중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학습의 현장이고, 학습생태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호존중의 ‘배움의 정신’은 건강한 학습생태계의 필수적 요소입니다.

상호주의적 관심과 사랑은 서로를 잘 알게 만들고, 아는 만큼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대상을 사랑하게 만들면 그 대상에 대한 최고의 학습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에 기반한 배움의 정신은 최고의 ‘학습력’을 선물합니다. 또한 최상의 ‘학습관계’를 제공해 줍니다. ‘사랑의 학습법’은 학습력이라는 씨앗과 학습관계라는 토양이 잘 조화된 아름답고 풍성하고 건강한 학습생태계를 이루도록 돕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은 무엇일까요? 관계하는 법 아닐까요? 좋은 남편이 되는 법, 좋은 아내가 되는 법,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엄마가 되는 법... 이런 것들 아닐까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디서 가르치나요? 건강한 가정, 건강한 이웃, 건강한 지역 등이 구성되어 있다면, 이러한 건강한 평생학습생태계 안에서 상호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학습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건강한 평생학습생태계는 상호주의적 소통이 활발한 ‘서로배움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다양한 생애주기별 평생학습의 현장을 돌보는 것이 평생교육

우리의 전 생애는 평생학습의 과정이고 현장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의 학습은 멈추지 않습니다. 환경의 영향을 끊임없이 받으면서 우리는 스스로 자기의 학습을 구성해가는 평생학습자입니다. 모두의 삶, 즉 모두의 평생학습에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 교육입니다.

교육은 학습을 돕는 목적의식적인 활동입니다. 일정한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짜고, 그에 필요한 물적 자원과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여 진행하며, 그것을 평가하여 개선해 나가는 체계적인 노력과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학습생태계를 조성하고 배양하고 관리하고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이 좋은 교육입니다. 모든 국민들은 학습할 권리, 즉 학습권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교육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는 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공교육 위주의 교육시스템이 평생학습을 돕는 평생교육체제로 대전환을 이뤄야 하는 이유입니다.

요람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가정은 ‘진정한 학교’입니다. 학령기 이전의 유아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학교는 가정입니다.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에게도 유치원보다 더 중요한 곳은 가정입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도 학교 이상으로 중요한 곳이 가정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학교, ‘가정 학교’는 어디서 지원하며, 어떻게 돕고 있습니까? 가정학교의 교장인 부모들은 어디서 교육받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나요?

청소년들의 상황은 어떠한가요? 사춘기에 들어선 자녀들과 사춘기에 진입한 부모들이 서로 갈등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들과 부모들 모두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미리 준비할 수는 없었을까요? 학교를 그만두고 스스로의 삶을 선택하는 10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소위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는데, 이들을 응원하고 돕는 시스템은 정교하게 마련되어 있나요?

고등학교를 마치면 교육이 끝난 건가요? 대학이 목표였던 교육으로 성장한 청년들 중 좌표를 잃고 방황하는 경우는 정말 많습니다. 전 생애에 일어나는 삶의 문제에서 봉착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가는 실천적 지식과 인

격과 태도들을 구비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중에야 깨닫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청년들은 미래에 대해 불안합니다. 취업과 연애와 결혼 등 매우 중요한 삶의 과제들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따뜻한 멘토이자 코치들은 우리사회에 얼마나 준비되어 있습니까? 미래가 창창한 청년들이 좋은 가정을 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체계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과정과 지원시스템은 어디에 있나요?

중년과 장년과 노년 등 생애 전환이 요구되는 분들에게도 보다 많은 사회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이전에 배운 것들만 가지고는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들을 새 시대에 맞게 변환하거나 지속가능한 행복의 요건을 찾아 재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침착하게 보다 긴 호흡으로 대안들을 찾아야 합니다.

생애주기 별 평생교육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대상이 있습니다. 다음세대들에 대한 것입니다. 학령기의 어린이와 청소년들,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가정과 지역사회를 평생교육의 관점으로 살피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건강하고 분별력 있는 '자기주도적 평생학습자'로 키우기 위한 학교와 지역의 협력이 매우 필요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들은 어쩌면 '교실이 없는 시대'를 향해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학교 밖'과 '학교 안'을 구분하는 담을 헐어야 할 때입니다. 인생의 전 과정에서 바라보면 '학교 밖'은 진짜 학교이고, '학교 안'은 예비학교일 수 있습니다.

'학교 밖'에는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많은 민간전문가들과 실천 단위들이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유형의 대안교육 기관들과 일부 청소년 단체들은 인격과 지성이 조화된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많은 경험과 이론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기관들은 지역사회의 학령기 평생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인천 평생학습생태계의 유기화와 생명력 증진을 위한 제언

1) '평생학습생태계'와 '평생학습운동'에 대한 시민적 관심과 성찰 확산 필요

학습을 매개로 전 지역을 살아있는 학습생태계로 재구성하는 작업은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지역을 학습생태계로 이해하지 않으면 막대한 예산이 '선심성 행정, 전시 행정'으로 소모되면서, 주민들과 학습동아리들을 더욱 수동적 객체로 만들거나 관람객으로 전락시킬 수 있습니다.

가정, 직장, 마을, 학교, 사이버 등 삶의 모든 현장이 학습의 현장이자 플랫폼이라는 인식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개인과 동아리, 직장과 마을의 모든 학습 단위들, 지역의 단체와 기관들 모든 학습과 관련된 단위들을 학습의 주체로 보는 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크고 작은 단위들이 서로 생태계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평생학습 운동은 지역 전체를 살리고 양육하는 일입니다. 엄마가 아이들을 키우듯이 부모의 자상함으로 섬세하게 지역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이에게 균형 잡힌 식단과 적당한 운동, 아이의 특성에 맞는 맞춤식 양육이 필요한 것처럼 지역사회의 평생학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학습의 리더들은 지역 전체의 학습 단위들을 한몸의 여러 신체 기관으로 이해하고 이 운동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2) 지혜로운 머리, 튼튼한 심장의 필요성

평생학습생태계는 하나의 생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생학습생태계를 건강하게 조성하려면, 그 머리는 지혜롭고, 그 심장은 튼튼해야 합니다. 지역의 평생학습운동 전체를 움직여가기 위한 전략적 사고와 교육철학이 매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건강한 평생학습의 피가 바른 방향으로 활기차게 순환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의 구심점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구심점들의 평생학습진단능력, 연구능력, 기획력, 정책개발능력, 매개력, 조정력, 상담력, 네트워크 운영역량 등을 총체적으로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중요한 평생학습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머리이자 심장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만큼 인적 물질적 투자가 이뤄지고 활성화해야 합니다. 머리와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면 지역의 평생학습은 전체적으로 더욱 열정적으로 지혜롭게 돌아갈 것입니다.

현재 인천광역시 평생교육 전체를 고민하고 조율하는 정책적 중심에는 인천광역시와 시 출연기관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있습니다. 기초단체인 10개 군·구 중 8개의 지자체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있으며, 강화군과 옹진군은 평생학습도시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자체들은 대부분 직접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면서 지역의 평생학습을 관정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또한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8개의 교육청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시민들의 평생학습을 돕고 있습니다. 이 구심점들의 역량 강화를 기해합니다.

3) ‘정교하고도 강력한 협력장치’로 네트워크 기능 활성화!!

학습네트워킹을 통한 다자간 협력은 학습 주체들이 현상적으로 모여 있다가, 서로 명함과 연락처를 주고받았거나, 평생학습센터와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학습동아리와 기관들은 상호 협력도 가능하지만, 사실상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도 있고, 민·민의, 민·관의 갈등 관계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보다 정교한 ‘협력장치’가 필요하고, ‘네트워크 매개자’들의 ‘섬세하고 질 높은 활동’이 필요합니다. 학습생태계를 건강하게 조성하려면 우선 중간 구심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평생학습 단위들에 대한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평생학습의 네트워크는 세밀한 핏줄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들 각각의 단위가 학습단위로 거듭나도록 지원하고, 각각의 장점을 지역에 건강하게 기여하도록 돕는 일이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4) ‘살아있는 쌍방향, 다방향의 소통의 장’ 마련, 활발한 평가와 피드백을!!

정교한 ‘협력장치와 소통의 장’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부문별, 분야별로 세분화된 세미나와 워크숍 및 토론회 등이 협력장치로 마련될 수 있습니다. 동아리 신문이나 마을신문 등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활성화하여 묶어냄으로써 소통의 장치를 마련하고 소통능력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분야별 세분화 된 세미나와 워크숍 등을 통하여 평생학습운동 및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총론도 공유되어야 하며, 분야별 각론들이 적절한 타이밍에 제공될 수 있어야 네트워킹의 효율이 높아지고, 상호 신뢰와 협력이 증진됩니다. 중복되는 역할을 조정하고, 절대우위와 비교우위 등을 분석해 가면서 협력이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으

로 이루어지는 장을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분야별로 특화된 토론의 장 마련의 예를 들어봅니다. 독서진흥을 위해서는 ‘연수구 독서진흥 운동을 위한 토론회’, ‘독서지도 전문가들의 효과적 자원봉사를 위한 토론회’, ‘직장의 독서운동을 위한 정책토론회’ 등등으로 세분할 수 있겠습니다.

학습 주체들이 마을이나 지역에서 커뮤니티 활성화에 적극 나서도록 도우면서 쌍방향의 활발한 소통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소통의 플랫폼이 잘 마련되면 학습주체들은 자신의 활동을 기록하면서 역사를 써 나가게 됩니다. 또한 자신들의 학습활동을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통해 문화적 창달의 주체로 성장해 갈 것입니다.

학습주체들이 능동적으로 운영하는 소통수단이 상호 연결된다면 평생학습프로그램들과 각 기관들 및 동아리들의 활동에 대한 객관적 진단과 모니터링이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평생학습 뉴스플랫폼’ 등을 통한 소통의 활성화로 지역의 정체성과 특색은 더욱 발굴될 것이며, 평생학습의 피는 구석구석까지 돌게 될 것입니다.

5) ‘건강한 가정’을 평생학습생태계의 출발점으로!!

가정이야말로 평생학습운동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입니다. 가정의 학습기능이 회복되어야 지역의 학습운동이 보다 질적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가려는 철학이 모든 평생학습기관과 동아리들과 프로그램의 근저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트워크의 심장에서 만들어진 피가 가정까지 힘차게 도달하고, 그 피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역동적인 순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습력은 ‘행복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가정의 행복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예비 부부학교,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엄마학교’와 ‘아빠학교’ 및 ‘부부학교’, ‘자녀교육론’, ‘상담 및 치유교육’ 등이 활성화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가정이 독서교육과 체험활동을 돕는 다양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6) 직장을 살아있는 학교로!!

우리 몸의 다양한 장기들과 기관들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것처럼 지역의 평생학습 기관들과 동아리들이 가정과 직장과 지역사회를 아름답게 구성하고 상호 협력하게 하는 방향으로 기능해야 합니다.

지역사회 평생학습 관련 자원들은 대부분 비직장인들을 위해 쓰여져 왔습니다. 주부들이나 경력단절 학습자들, 은퇴한 중년이상의 학습자들이 주 수혜자들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일터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돌려야 합니다. 지역에서 책을 읽고 공부하는 기업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구멍가게 사장님들에게도 그들에게 필요한 학습을 제공해야 합니다. 은퇴를 한 사람들을 위한 교육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은퇴하기 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또한 기업에서 뼈를 묻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하우를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이 시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7) 마을을 학교로, 지역인문학으로 뿌리와 날개를!!

마을을 알면 알수록 마을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뿌리를 알면 알수록 비전이 살아납니다. 역사를 제대로 알면 역사를 창조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집니다. 지역의 스토리 개발과 활용은 지역주민들을 상상력이 풍부한 창의적 민주시민으로 변화하게 합니다.

지역인문학의 확산은 거리를 바꿉니다. 간판들을 변화시킵니다. 길이름에도 반영됩니다. 문화유산이 보존됩니다. 오래된 토착기업들이 존중받고 유명해집니다. 지역의 마을기업들을 일으킵니다. 지역의 도보관광과 체험학습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킵니다. 어른들과 다음세대가 가까워집니다. 다른 지역에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보기 위해, 먹기 위해, 체험하기 위해, 나아가 살기 위해. 새로운 일자리들이 만들어집니다.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합니다. 지역에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역동적이며, 생명력 있는 학습생태계로 거듭나게 합니다.

5. 마무리하며

학습력과 학습관계의 상호작용이 이뤄지도록 평생학습생태계를 구성하고, 배움주체들의 평생학습능력을 키워주는 일에 에너지를 모아야 합니다. 300만 평생학습자들의 배움터인 인천광역시를 역동적인 학습생태계로 가꿔나가야 합니다.

인천시민들이 행복을 담아내고 키워갈 수 있는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평생학습생태계!! 이것은 이제 인천광역시의 가장 중요한 비전이고 방향이며 정체성이어야 합니다. 300만 인천시민들의 행복과 인천의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생학습운동의 총체적 열매가 지역문화진흥이 되고, 지역문화진흥의 열매들이 새로운 학습자원이 되는 아름다운 순환의 과정을 기대합니다.

토론 1

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을 활용한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실현

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을 활용한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실현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진학직업교육과
장학관 이덕한

01

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

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 구축

진로검사, 진로체험, 진로·진학정보, 진로상담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전국 최초!
진로진학직업종합플랫폼입니다.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온라인** 진로 교육 및 진로 체험
- 진로검사-체험-정보제공-상담 **종합 플랫폼**
- **초·중·고** 연계 맞춤형 **이력 관리**
- 진로탄력성을 기르기 위한 **미래 직업 체험**
- 진로진학직업 정보제공을 넘어 학생 참여 **정보 생산**
- 메타버스 기반 **인천 온라인 교육 종합플랫폼**

특징 및 성과

- 인천시교육청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메타버스 플랫폼
- 개인별 맞춤형 초·중·고 연계 진로진학 이력 관리
- 현재와 미래를 잇는 진로체험
- 대입 예측 프로그램 구축
- 1,000명의 진로직업멘토단을 통한 1:1 온라인 화상멘토링
- 전국 교육분야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사례로 선정

주요 기능



AI 진로적성검사

초등 / 중고등

직업과 관련된 검사를 합니다

결과를 통해 나를 알 수 있습니다.

★ 전로교사제를 위한 필수급서 도입

직업적성심사

직업과 관련된 다양한 능력에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지 알아볼 수 있음.

① 20분

👉 64점 만

원시문제해지

원시조개

원시문제해지

제시책

직업가치관심사

직업을 포함한 다양한 가치 중,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지 알아볼 수 있음.
본 검사지는 원시적 특성을 반영하여 원시적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① 15~20분

👉 64점 만

원시문제해지

원시조개

원시문제해지

제시책

직업탐색심사(K)

직업과 관련하여 어떤 흥미와 능력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음.

① 15분

👉 96점 만

원시문제해지

원시조개

원시문제해지

제시책

진로소속도심사

진로를 계획하고 구체화하는데 필요한 태도와 능력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 지 알아볼 수 있음.

① 15~20분

👉 63점 만

원시문제해지

원시조개

원시문제해지

제시책

졸업사서 작성법 | 커리어넷 직업적성검사

네스탁 생1

소속: 교육부
소재지: 서울
내선: 02-6394-1111
외선: 02-6394-1111
홈페이지: www.nestack.com
작성일: 2022.08.13

커리어넷 직업적성검사 결과표

직성은 지금 현재 내재하고 있는 타고난 성향이나 잠재력을 가늠하는 능력이 높을 것입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자신의 적성 영역과 그 영역에 맞는 직업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검사서 결과는 선적이 아닌 직성은 어떤 분야의 노력이냐 관점에서 보면 좋을 것입니
다. 보통, 직성만으로는 직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관심분야는 참고자료로 활용하세요.

I 직업적성검사 주요 결과

1. 높은 직성으로 살펴본 네스탁생1군에 대한 종합평가

자연과학적

동양문화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
는 것으로, 자연과학에 대한 관심이 직업에
대해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공민간지적

공공 기관·직장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 수교관계로 인해
수교관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음악능력

평범한 수준으로 노래가사나 악기 연주에는
높은 능력이 없을 것으로 예상
수교관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2. 직업적성영역별 결과(배우리)

직성영역	배우리	직성영역	배우리	직성영역	배우리
자연과학적	94.3	행정적	90.6	자기성찰영역	89.7
공민간지적	92.2	수교관계	90.2	언어영역	88.3
음악능력	91.3	예술사조능력	90	대인관계영역	84.3
수거: 논리적	91	신체: 운동능력	89.9		

3. 네스탁생1군의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추천 직업군

3. 테스트학생1님의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추천 직업군

사이버 진로체험

미래 지형 직무체험을 통한 진로 비전 제시



메타버스 플랫폼

가상의 인천 구현을 통해 전용 메타버스 공간 창출



진로, 직업, 대학 학과 정보 연계 제공

직업과 연관된 학과정보를 봅니다

전자공학과 개설대학

직업관련 세부 안내

 학과소개

전자공학은

✔ **적성과 흥**

여타의 공학

✔ **관련학과**

✔ 취득자격

-국가자격 : 전기기사, 반도체기사, 무선설비기사, 정보통신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방송통신기사, 전자계산기사, 디지털제어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전파통신기사, 전력전자기사

 진출분야

기업제: 각종 전자관련 제조업체, 통신업체, 전자부품소재 및 제조업체, 전자기기 설계 및 제조업체, 각종 전자 장비문물 및 유지보수업체, 음향기기, 화상기기, 첨단의료장비제조업체, 이동통신, 위성통신 및 위성방송 관련업체, 반도체회사, 마그네티트레이저 등 전자소재 제조업체, 전자 및 정보통신 관련 연구소. 정부 및 공공기관: 전기장·전신자·전송기술직 공무원,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전자파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02

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을 활용한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실현 방안

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



AI 진로적성검사



01 AI 직업 추천

AI가 적성검사결과를 분석하여 추천한 결과

- 검사지별 추천된 직업
각 검사지별 추천된 직업을 순위별로 확인
- AI 종합결과와 직업 추천
검사지 결과를 종합하여 추천된 직업 10가지
- 직업분류별 직업
추천받은 직업들의 직업분류군
- 직업별 상세정보와 진로/진학 정보(체험처 정보)
추천받은 직업의 상세정보, 진로/진학정보, 체험프로그램 추천
- 가까운 체험처 추천
내가 선택한 위치의 체험프로그램 확인

02 AI 직무 추천

AI가 경험탐색과 희망직무를 분석하여 추천한 결과

- 직무 분석
선택한 희망직무와 작성한 경험탐색을 바탕으로 적합한 직무 분석
- 추천 직무 정보
추천된 직무의 상세정보, 관련 자격증 정보
- 키워드 분석
경험탐색에 작성한 키워드 분석

1,000명의 진로직업멘토단

학생 성장을 돕는 1,000명의 진로직업멘토단은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찾아 원하는
미래를 스스로 디자인하며
결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 · 직업 분야
정보를 제공해주는 전문 인력이다.

화상 멘토링

1000명의 진로직업멘토단과의 온라인 상담



커뮤니티

소모임커뮤니티

커뮤니티

소모임커뮤니티

커뮤니티 홈

나의 활동

즐거찾기 소모임

커뮤니티

소모임

소모임

·모이자

·SW 프로그래밍에 미친놈들

·대학입시 정보 공유방

·유투브에서 올랐한 것들은 뭐는 사람들

모이자

안녕하세요 ☺

2022-12-02

좋은 하루입니다.

태그

#중학교 #공부 #일상

좋아요 (0)

신고하기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최대 150자)

댓글 등록

목록으로

커뮤니티

공동 관심사에 대한 정보 공유

소모임형 커뮤니티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게시합니다

게시글에 의견을 교환합니다

커뮤니티

소모임형 커뮤니티

나의 활동

커뮤니티 홈

나의 활동

즐거찾기 소모임

커뮤니티

소모임

소모임

·모이자

·SW 프로그래밍에 미친놈들

·대학입시 정보 공유방

·유투브에서 올랐한 것들은 뭐는 사람들

모이자

안녕하세요 ☺

2022-12-02

좋은 하루입니다.

태그

#중학교 #공부 #일상

좋아요 (0)

신고하기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최대 150자)

댓글 등록

목록으로

커뮤니티

소모임형 커뮤니티

나의 활동

커뮤니티 홈

나의 활동

즐거찾기 소모임

커뮤니티

소모임

소모임

·모이자

·SW 프로그래밍에 미친놈들

·대학입시 정보 공유방

·유투브에서 올랐한 것들은 뭐는 사람들

모이자

안녕하세요 ☺

2022-12-02

좋은 하루입니다.

태그

#중학교 #공부 #일상

좋아요 (0)

신고하기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최대 150자)

댓글 등록

목록으로

커뮤니티

소모임형 커뮤니티

나의 활동

커뮤니티 홈

나의 활동

즐거찾기 소모임

커뮤니티

소모임

소모임

·모이자

·SW 프로그래밍에 미친놈들

·대학입시 정보 공유방

·유투브에서 올랐한 것들은 뭐는 사람들

모이자

안녕하세요 ☺

2022-12-02

좋은 하루입니다.

태그

#중학교 #공부 #일상

좋아요 (0)

신고하기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최대 150자)

댓글 등록

목록으로

진로체험처

체험처 유형 ☒ 전체 ☒ 공공기관/공기업 ☒ 민간기업 ☒ 청소년시민단체 ☒ 학교/대학교 ☒ 개인사업장

체험처명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전체 997 건

엑셀 다운로드

[공공기관/공기업] - 계양구
(재)인천광역시계양구인재양성교육재단

[공공기관/공기업] - 미추홀구
(사)임마엘(구:(사)한국행복가족)

[청소년/시민단체] - 부평구
(사)인천여성의전화

[청소년/시민단체] - 남동구
(사)인천국학원

[공공기관/공기업] - 중구
(사)인천광역시도서관발전진흥원-영종도서관

[개인사업장] - 부평구
(사)밝은미래진로지원센터(인천지사)

[개인사업장] - 부평구
(사)대한민국 청소년 로봇연맹 경인, 인천지부

K

<

111

>

>

진로체험처

체험처 유형	개인사업장	체험처명	(사)대한민국 청소년 로봇연맹 경인, 인천지부
지역	인천 부평구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체육관로 34 이리움프라자2 1103호
체험처 소개	(사)대한민국 청소년로봇연맹 경인, 인천지부는 인천을 중심으로 경인지역에 자율학기제 진로체험 강사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두에서 준비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인공지능코딩, 드론, VRAR, 홀로그램, 3D프린터, 창의로봇 프로그램을 전문강사가 교육하고 있습니다.		

목록으로

운영중인 체험프로그램 목록

직종명	프로그램명	체험대상	온/오프라인	금액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자율주행 자동차	초 중 고	오프라인	10,000원
소프트웨어 개발자	3D프린터	초 중 고	오프라인	10,000원
소프트웨어 개발자	AR, VR 가상 현실 체험	초 중 고	오프라인	10,000원
소프트웨어 개발자	드론	초 중 고	오프라인	10,000원
소프트웨어 개발자	4차산업 홀로그램 체험	초 중 고	오프라인	10,000원
소프트웨어 개발자	kt인공지능코딩	초 중 고	오프라인	10,000원

진로체험처

자율주행 자동차

(사)대한민국 청소년 로봇연맹 경인,인천지부

기본정보



수준별 정보

위치/교통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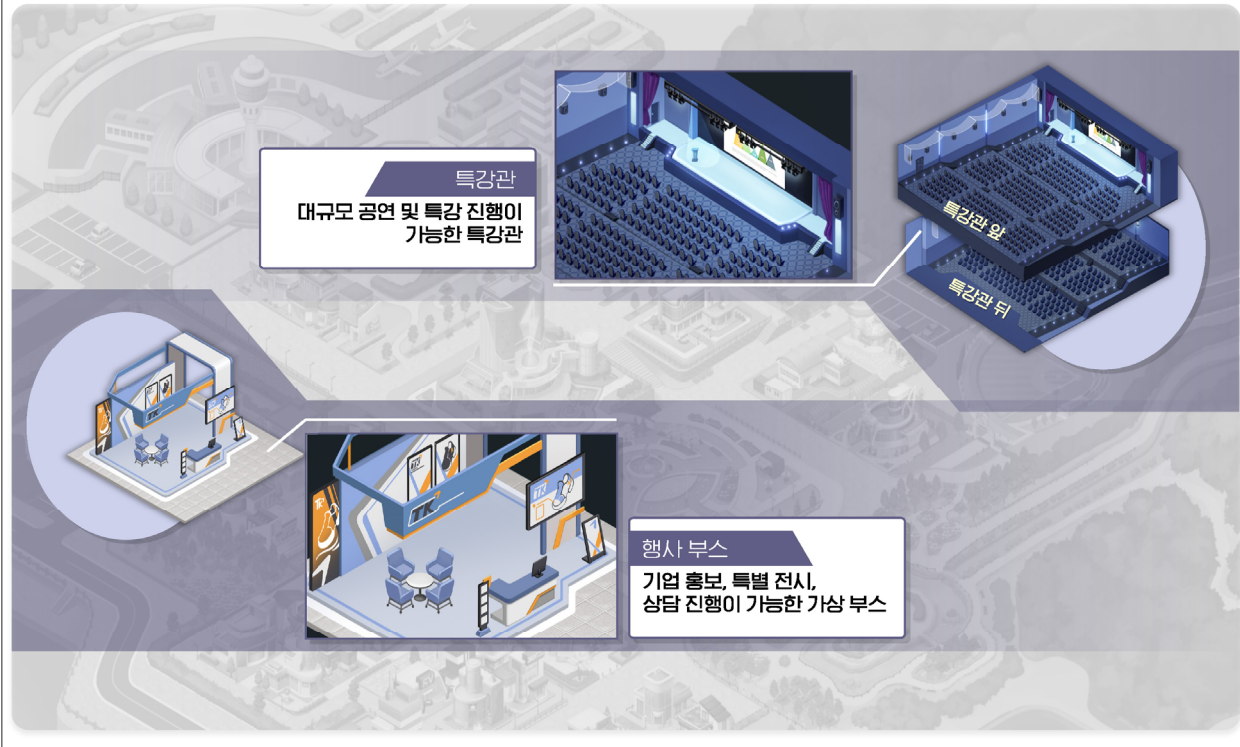
체험일	2023-01-01 ~ 2024-02-29
체험주기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체험 이수시간	2시간
체험가능시간	09:00 ~ 15:00
모집인원	25
체험유형	직업실무체험형
대상학교 유형	일반학교 각종학교 학교외기관
체험 대상	초 중 고
체험직무/학과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참가비	10,000원

메타버스 플랫폼

소모임을 위한 동아리 교실 제공



특강 및 박람회



진로진학취업 로드맵

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을 활용하여 개개인의 고유한 특성과 적성에 맞춰, 결대로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진로설계, 고입, 대입, 취업 맞춤형 성장경로이다.

진로진학취업 로드맵(예시)



감사합니다.

토론 2

학교 안과 밖을 연결하는 대안교육

박민형 (대안교육연대 정책위원장)

‘학교에 갈 의무’는 없다

- 「초·중등교육법」의 전신인 「교육법」에는 ‘교육을 받을 의무’¹⁾가 있었다. 친권자, 후견인 또는 사용자에게는 ‘취학시킬 의무’가 부여됐으니까 이때의 ‘교육을 받을 의무’는 ‘학교에 갈 의무’인 셈이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도 내야 했다. 다만, 학령기를 놓친 성인만 지는 의무였다.
「교육법」에서도, 「초·중등교육법」에서도 아동·청소년 당사자에게 ‘교육을 받을 의무’가 부여된 적은 없다. 그 부모와 보호자에게 그를 ‘취학시킬 의무’가 있을 뿐이다. 헌법에서도 교육법에서도 아동·청소년은 ‘교육을 받을 권리’의 주체이지 의무의 주체가 아니다. 학령기를 놓친 성인의 ‘교육을 받을 의무’ 조차 「교육법」에서 「초·중등교육법」으로 넘어갈 때²⁾ 없어졌다.
-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교육부 블로그에는 ‘교육의 의무 = 개인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교육을 받을 의무’라고 되어 있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올려서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냐고 따져 물었더니만 교육부 관계자는 곧바로 잘못을 인정했다. 다음날, 헌법 제31조제2항을 인용해서 ‘교육의 의무 = 자녀에게 초등 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국민의 의무’로 고쳤다.
- 부모와 보호자의 자녀를 ‘취학시킬 의무’의 맨 꼭대기에는 헌법 제31조제2항이 있다. 그런데 헌법은 이 ‘교육의 의무’를 꼭 학교 취학의 방법으로 하라고 정한 것은 아니다. 「초·중등교육법」이 정한 학교 이외에도 얼마든지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한 교육을 받게 할 의무’이행의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이를테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자녀를 보내는 방법으로 ‘교육의 의무’를 이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³⁾

1) 「교육법」 1949.12.31.제정

제140조 단기 4243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학령초과자로 국문을 해득하지 못하는 자는 공민학교 성인반의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다. 전항의 의무가 있는 자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를 사용하는 자도 그를 취학시킬 의무가 있다. 의무도려 기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제166조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이행의 독촉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자는 5천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교육법」은 1998년에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교육기본법」으로 분화됐다. 같은 해에 「사회교육법」은 「평생교육법」이 됐다.

3) 현행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르면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자녀를 보내는 경우 취학의 의무를 ‘유예’할 수 있다. 취학의 의무의 ‘인정’으로 개정이 필요한 조문이다.

- 그렇다면, 학령기 아동·청소년 당사자에게 ‘교육을 받을 의무’가 없고 더구나 ‘학교에 갈 의무’는 더더욱 없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 학교에 가는 이유는 ‘교육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헌법이 정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누리기 위한 것이라고, 학교에서 즐겁게 배우되, “힘들면 가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신호를 보내줘도 되지 않을까?

‘학교 밖’은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니다

- 현행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3건의 법률안이 병합한 것인데 그 중 첫 번째 발의안이 김희정 의원의 「학교 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2013.3.20.)이다. 이 법률안 관련 공청회에 전문가로 참석한 오○영 교수는 법률 제정에 찬성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출산율이 저조한 현시점에서 이들이 이렇게 방치될 경우, 미래의 인적 자원이 되지 못하고 각종 청소년 범죄나 가출, 약물, 인터넷 중독, 자살 등의 사회 문제를 유발하여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학업중단 청소년의 범죄율이 일반 학생들에 비해 32배 높게 나타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한 해에 2천53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이 법률안과 오○영 교수가 말한 ‘학업중단 청소년’은 법정 학교를 그만두거나 처음부터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을 의미하는데, 이들의 범죄율이 법정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 비해서 32배 높다는 얘기다. 통계 수치들도 황당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들이 쌓여서 ‘학교 밖’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확대 재생산한다.

- 윤철경 등은 법정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업중단자’의 이행경로를 3개년 간 분석했다. 그 결과 학업형이 50.4%, 직업형이 32.4%, 무업형이 11.1%, 비행형이 6.0%으로 나타났다고 한다.⁴⁾ 그중에는 대학입시를 더 잘 보려고 학교를 그만둔 경우도, 비인가 대안학교에 다니느라 애초에 취학하지 않는 아동·청소년도 있다. 학교에 다니는 대신에 직업교육을 받는 경우도, 진로 결정을 미루고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경우도 모두 ‘학교 밖 청소년’이다.
- 정작 하루가 멀다며 온갖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곳은 ‘학교 안’이지만, 우리는 ‘학교 안’ 범죄율이라고 하지 않으며, ‘학교 안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계산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학교 밖’에도 같은 잣대와 같은 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학교 밖’은 ‘학교 안’ 보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 단지, ‘학교 안’의 교육 방법과 ‘학교 밖’ 아동·청소년의 배움의 방법이 다를 뿐이다.

학교 밖 배움터, 대안교육기관

- 입시와 경쟁 위주의 학교 제도에 대항하면서 시작된 대안교육(대안학교) 운동이 이제 30년이 되어 간다. 그 사이 학교 안에도 대안교육 운동의 바람이 불어 혁신학교 운동도 일어나고 대안교실, 대안교육 과정, 위탁형 대안학교 등 ‘대안’이 붙은 각종 교육실험이 있었다. 교육청에도 대안교육 담당부서와 담당자가 생겼다.

4) 윤철경 외(2016)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 연구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그러나 학교 안의 ‘대안교육’은 여전히 힘에 부친다. 교사는 혁신학교를 지킬 힘이 소진되고, 부모는 초등학생 자녀를 입시 학원으로 인도한다. 대안적인 교육을 한답시고 대학입시에 소홀한 학교는 여기저기서 공격을 받는다. 입시경쟁에서 들러리 서고 싶지 않은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들이 어떤 형태로든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것을 막을 자격이 학교에는 없다.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민간에서 고안해 낸 ‘대안학교’ 용어를 국가가 채 갖기 때문에 진짜 대안학교들은 ‘대안교육기관’이라는 어정쩡한 용어로 법제화했다. ‘학교’ 명칭은 쓸 수 있게 타협을 봤지만, 대안교육기관을 졸업해도 학력인정도 안되고 정규 학교가 받는 재정 지원도 없다. 대안교육기관을 오래 열심히 운영해도 법정 학교로 갈아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 사정이 이런데도 벌써 231개 비인가 대안학교가 17개 시·도 교육청에 등록했다. 입시와 경쟁 없는 대안교육 운동을 ‘학교 밖’에서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법정 학교가 몸에 맞지 않아서 떠난 아동·청소년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학교 밖 배움터’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로부터 마음이 떠난 아동·청소년에게 학교 복귀만을 종용할 게 아니라 대안교육기관을 적극적으로 소개해줘야 한다. 지자체와 교육청은 그곳에서 공부하는 아동·청소년에게 법정 학교 만큼은 안되더라도 수업료 중 일부라도 지원해줘야 한다. 그래야 아동·청소년이 학교 안과 밖을 자연스럽게 넘나드는, 배움의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이다.

토론 3

인천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 지원을 중심으로

전경아 (인천대안교육기관협의회 회장)

1. 평생학습과 학교

먼저 ‘평생교육’은 교육 제도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학습 기회를 지원하는 ‘교육체계’이고 ‘평생학습’은 ‘개인’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학습하는 것이어서 평생학습은 평생교육의 일부분으로 알고 있지만 이 글에서는 두 가지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밝혀둔다.

가. 평생교육은 학교 밖?

카카오톡 ‘AskUp’에 ‘평생학습’과 ‘청소년’은 무슨 관계가 있냐고 물으니 다음과 같은 답이 왔다.

‘청소년은 평생학습을 통해 평생 학습 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 외에도 자신이 흥미 있는 분야에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끊임없는 호기심을 키울 수 있으며,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출 수 있습니다. 또한, 평생학습을 통해 청소년들은 다양한 사회 경험을 쌓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인 책임감과 연대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생학습은 청소년들의 종합적인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답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 외에도’였다. 평생학습과 학교 밖 청소년의 관계를 물으면 당연히 평생학습은 ‘학교 시스템 외에서’, 학교 교육 외에서, ‘학교에서 제공되는 교육 외에도’라는 표현이 나온다. 결국 현재 축적된 정보에서 ‘평생학습’은 학교에 더해지거나 학교 밖에 있는 것이다.

나. 학교는 평생교육의 일부?

발제문에서는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모든 국민들은 학습할 권리, 즉 ‘학습권’이 있고 이는 ‘교육받을 권리’이기 때문에 국가는 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래서 평생교육은 국가의 책무이기 때문에 공교육 위주의 교육 시스템이 평생학습을 돕는 평생교육체제로 대전환을 이뤄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헌법 제31조

-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022년 11월에 있었던 2030 인천미래교육 포럼 ‘인천평생학습, 미래를 만나다’에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홍보강 교육팀장님이 발제를 하셨는데, 거기에서도 과거에는 학교가 교육의 중심이었고 평생교육은 학교 교육을 보조했지만 미래에는 학교가 평생교육에 포함되고 학교 교육은 평생교육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여기서 ‘학교’는 평생교육의 일부이지 필수 요소는 아닐 것이다.

다. 학교는 평생교육에 포함?

발제문에서 교육주체로서의 부모에 대한 강조를 하면서 굳이 ‘가정학교’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또 ‘교실이 없는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학교 밖과 학교 안을 구분하는 담을 헐어야 할 때라고 했다. 인생의 전 과정에서 바라보면 학교 밖은 진짜 학교이고, 학교 안은 예비학교일 수 있다.’라고도 했다. ‘직장을 살아있는 학교로’, ‘마을을 학교로’라고도 했다. ‘가정학교의 교장인 부모’, ‘교실’, ‘진짜 학교’, ‘예비학교’ 같은 용어가 체계를 갖춘다는 의미에서 쓰여졌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앞서 공교육 위주의 교육 시스템이 평생학습을 돕는 평생교육체제로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했는데, 이런 용어의 사용은 마치 학교 체제가 ‘평생교육’이라든지 ‘부모교육’과 같은 형태로 학교 서비스가 학교 밖에서도 계속되어야 하는 것 같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학교를 졸업한 것이 아닌 건가 싶게도 만든다. 결국 모든 배움터의 학교화가 평생교육이고, ‘학교’에 평생교육이 포함되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 세 가지 중 평생학습과 ‘학교’는 어떤 관계인지 정리가 필요한 것 같다.

2. 인천 학교 밖 청소년 학습권 지원

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점

‘학교 밖 청소년’을 처음 정의한 곳은 2011년 「광주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지원 조례」이다. 이 조례가 정의한 ‘학교 밖 청소년’은 어떤 이유에서든 법정학교에 다니지 않는 모든 청소년을 포함한다. 2014년 5월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이 법률에서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의 학교이고 「초·중등교육법」은 의무교육 단계 아동, 청소년의 자발적인 미취학·비진학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현실에는 자발적인 의사로 초등학교·중학교 단계의 비인가 대안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이 있고, 초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는 그 청소년들의 ‘학교 이외의 공간에서의 배움’을 지원했는데도 말이다.

심지어 「초·중등교육법」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 아동, 청소년들이 법정학교 밖에 잠시 외출 나온 것이고 곧 복귀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설계된 법률이었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가 ‘교육지원’ 조항이지만 학교를 나온 청소년의 ‘학교 복귀’를 지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법률의 정의에 따라 2014년에 만들어진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는 교육 지원 사업이 명시되어 있지만 급식비 이외에 학습권 지원은 할 수 없다. 또 2021년에 만들어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도 대안교육기관 지원이 명시되어 있지만 학교 복귀를 위해서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천의 대안교육기관은 교육 지원 사업이 있어도 교육 기자재 구입을 할 수 없다.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9.23.〉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제2호의 “대안교육”을 행하는 기관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제4조의 학교 설립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9.23.]

제4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시장의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 시책에 협조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개선 및 학교 밖 지원센터와의 연계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9.23.]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중단 없는 지원을 하기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과 규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9.9.23.〉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직업 체험 및 취업지원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여가, 문화, 체육 등 지원 사업
5. 학교 밖 청소년 생계 및 건강증진연계사업
6.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사업
7. 대안교육기관 지원 및 협력방안
8. 후견인 제도 등 사회적 지원 방안
9.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학교장”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각급 학교의 장을 말한다.
3. “교육지원”이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말한다.
4.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5조(교육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계획(이하 “교육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지원계획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대안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을 하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심사를 거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얼마 전 있었던 인천여성가족재단 연구 조사를 위한 간담회에서 청소년 과정 대안교육기관 교장 선생님들에게 들으니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학교’는 공교육이고 주류로 인식되는 것 같다. 소수자인 학교 밖 청소년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 보니 다수에서 소외된 느낌을 갖기도 하는 것 같았다. 지금도 기초군구에서 쓰이고 있는 ‘학업중단학생’이라는 용어에 공분을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학업을 중단한 적이 없다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외침도 있지만 「초·중등교육법」 제28조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에서 나온 용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학교’가 가치중립적이어서 ‘학교 안’이 ‘학교 밖’보다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어쩌면 이반 일리치가 〈학교 없는 사회〉에서 일갈한 ‘가치의 제도화’로서의 의무화된 ‘학교’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기까지 한다. 그런 ‘학교’의 틀을 깨고 나왔더라도 비인가이지만 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곳에 다닌다면 여전히 ‘학교 안’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학교 밖은 안전하지 못하다고 여기고, 심지어 학교 밖으로 나가게 되면 잠재적 범죄자로 보기도 한다. 도성훈 교육감의 공약이기도 한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한 눈에 보는 인천교육 5대 교육정책’을 보면 ‘안전에 안심을 더하는 책임교육’이라는 교육정책에서 ‘1-3. 학교 폭력 없는 인천, 생명 존중 인천’ 안에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강화’가 들어 있다. 물론 여기서 ‘대안교육’은 학교 밖 청소년이 다니는 ‘대안교육기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교육특성화학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각종학교를 포함하는 것이다. 하지만 전남교육청의 경우에는 ‘공정과 포용의 책임교육 구현’ 범주에서 중단과 차별 없는 배움 지원 안에 ‘맞춤형 대안교육 내실화’가 들어 있다. 제주 교육청은 ‘따뜻한 책임교육’ 범주에서 ‘유형별 촘촘한 맞춤 지원’에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제공'이 명시되어 있다. 이외에 어느 교육청에서도 '안전' 영역에 대안교육이나 학교 밖 청소년을 명시한 곳이 없다. 워낙 아동, 청소년 안전 사고가 많은 인천이라 그렇다고 자위하려고 한다.

나. 인천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개인적으로 동의되지 않지만 교육부 현황 자료에 '학업중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인용한다는 것을 밝혀둔다. 2021학년도 인천시 학업중단자는 총 2,109명으로, 전국 42,755명의 약 4.9% 수준이다. 코로나19의 여파로 학업중단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던 2020학년도 학업중단자 1,482명에 비해, 1년 사이 627명이 증가한 것이다. 인천시 학업중단자는 매해 5% 안팎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1년 10월 기준 인천시 학교 밖 청소년은 4,300여 명으로 추정된다. 인천시에는 20여개의 대안교육기관이 있으며, 약 1,340여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인천시 학교 밖 청소년 중 약 30%가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고 있다.

원래는 '비인가(미인가) 대안학교'로 불리웠지만 2005년부터 '대안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 3항에 따른 '각종학교'를 가리키면서 교육부에서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로 불렀다. 현재는 2021년에「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대안교육기관'으로 불리우고 있다. 인천광역시에는 2022년부터 등록한 대안교육기관 7개와 등록하지 않은 비등록 대안교육기관으로 나누어진다. 2021년 당시 학교 밖 청소년의 63.8%는 학교 밖 청소년이 되어도 학업을 지속하길 원하고 있어서 학교 복귀를 목표로 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의 검정고시 지원도 도움이 되겠지만 대안교육기관을 통한 안정적인 학습 지원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표 2-1〉 인천시 학업중단자 현황(2011~2021)

학년도	학업중단자(명, %)					
	전국		인천			
	총	여성	총	여성	총(%)	여성(%)
2011	74,365	33,246	3,810	1,685	5.1	44.2
2012	68,188	30,505	3,328	1,454	4.9	43.7
2013	60,568	27,547	3,035	1,378	5.0	45.4
2014	51,906	23,569	2,485	1,139	4.8	45.8
2015	47,070	21,728	2,266	1,032	4.8	45.5
2016	47,663	22,386	2,346	1,150	4.9	49.0
2017	50,057	25,979	2,441	1,193	4.9	48.9
2018	52,539	25,957	2,701	1,372	5.1	50.8
2019	52,261	2,6062	2,690	1,325	5.1	49.3
2020	32,027	15,644	1,482	726	4.6	49.0
2021	42,755	21,363	2,109	1,080	4.9	51.2

출처 : 교육통계, 연도별 학업중단률(2022)

〈표 2-2〉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현황(2021.10.27. 기준)

과정	초	초중	중	중고	고	초중고	총계
학교수	2	5	0	3	2	8	20
학생수	147	137	0	98	22	581	1,340

출처 : 인천광역시 교육청 내부자료

주 : 일부 학교는 유치원 과정도 포함하고 있음. 학생수는 이들 시설의 유치원 과정생까지 포함된 수치임.

〈표 2-3〉 인천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학교급별 현황

단위: 교, 명

	초	초중	중	중고	고	초중고	총계
시설 수	2	5	0	3	2	8	20
이용자 수	147	185	-	98	22	888	1,340

출처 : 인천광역시 교육청 내부자료

다. 인천 대안교육기관의 학습권 지원

인천의 대안교육기관은 다른 지역과 달리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곳이 4개로 많은 편이다. 그래서 외국어 교육에 대한 법률적 해석 같이 인천만의 지역성을 고려한 등록 심사와 지원 방안이 꼭 필요하다. 또한 급식비 같은 비등록 대안교육기관의 보편적인 교육복지 차원의 안정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그간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였던 비인가 대안학교가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의 질과 학생 안전을 보장하고 교육 기회를 다양화하고자 한 정책적 기대를 거두기 위해서는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 개인의 학습권을 지원하기 위해 대안교육기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 교사 처우가 안정되도록 인건비를 지원하고 운영비, 교구 기자재를 지원하는 것은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고, 환경개선비를 지원하는 것도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2020년에 인천에서 3개의 훌륭한 대안학교가 문을 닫았던 것처럼 학습 지원을 하는 대안교육기관이 갑자기 문을 닫게 된다면 결국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을 지켜줄 수 없기 때문이다. 운영비 부족으로 교사들의 4대 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대안교육기관들이 많은데 교사 처우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켜내기란 무척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교육기관들은 그동안 지속가능한 대안사회를 지향하면서 지역사회 안에서 평생학습생태계를 구성하는 데 일조해왔다.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에 대한 국가적 관심의 사각지대 속에서 각 개인의 개성과 능력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 모델을 개발하고 교육과정, 교수·학습 방법 같이 다양한 교육실험을 통해 학습자와 보호자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공교육 혁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사회의 변화에 따른 교육 다양성과 교육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인천 대안교육기관의 중도입국 청소년, 장애 청소년 같이 특화된 교육 역량은 더욱 소중한 것이기도 하다.

대안교육기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이하 “시설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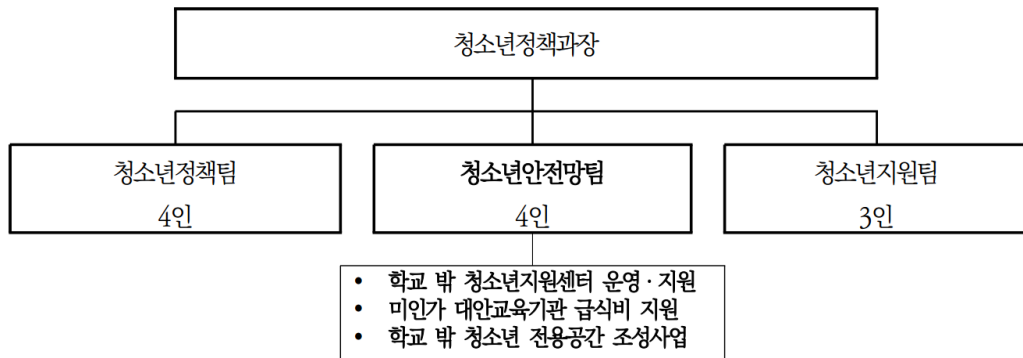
이러한 대안교육기관은 발제문에서 평생학습생태계에 꼭 필요한 상호존중의 ‘배움의 정신’이 잘 구현된 곳이기도 하다. 그런 차원에서 인천시는 여성가족국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안전망팀이 아니라 기획조정실 교육협력담당관 쪽 평생교육 담당자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를 맡는 게 적절할 것이다.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3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대안교육기관의 협력사업이 있기를 기대한다.

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3.1.4., 2020.12.31., 2022.12.30.〉

1.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사업
2. 평생교육 실태 조사 및 연구
3. 평생교육사에 대한 연수
4. 평생교육관계자에 대한 연수
5.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설치 및 운영
6. 문해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7. 민주시민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8. 전문인력정보은행제 및 학습계좌제 운영
9. 평생교육진흥 특성화 사업 지원 및 시민대학 지정·운영
10. 온라인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온라인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
11. 도서관, 학습동아리, 마을공동체 및 대안교육기관 등과의 협력 사업
12. 직업훈련, 문화예술, 인문·지역학, 인성교육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13. 우수 인재육성 및 장학금 지원 사업
14. 지방자치단체, 각종 단체 등의 장학금 수탁관리
15. 지정기탁, 기부, 교육 및 멘토링 사업

〈표 2-4〉 인천시 청소년과 조직도 및 담당업무



출처 : 인천광역시 조직도(2022.10.25. 기준)

〈표 2-5〉 인천시 대안교육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례 조례 현황

순번	법령명	지역명 (부서명)	제정일	비고
1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2014. 3. 10.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미추홀구 (평생학습과)	2014. 11. 17.	
3	인천광역시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동구 (교육아동청소년실)	2016. 4. 4.	
4	인천광역시 계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계양구 (평생교육과)	2017. 12. 29.	
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연수구 (여성아동과)	2019. 9. 18.	
6	남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남동구 (여성가족과)	2017.11.10.	
-	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2010.11.15.	대안교육기관 등과의 협력 사업 규정
-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서구	2015. 8. 3.	대안교육 관련 용어/정의 없음
-	인천광역시부평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부평구 (평생교육과)	2015. 12. 31.	상동
-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중구	2021. 12. 31.	상동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인천시교육청에서는 관련 업무를 2022년 중반까지 미래교육국 소속 학교생활교육과 학생성장지원팀이 담당하고 있었으나, 조직개편을 통해 현재는 인천대안교육지원센터가 담당하고 있다. 인천대안교육지원센터에는 실장 외 총 3명이 있으며, 전문상담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곳에서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 구성 및 관련 업무, 각종 협의회 및 컨설팅 운영, 학업중단학생 교육지원 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으나, 주된 업무 목표가 학업중단 예방과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관련 상담 지원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대안교육기관 지원 업무를 등록과 지원사업 관리만 할 것이 아니라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는 위탁형 대안교육기관과 견주어 필요한 학생들이 대안교육기관을 찾을 수 있도록 홍보를 지원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교원 연수, 공공시설 이용, 학습 준비물, 학습 체험비 지원을 포함해서 더욱 폭 넓게 학습권 지원을 해야 한다.

참고 자료

박민형, (2019) 대안교육 지원 조례의 현황과 전망, 대안교육연대 경기 조례워크숍
전선영,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연구 - 비인가 대안학교를 중심으로, 인천여성가족재단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
제2회 2030인천미래교육 콘퍼런스

세션
③

미래교육환경분과

발제 총신대학교 교수 김수환

토론 1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융합교육과 장학사 연수현

토론 2 인천석정초등학교 교사 김도용

토론 3 인천여자중학교 학생 권시우



발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참여와 협력으로 학생이 주인공이 되는 교육 만들기

김수환 (총신대학교 교수 김수환)

1. 들어가며

인공지능의 발전은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어 산업구조의 변화는 물론 교육환경에도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물리적인 공간에 모이지 못하게 되면서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통해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필수가 되었다. 이런 현상은 이전까지 교육 시스템에서 당연하다고 여겼던 모든 시스템을 되돌아보게 만들었고, 미래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숙제도 남겼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는 디지털 세상에서 일하고 소비하고 여가를 즐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다. 교육도 디지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며 교수자와 학습자의 역할도 변화하고 있다. 디지털 교육환경은 장단점이 있는데, 가장 큰 장점은 아날로그 교실에서 하기 어려웠던 맞춤형, 개별화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초중등 교실에는 1명의 교사가 20~30여 명의 학생이 있는 1개 반을 담당해야 하는 구조인데, 교사 1명이 정해진 수업시간에 모든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주기가 어렵다. 디지털 교육 환경을 제대로 구축하면 교사는 학생들의 학습현황과 질문을 대시보드를 통해 확인하고 필요한 학생에게 바로 피드백을 줄 수 있다. 우리가 꿈꾸는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돕는 진정한 맞춤형 교육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디지털 교육 환경만 갖춰지면 정말 맞춤형, 개별화 교육이 가능할까? 교육의 역사를 살펴보면 교육의 이상을 꿈꿨던 학자들의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은 실현되지 않았다. 디지털 교육 환경은 우리가 꿈꾸는 교육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학생이 중심이 되는 미래교육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본고에서는 디지털 교육 환경에서 학생이 중심이 되는 맞춤형, 개별화 교육을 이루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고찰하고자 한다.

2. 교육환경의 변화

코로나19로 야기된 온라인 교육은 전세계 교육 시스템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코로나19 초기에 세계 여러 나라가 보여주었던 대응 모습을 통해 각국의 교육시스템 현황을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1달 남짓 개학을 미루고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이는 현대 교육이 시작된 이래 역사상 유례 없는 조치였다. 우리나라보다 더 잘 대응했던 나라 중 대표적인 사례는 프랑스와 뉴질랜드가 있다.¹⁾²⁾ 프랑스는 몇 해 전에 초중등

1) 에듀인뉴스 <http://www.ed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23>

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0). 국외 COVID-19 대응학교 교육 대처 방안 사례.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만들고 비상시에 사용했던 경험이 있어서 코로나19가 유행하자 바로 온라인 시스템을 전환할 수 있었다고 한다. 뉴질랜드도 이전에 화산과 지진으로 물리적인 학교에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두어서 이번에도 잘 대처했다고 한다. 두 나라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현재 구축한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잘 정비해 두면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도 잘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혹자들은 코로나19로 10년 뒤의 교육환경을 현재로 가져왔다고 말한다. 원하던 원하지 않던 10년의 교육환경을 앞당겨왔다면 이제 향후 10년을 내다보고 교육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춰 우리나라에서도 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졌다. 2022개정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여러가지 사회적 변화요구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 인구감소, 기후위기, 민주시민성 함양 등이다. 2022개정교육과정에서는 이런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언어소양, 수리소양, 디지털 소양을 기초소양으로 지정하였다. 이 중 우리의 주제와 관련된 ‘디지털 소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있다. 디지털 소양은 “디지털 지식과 기술에 대한 이해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비판적으로 이해·평가하여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생산·활용하는 능력”이다.³⁾ 디지털 소양은 기초 소양이므로 모든 학생들에게 필수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디지털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자신의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디지털 도구를 문제해결에 활용하는 능력이 필요하므로 교육 격차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공교육에서 시행해야 한다.

우리나라 컴퓨터 교육의 역사를 살펴보면 4차 교육과정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직접적으로 가르쳤으나 이후 교육과정 개정을 거듭하면서 2000년대에는 ICT를 중심으로 응용 소프트웨어(워드 프로세서, 스프레드 시트 등)를 가르치는 교육으로 변경되었다. 2005년에 문제해결력을 중심으로 하는 컴퓨터교육으로 변화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2009개정교육과정에 일부 반영되었고, 2015개정교육과정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본격적으로 ‘컴퓨팅 사고력’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컴퓨팅 사고력은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최초의 제안자인 시모어 페퍼트(Symour Papert)의 주장을 인용하면 ‘컴퓨팅을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표현(Expression)하고 문제를 해결(Problem-solving)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세상에서는 컴퓨팅을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펼쳐야 하고, 디지털 도구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모든 학생들에게 반드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교육의 내용 측면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모든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라면 교육의 환경 측면에서도 디지털 교육환경의 변화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한다. 디지털 교육환경에서 교수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교사도 학생도 준비되어야 한다. 디지털 교육환경에서의 교육 방향성은 맞춤형, 개별화 교육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때 맞춤형, 개별화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학생들의 데이터가 수집되어야 하고, 학생들의 활동 이력도 저장, 축적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인공지능 모델에게 학습을 시키고 학습 결과를 예측하게 하거나, 맞춤형 코스를 추천하게 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제시하는 형태의 교육이 가능하다. 이때 주의할 점은 디지털 기반의 맞춤형 교육은 교육의 이상을 실현해 줄 것 같지만 공정하고 공평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정한 데이터 수집부터 판별, 예측 모델의 정확성 검증, 획일화된 능력 강조 지양 등의 여러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디지털 교육환경을 제대로 구축하고 교수학습 상황에서 활용하는 것은 인공지능이 아닌 사람이 몫이다. 인공지능이 장착된 온라인 교육 시스템이 만능인 것 같지만 사람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3) 교육부. (2020). 2022개정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교육부에서 제시한 AI·디지털 교과서도 마찬가지다. AI·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면 교사 없이도 학습이 저절로 이루어질 것 같지만 이는 교육을 단순 지식전달 측면으로만 바라보고 예단하는 우(愚)를 범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인공지능 보조교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동기유발을 촉진하거나 목적의식을 부여하는 것은 사람 교사가 해야 할 일이다. 우리가 꿈꾸는 교육은 디지털 교육환경에서 인공지능 교사가 학생들을 교육하는 모습이 아니라 사람 교사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행하는 모습이다.

3. 디지털 환경에서 주인공은 학생과 교사!

교육이라는 배가 디지털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순항하려면 교사와 학생이 중심이 되는 교육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디지털 교육환경에서 주인공은 인공지능 기술이나 서비스가 아닌 학생과 교사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 알고리즘이나 교육콘텐츠 중심이 아니라 스스로 학습의 열정과 관심에 따라 선택하는 학생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또한 인공지능에 의해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학습코스가 아닌, 교사의 설계와 결정에 의해 학습코스가 구성되고 인공지능의 추천은 보조의 역할로 작용하도록 해야 한다.

필자가 한국과학창의재단을 통해 진행한 연구보고서는 AI교육플랫폼의 이상적인 모습이 담겨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학생이 중심이 되는 교육 흐름을 구상했다.⁴⁾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교사나 서비스 업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도 콘텐츠를 생산하는 진정한 프로슈머(Prosumer)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흐름이다.

1. 인천 학생A는 국어 수업 시간에 들은 내용을 정리해서 1장 요약자료로 온라인 플랫폼에 공유한다.
2. 경기도에 사는 학생B가 그 콘텐츠를 보고 자신의 학습 공간에 퍼간다.
3. 학생A에게는 자신의 콘텐츠가 다른 사람에게 인용되었으므로, 크레딧이 지급된다.
4. 학생A는 획득한 크레딧으로 온라인 유료 강좌를 수강한다.
5. 이렇게 학습의 선순환 구조가 일어난다.

필자가 꿈꾸는 디지털 미래교육 환경은 이런 모습이다.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가 주장한 진정한 프로슈머가 되는 학습자의 모습을 꿈꾼다. 이는 최근 'OECD2030 미래교육 나침반'에 나타난 학습자의 자기주도성(Student agency)와도 일맥상통한다. 인천 미래교육위원회에서도 미래교육을 꿈꾸며 만들었던 인천미래교육 나침반에도 잘 나타나 있다.

교사들도 같은 맥락에서 교육의 한 축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교육부에서 제시한 미래교육정책 제안을 살펴보면 인공지능과 협업하는 교사상이 그려진다.⁵⁾ 아무리 인공지능이 학생들을 잘 판별하고 예측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데이터에 의한 결과이므로 총체적인 평가는 아니다. 학생들의 마음과 생각, 표출된 지적인 능력과 잠재된 능력까지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존재는 학생들을 대면하고 가슴으로 이해하는 교사들이다. 결국 인공지능이 교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과 협업하는 교사들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주인공이 될 것이다.

4) 김수환 외.(2021). 인공지능 교육 플랫폼 개발을 위한 기능 및 서비스 분석.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24(2), 25-37.

5) 교육부. (2020). 인공지능시대 교육방향과 핵심과제.

4. 공공재에서 공동재로

지금까지 초중고 교육은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왔다. 공공재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부담한 세금으로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우리나라에서 초중고 교육은 공공재(公共財)처럼 운영되어왔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인공지능이 기반이 되는 사회에서는 공공재로만 그 역할을 감당하기 어렵다. 공공재의 한계는 누구나 누릴 수 있지만, 함께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구조는 아니라는 것이다. 교육을 결정하고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교육부와 교육청과 같은 정책가들이 있고, 이를 교육현장에서 실행하는 교사, 교육을 수혜받는 학생, 학부모의 구조로 되어 있다. 켄타로 토야마가 지은 '기술중독사회' 책에서 보면 아무리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라도 이 세 그룹이 하나의 목표를 지향하지 않으면 실패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유네스코 2050 보고서에서도 지금까지의 공공재로는 더 이상 교육을 혁신하기 힘들다고 하면서 그 해결책으로 '공동재(Common good)'의 개념을 주장한다. 공동재는 교육과 관련된 '구성원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더 나은 교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이는 함께 참여해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함께 책임도 진다는 의미다. 디지털 세상에서는 누구나 접근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지만, 함께 참여해서 만들고 누리지 않으면 디지털의 강점은 무용지물이 될 뿐이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미래교육은 정책가, 교사, 학생 및 학부모 모두가 함께 모여 더 나은 교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공동재'를 실현하는 것이다. 교육을 공동재로 만드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선진국에서도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며, 우리나라에서도 전무한 상황이다. 인천교육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교육을 공동재로 만들어가는 도전을 시작한다면 교육의 역사에 중요한 발자취가 될 것이다.

5. 나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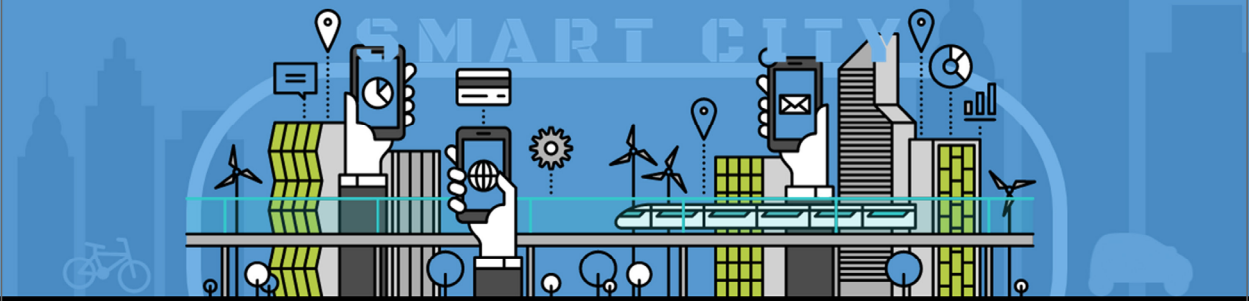
지금까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학생과 교사가 주인공이 되는 교육을 꿈꿔보았다. 인공지능 기술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여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게 될 것이다. 교육분야에서도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 맞춤형, 개별화 교육이 가능해 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팽배하다. 교육은 단순히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듀이의 주장처럼 교육은 학생들의 삶, 그 자체이며 삶이란 데이터에 의해서만 결정될 수 없다. 교육은 총체적인 현상이며, 한가지 모습으로 규정할 수 없다. 결국 미래교육은 정책가, 교사, 학생 및 학부모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어주려고 노력할 때 그 모습을 제대로 보여줄 것이다. 따라서 인천 미래교육은 디지털 세상에서 공동재를 실현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토론 1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참여와 협력으로 학생이 주인공이 되는 교육 만들기

세션3 미래교육환경분과

토론: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참여와 협력
으로 학생이 주인공이 되는 교육 만들기



AI융합교육과 디지털교육팀
연수현 장학사



AI

인천광역시교육청

친절하고 남에게 공감도 잘하며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성실하며 긍정적인 소통을 할 줄 아는 학생을 그려주세요



미래교육 준비사항

인천광역시교육청

[AI융합교육과 디지털교육팀]

교육 시스템

교사-학생이 중심

교육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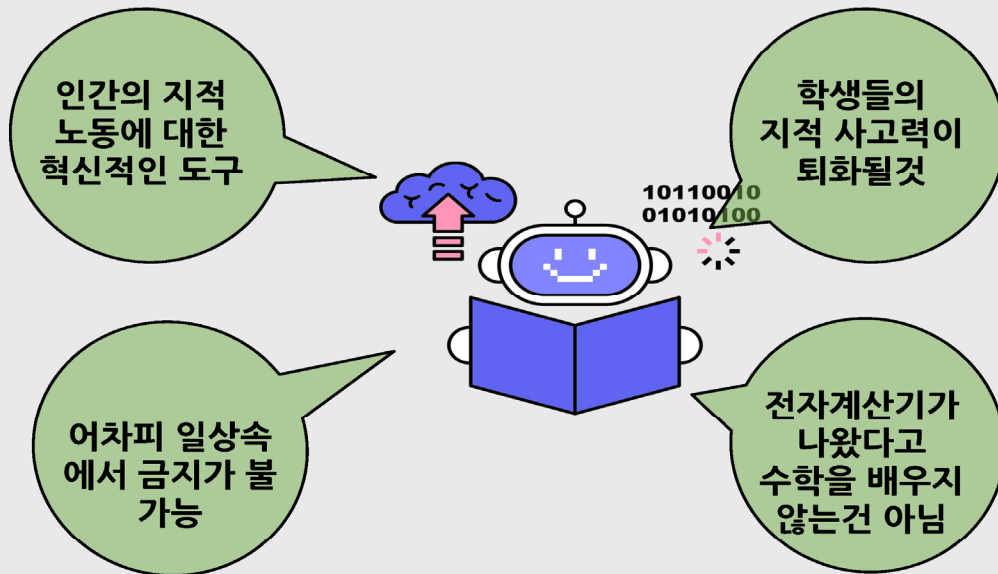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환경

디지털 인프라, 플랫폼

생성형 AI의 등장

인천광역시교육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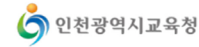
인공지능사회의 미래교육

인천광역시교육청



*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정보원

인천의 디지털교육 방향



학생 결대로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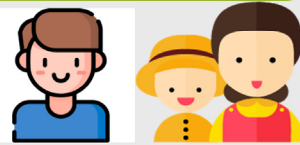
학습자의 주도성 갖기

교사와 학생의 프로슈머 역량, 인공지능과의 협업 역량

디지털 기반 AI학습관리 시스템을 통한 맞춤형, 개별화 교육



공동재 실현
Common Go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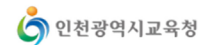
노트북
보급

무선망
고도화

AI
교수
학습
플랫폼

AI
학습
콘텐츠

AI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주요 구성 내용

통합인증 및 학생정보시스템



IMS OneRoster 를 기반으로
SIS간 Rostering 구현
SAML2.0 인증으로 다자간 통합
인증 구현

빅데이터/AI 분석 시스템



Hadoop, ML, DL 분석 기법을
활용한 학습 추천 서비스, 데이터
시각화 서비스 개발

표준 기반 연계 시스템



LTI, RESTful API,
JMS 등 APP 상호운용 및
데이터 교환을 위한 연계
시스템 개발

포털 서비스



각 교육청별 포털 서비스 개발

콘텐츠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



다양한 채널에서 확보한 콘텐츠 및
에듀테크 서비스 등 교육 콘텐츠의
메타데이터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저장·관리
학습맵, 학습자원지도 개발

데이터 분석 지표/모델 개발



학습분석을 위한 분석
지표 및 분석 모델 개발

학습기록저장소(LRS)



xAPI로 수집한 활동 데이터를 기록,
저장, 반환하는 저장소 시스템
학습 성과와 학습 행위를 종합 분석할
수 있는 학습 빅데이터 분석 체계 지원

교육 콘텐츠, 앱 유통 시스템



다양한 에듀테크 서비스와 콘텐츠를
연계할 수 있는 표준을 수립하고,
LMS와 연동하여 활용할 수 있는
유통시스템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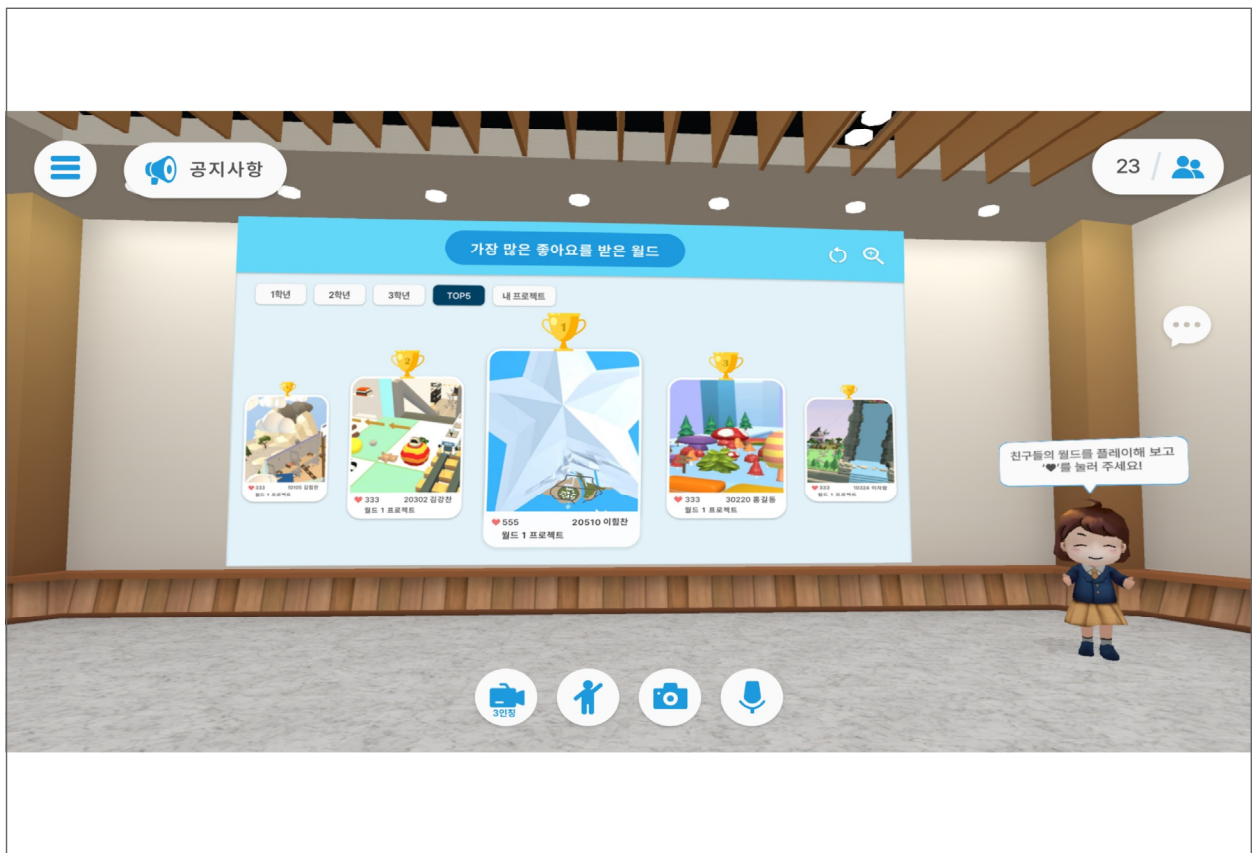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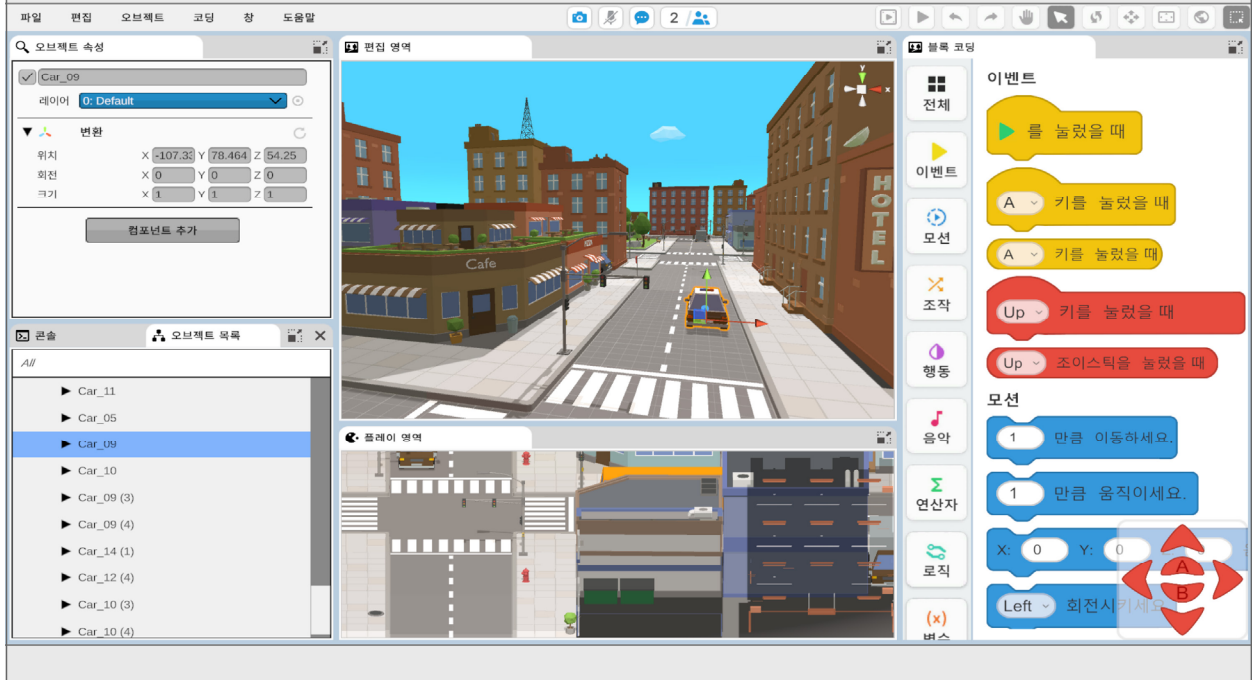
클라우드 인프라



CSAP 인증을 득한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운영
DevOps지원

프로슈머형 메타버스 플랫폼

인천광역시교육청



AI에 대한 학습자의 자기주도성

인천광역시교육청

I.N.C.H.E.O.N.

ChatGPT

활용 지침

I

AI활용 목적과
가치 확인



N

주체적인
사실 확인



C

잠재적
편견 고려



H

지식의
협력적 구성



E

배움의
주도성 갖기



O

창의적이고
비판적
태도 갖기



N

인간적
가치 도모



제언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교육환경에서 인공지능 교사가 학생들을 교육하는 모습이 아니라 사람 교사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행하는 모습입니다.”



토론 2

인공지능을 이해하는 수업 전략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참여와 협력으로 학생이 주인공이 되는 교육 만들기)

김도용 (인천석정초등학교 교사)

디지털 재표현(representation)의 유용함이 기계학습으로 대표되는 인공지능과 만나 더욱 커지고 있다. 근대 산업혁명 이후 대체로 효율은 선(善, Good)과 동일시되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혁신적 기술의 도약을 목격하고 있다. 지능마저 자동화되는 시대에 효율은 중요한 가치로 더욱 주목받고 극대화될 것이다. 그렇다면 선도 역시 극대화될까? 이런 시대에 어떤 형태로 수업을 해야 하는지 3가지 관점과 그 예시를 제안하고자 한다.

인공지능 가치 탐구:

인공지능의 판단에 관한 가치 탐구 수업이다. 가장 많이 시도되는 것 중 하나는 트롤리 딜레마와 자율주행차 시뮬레이터 모델 머신을 학습 소재로 다루는 것이다. 자율주행차의 도덕적인 행동을 학습자가 선택하는 과정에서 기술이 인간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음을 느끼고, 기술 사용에 동반된 책임의 의미를 깨닫는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가치 그 자체를 다루거나 특정 가치의 우위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공지능의 도덕적 기준은 인간이 정하며, 그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므로(Haidt, Jonathan) 도덕적 가치 판단을 다루는 인공지능의 개발과 사용에는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인공지능 역할 놀이:

인공지능 역할놀이를 위해서는 인공지능의 특징을 생각하여 그것을 모방하여 만들어야 한다. 직업에 필요한 역량을 탐색하는 과정을 페퍼트의 구성주의(Constructionism)로 풀어낸다. 이를테면 인공지능 면접관 놀이를 한다고 가정해보자. 직업에서 중요한 역량(지식, 열정, 인성)을 판단할 때 인공지능이 무엇을 보게 될지 상상하며, 인공지능 직업 면접관이 되기 위해 질문과 모범 답안을 구성한다. 학생들은 면접 답안을 모아 데이터셋으로 구성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언어에 경향성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이 과정에서 정성평가로 대표되는 면접을 정량적으로 처리하는 인공지능의 가능성과 한계를 상상한다.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인공지능을 다루기 위해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인공지능을 직접 만들어보는 것이다. 인공지능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초등학생들도 쉽게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특히, 자연어 처리와 같은 고등한 인공지능도 이젠 블록코

딩으로도 다루어 볼 수 있다. 그리고 사용하는 데이터는 학생이 생산한 것을 교사가 전처리하여 준비한다. 학생들은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레이블(좋은/나쁜)을 나누어 모델을 만들고 테스트한다. 그리고 완성된 기계학습 모델로 구직자의 대답을 분류하여 점수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을 완성하고 공유한다. 이 과정에서 같은 목적으로 만든 프로그램이라도 학습 데이터나 인터페이스(질문)에 따라 다른 점수를 얻는 것을 경험하며, 인공지능의 가능성과 한계를 확인한다.

아날로그라는 강에서 디지털 바다에 뛰어든 세대는 무엇이 다른지 인식할 수 있지만, 바다에서 태어나고 자란 세대는 바닷물이 강물보다 거친지 짚지 알 수 없다. 그저 주어진 삶에 적응하거나 도태될 뿐이다. 정의로운 사회는 단순히 공리를 극대화하거나 선택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만으로 만들 수 없고, 공정한 사회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좋은 삶의 의미를 함께 고민하고, 이견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한다(Michael J. Sandel). 기계가 제공하는 효율에만 집중하여 중요한 가치를 잊지 않도록 강과 바다를 살아본 교사가 행동해야 할 때가 왔다.

“사람을 움직이기 위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화가 마크 로스코는 자신이 그림을 그리는 이유를 이렇게 정의했다. 예술은 인간이 가진 가장 원초적이며 종합적인 욕구라고 한다. 예술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인간은 무수히 많은 도전과 시행착오, 실패를 거치지만, 예술을 추구하는 순간 인간이라는 한계를 뛰어넘고 자유로워진다.

인공지능은 현재로써 그런 욕구가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자신과 경쟁하며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생각도 없어 보인다. 더 나은 수학 문제가 있는 것처럼 더 나은 예술이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은 결국 인간이 내려야 한다. 예술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마찬가지이다. 교육의 방향은 인간의 욕구와 인공지능의 기술을 접목시켜 얼마나 창조적이고 감동을 주는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토론 3

학생이 느끼는 미래교육: 디지털 대전환 시대, 학생이 꿈꾸는 학교

권시우 (인천여자중학교 학생)

안녕하세요?

인천여중 3학년 권시우라고 합니다. 먼저 미래 교육 콘퍼런스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디지털 대전환시대의 기술변화나 교육혁신과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SNS의 비중이 커지고, 학교에서도 간혹 스마트폰을 사용하였어도 이것이 큰 변화로 느껴지지 않아서일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디지털 기반의 미래교육과 관련하여 학교에서 제가 느꼈던 바를 여기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흔히들 디지털 시대를 맞아 학생들의 교육이 바뀔 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창의력이나 사고력이 암기보다 중요하다 들은 건 오래되었고, 어른들도 교육이 많이 바뀌었다 하셨지만, 학교에서 학생으로서 직접 마주하는 교육은 여전히 암기 위주입니다. 암기는 물론 중요합니다.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순 없으니 말입니다. 문제는 암기를 왜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무조건 외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워지는 정보는 시험에 필요할 뿐 실제로는 금방 잊어버리거나 실생활에서 사용하지 않아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외우라고 하는 것들은 실시간 인터넷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알아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인공지능은 사람이 암기할 수 있는 능력을 훨씬 넘어서 모든 지식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잘 사용하지 않는 지식을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또, 교육혁신을 많이 진행했다고 하지만 학생이 느끼는 바로는 학교에서 디지털을 거의 활용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학교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 학교에서 계속 예전 시대에 적합한 내용을 교육한다면 학생들이 과연 미래에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학생들이 미래 세계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바라는 유능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교육 체제는 과목이 하나 더 늘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학생 관점에서 몇 가지 의견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창의력과 사고력이 중심인 수업을 해야 합니다. 학생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학교는 먼저 학생이 스스로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무엇이 옳고 옳지 않은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교육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학생들은 주입식 교육을 받으며,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무조건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문제라고 말하는 것들을 봐도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고 입시제도와 같이 우리 삶에 근접한 것들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다른 무엇보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 학생이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학교에서 먼저 수업과 학교 커리큘럼 등의 것들을 바꾸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수업을 하더라도 학생이 직접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찾고 의견을 말하는 훈련이 초등학교 때부터 시행되어야 한다던가, 중학

교에서는 지필 평가에서 얼마나 수업을 들었는지 따질만한 기초 내용 위주로 시험해야 하고, 창의력과 사고력을 시험하는 수행평가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폰을 걷지 말고 스마트폰의 활용 방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거 디지털 시대에는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면서 정작 학교에서는 스마트폰이 나쁘다는 교육을 하고 스마트폰을 걷는 데 집중합니다. 선생님도, 학교 밖 어른들도 스마트폰이 왜 나쁘지 이유도 설명해주지 않은 채 무조건 스마트폰이 나쁘다고 하십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공부할 때는 게임 때문에 집중하지 못할 것이고, 이와 마찬가지로 수업시간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십니다. 미래에 중요한 능력 중 하나로 여겨지는 스마트 기기 사용능력을 가르치긴 커녕 스마트폰을 학생들의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 나쁜 것으로 여기니, 대단히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선생님께서 스마트폰의 중독성을 아시고, 그 때문에 수업에 집중하지 못할까 봐 염려하시는 건 알지만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는다'는 옛말처럼 시도도 해보지 않고 걱정만 하는 것은 오히려 바뀌어가는 시대의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안 좋으면서 디지털 교육은 좋다고 말하는 것이 더욱 학생들에게 디지털 교육혁신에 대한 거부감과 혼란을 가져오지 않을까요? 스마트폰을 걷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교과를 늘리고, 스마트폰의 단점만 말해주는 것이 아닌 스마트폰의 장점, 그리고 스마트폰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가르쳐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정보 등 디지털 관련 교과에서 더욱 전문적인 내용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현재 디지털 부문 교과에서는 학생을 능동적 행동의 주체가 아닌 피동적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생이 다 아는 너무 기초적인 내용의 수업을 들으려니 시간 낭비일 뿐이고,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물론 학생이니 주요 교과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몇 안 되는 디지털 교과의 내용은 학생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계속 들어온 상식 정도의 내용만 가르치니 당연한 일이죠. 디지털 관련 교과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디지털 교과를 더 전문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겠습니까? 디지털 교과를 학생에게 더 도움이 되는, 더 디지털 시대에 맞는 교육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수업 방식과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래에는 진도 나가기 급급한 지금과 달리 학생 개인의 진도에 맞추어 시를 매개로 교사와 학생이 1:1로 수업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다면 굳이 학교에 매일 나갈 필요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는 온라인 수업을 꽤 많이 사용할 텐데요. 온라인 수업 시스템을 더 개선하지 않는다면 학습 효율은 떨어질 뿐입니다. 저는 코로나로 인해 2년 동안 zoom으로 수업을 했을 때 불편한 점이 아주 많았습니다. 발표하기 위해 손을 들어도 선생님이 학생을 찾지 못하여 학생의 수업 참여도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자주 만질을 하게 됩니다. 이 이외에도 가끔 zoom이 오류를 일으켜 수업 도중 갑자기 연결이 끊긴다거나, 화면공유가 원활하게 되지 않아 불편함을 겪은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온라인 수업 시스템을 더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개선해야 할 것들은 더 있습니다. 수업의 질보다 진도를 더 중요시한 교육이라던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 시대에 대한 거부감, 학생의 사회성과 독해력 부족 등. 이러한 문제들도 디지털 교육혁신을 통하여 개선 시켜야 하는 부분이죠. 저는 인간과 로봇의 차이를 감수성과 창의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보다 잘 하는 일을 하면 되고 인간은 인공지능이 못하는 걸 하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입시 때문에

소홀하게 다루었던 문학, 문화 예술 등의 교과를 강화하여 인간의 감수성과 창의력을 향상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이 모든 건 처음 언급한 것처럼 과목이 하나 늘어나는 것으로 안 됩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입시제도 전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사교육 중심의 학습이 아닌, 실제로 미래에 꼭 필요한 두뇌를 활용하는 기술을 중심으로 배우고 그걸 입시에 적용해야 합니다. 언제나 학생이 학교에서 받는 수업이 대입을 위해서가 아닌 미래 시대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시대에 대한 제 생각과 개선해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
제2회 2030인천미래교육 콘퍼런스

세션
4

마을교육공동체분과

- 발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마을협력과 장학사 **김윤희**
- 토론 1 마을교육공동체 지음 회원 **최영이**
- 토론 2 인천목향초등학교 교사 **김지은**
- 토론 3 인천예송초등학교 학부모 **하미정**



발제

학교와 마을을 잇는 공공재로써의 공유공간

[삶과 배움을 잇고 마을 공공재를 가꾸는 마을교육생태계 조성]

김윤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마을협력과 장학사)

I

들어가며

공간이란 동양적 관점에서 공(空:emptiness)은 ‘비어있다’는 의미와 간(間:between)의 ‘사이’ 또는 ‘관계’라는 뜻의 합성어이다. ‘사이’라는 단어는 두 개체의 존재를 전제하여 두 개체가 어떠한 관계 방식으로 존재하는가에 따라 공간의 정체성이 형성된다. 한편 ‘장소(place)’를 ‘공간(space)’의 개념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장소’는 사람들이 어떠한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곳(넓이가 있는)이다. ‘공간’은 ‘장소’가 정의와 의미를 획득하는 과정으로 장소로 변모해 간다. 또한, 공간을 기하학이나 물리학의 척도 또는 좌표로 이해하기보다, 사람들이 그 안에 존재하고 또 체험하는 공간이 바로 장소(place)이다.

따라서 인간이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공간은 현장이고 실천의 장이며 삶의 일부분이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마을교육생태계의 가장 근본적인 터전에 대한 것이기에 의미가 있다. 공동체, 그중 마을과 교육을 잇는 마을교육공동체 플랫폼으로써, 존재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공간의 형태와 방식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II

삶과 배움을 잇는 공간, 마을+교육+공간

1. 공공재와 공유공간

오늘 주제인 마을 공공재가 ‘common goods’로 표기되었지만 ‘public goods’로도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어 여가서 개념적 이해가 필요하다. 경제학, 사회과학에서는 재화를 경합성과 배제성에 따라 사유재와 공공재(public goods), 공유재(common goods)를 분류한다.¹⁾ 재화의 기준으로 공공재와 공유재는 다르게 해석한다. 공공재

1) 일반적으로 개인이 구매를 통해 사유할 수 있고 소유권을 근거로 다른 사람을 소비에서 배제할 수 있는 것이 사유재이다. 여러 사람이 동일한 재화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경합성도 사유재의 특성이다. 사유재가 가지는 이러한 배제성과 경합성 때문에 희소성이 성립하고, 특정할 수 있는 수요와 공급 곡선이 성립한다. 반면, 공공재(public goods)는 소비에서 특정한 누군가를 배제할 수 없고 한 사람이 사용한다고 하여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지는 않는 재화로서, 구성원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재화이다. 흔히 공공재의 예로 지식, 공식통계, 언어, 맑은 공기, 국방 등이 언급되는데 이들은 모두 사유재에 적용되는 경합성과 배제성이 나타나지 않는 재화이다. 공유재(common goods)는 배제성을 가지지 않지만 경합성을 보인다는 측면에서 공공재와 다르다. 즉, 사유화할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이 공유하며 이용하기 때문에 바닥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출처 : 카이스트신문(<http://times.kaist.ac.kr>)

는 개인이 소유하지 않고 모두가 나누고 누구나 쓸 수 있어 자원이 독점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유재는 공공재와 같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어느 한 사람의 소비로 인해 다른 소비자의 자원 소비가 제한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를 공유지의 비극²⁾이라고 하는데 물리적인 장소로써 ‘공유공간’은 사용이 제한적이어서 ‘common goods’라는 개념으로 더 가깝게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공유공간’(common space)은 ‘모두에게 개방되는 공간’으로, 이때 ‘common’이라는 단어는 국내 연구에서 주로 ‘공동(公同)’의 의미에 중점을 두고 ‘common space’를 공유공간의 개념적 용어로 주로 사용한다.³⁾

앞서 말했던 마을교육공동체 플랫폼으로 학교공간을 활용한 학교와 마을을 잇는 교육복합화시설로, 인천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선학동에 위치한 [교육문화공간 마을엔(이하 ‘마을엔)]을 들 수 있다. 마을엔 또한 공유공간으로써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마을교육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현재진행형, 과정을 만들어 가는 중이다. 과정에는 아름다운 성공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좌충우돌하고 갈등하는 단계이다.

2. 공유공간의 특수성

공유공간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이다. 모인다는 것은 관계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그 안에 존재하고 또 체험하는 공간으로 기능하기 위한 특수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역성’은 ‘활동’(activities)에 있어서 다양한 측면을 실행할 수 있는 영역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접근성’이다. 물리적 거리가 사회적 거리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수많은 형태의 커뮤니티 활동들이 단순히 물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유로 성과를 내는 것은 아니다. 접근성이 쉽다는 점은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작용한다. 특히, 생활공간과 인접한 곳은 공유공간으로 활용되기에 좋은 조건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기능성’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다. 이것은 공간이 어떠한 기능을 갖추고 있는가에 장소에 대한 이해와 의미는 다를 수 밖에 없다. 장소를 구성하는 것이 물리적 속성들로 채워진 것만은 아니다. 공유공간의 기능적인 특성과 함께 공유공간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정서적 특징으로는 ‘친밀감’이다. 특별히 사적인 공간과 공적인 공간의 경계에 놓여 두 가지 성격 모두를 지니는 공유공간 안에서는 상호역동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파생되는 친밀감이 필수 조건이다. 친밀감은 안전함이기도 하다. 자신의 삶의 공간이 안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앞서 공간에 대한 개념에서 말했듯이 장소는 사람들이 어떠한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안전하지 않은 공동체는 지속가능하기 어렵다. 여기서 우리가 공공재로써의 공유공간은 사적 관계보다 공적 관계, 사회적 관계를 더 우선시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 경계가 모호해지는 순간 공동체의 영역이 나아가야 할 공공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2) **공유지의 비극**(公有地の悲劇, 영어: The Tragedy of the Commons)은 지하자원, 초원, 공기, 호수에 있는 고기와 같은 개방적인 자원에 개인이 이익에 따라 행동할 시 자원의 고갈을 일으키는 경제 과학적 상황을 설명한다. 이 개념은 1833년 영국의 경제학자 윌리엄 포스터 로이드(William Forster Lloyd)가 쓴 에세이에서 유래되었는데, 그는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규제되지 않은 방목의 영향을 가상의 예로 사용했다. 이 개념은 1968년 **개릿 하딘**(Garrett Hardin)에 의해 쓰여진 기사 이후 1세기 후에 “공유지의 비극”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출처: 위키백과]

3) 신은별, 이진민, “공유공간 ‘셰어링 스페이스’의 공간 유형 분석-공유경제의 개념을 바탕으로,” 『브랜드디자인학연구』 14권 4호 (2016. 12): 2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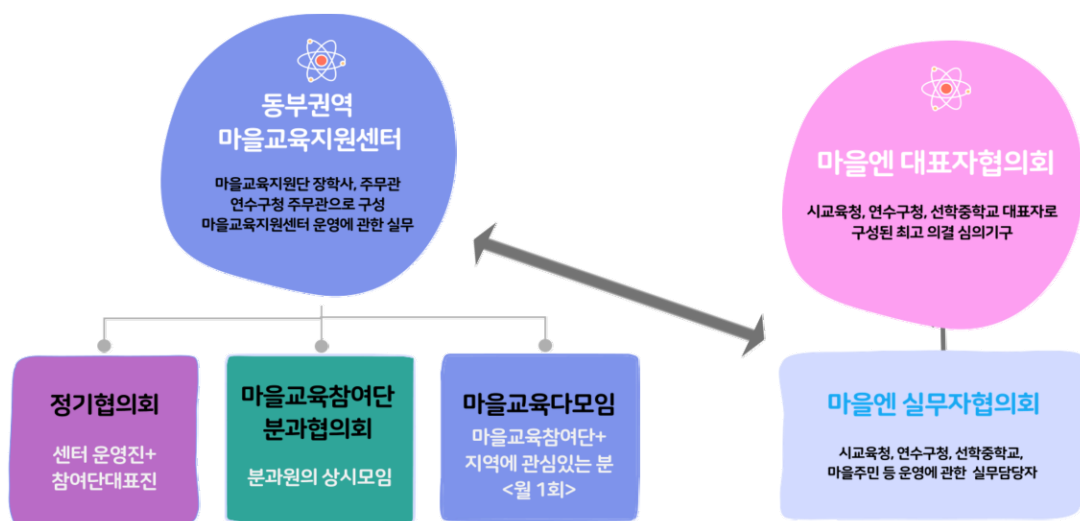
3. 마을+교육+공간=교육문화공간 마을엔

교육문화공간 마을엔은 선학중학교 부지에 인천시교육청과 연수구청, 연수구 소재 마을교육공동체 및 지역 사회 기관이 의지를 모아 만들어낸 공유공간이다. 그야말로 민·관·학 거버넌스의 실체로 협치의 운영원리로 체계화되어 있다. 건립을 위한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용자중심의 공간구성으로 학교 관계자인 학생, 교사, 학부모, 마을교사의 의견을 모아 공공재의 역할을 위한 지역주민의 공간 활용도 구상하였다. 가장 우선은 학생들의 교육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며 교육활동에 침해되지 않는 한에서 지역주민에게 여는 ‘공유공간’으로 기능한다. 그야말로 마을과 교육(학교, 학생을 위한)이 공간에서 만나 각자 존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공동 성장하는 곳이다.

마을엔에는 이질적인 공동체가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 민·관·학이라 분류할 수 있는데 어찌보면 모두 사람의 일이라 굳이 이질적인가 싶기도 하다. 그러나 각자의 영역에서 해야 할 역할은 이질적이다. 시민, 행정기관, 교육자, 학생의 입장의 차이와 사용하는 언어도, 이해하는 방법도 모두 다르다. 어떨 땐 모두가 주인이기도 하고 어느 상황에선 주인이 없기도 하다. 아이러니하지만 공간의 토대가 되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말미에 나뉘보도록 하겠다.

III 마을교육공동체 플랫폼

1. 네트워킹의 장, ‘교육문화공간 마을엔’



〈교육문화공간 마을엔 협의체 구성도〉

선학중학교에 자리한 ‘교육문화공간 마을엔’은 민관학 거버넌스의 전국 최초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시교육청과 지자체, 학교, 민(학부모, 마을교육활동가)의 협치로 만들어낸 결과물로 2021년 9월 17일 개관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그야말로 공동체원들이 만날 수 있는 플랫폼으로써의 역할을 하는 공간이다.

2023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총 1000회의 넘는 대관 횟수와 3500시간이 넘게 사용했으며 이곳을 사용한 단체들을 보면 초기에는 주로 시교육청과 연수구청 관련 지원 사업 관련한 대관이 주였으나 현재는 주민의 사용 빈도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마을학교 운영을 위한 정기대관, 마을학습공동체 학습모임, 문화예술동아리, 주민자치회, 청소년자치동아리 등 소모임과 마을교육활동가 연수, 회의 등 다양한 형식으로 만나고 있다.

인천문화재단에 지원받거나 소속된 단체, 연수문화재단과 더불어 여러 예술단체의 공연도 열리기도 하고, 마을교육지원센터의 문화예술프로그램으로 인천독립영화협회와 작가와 함께 하는 독립영화상영회도 열렸다. 마을엔이 공유공간으로 알려지며 주민의 작은 소모임과 회의를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학생자치동아리에서 회의를 위해 대관하는 등 인천시 관내 학생들의 이용도 늘고 있다. 지역의 주민자치회나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단체에서도 사용하고 있는데 특히 매월 선학동 주민자치회 사회보장협의체는 마을부엌에서 반찬나누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반찬나눔 날은 동네 어르신들이 마실하는 날이기도 하다. 선학중학교에는 마을기반 교육협동조합이 여러개 있다. 현재는 교육협동조합이 학교내 공간을 임대하여 함께 생활하고 있다. 생활공간이 같다는 것은 관계와 친밀감이 생기고 관계에 대한 책임감도 따른다는 것이다. 22년에 인천시 지원 사업으로 하던 마을밥상을 올해에도 계속 운영하고 있다. 학생과 마을이 함께 준비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밥 한끼를 같이 먹는 자리로 한술밥 식구가 되는 관계의 확장으로 연대감을 갖는다.

마을엔이란 공간 안에서 저절로 네트워킹이 일어난다. 동부권역 마을교육참여단의 학생, 청년, 주민, 교사분과 모임과 매월 정기적인 분과대표자 회의로 분과 상황을 공유하며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도모하고 도움을 받기도 한다. 학생과 청년분과는 형제 남매처럼 지내는 사이가 되었다.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분과대표는 과제 도움을 받거나 진로 상담이 필요할 때 청년분과 누나들을 찾는다. 어느새 공동체는 서로 살뜰히 챙기는 가족이 되었다.

마을엔에는 매주 연습을 위해 모이는 시니어 우크렐레동아리가 있다. 마을엔 행사에 우크렐레 무료공연을 하기도 했다. 얼마전에는 연주에 노래를 불러줄 가수가 필요했다. 청년분과에 본업이 노래 부르는 친구가 기꺼이 연습에 합류하여 시니어와 청년이 함께하는 공연을 만들어냈다. 이 밖에도 마을엔에는 이야기가 많다. 아이들의 문제로 학교 상담에 불려온 엄마가 마을카페에서 만난 학부모의 격려로 ‘또바기’라는 학부모봉사단을 만들고, 하나, 둘씩 모아진 마음들이 10명이 넘어 그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하나둘 모인 엄마들은 자발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자녀들과 대화하기 위해 비폭력대화법 연수도 함께 했다. 주말에는 다문화 학생을 위한 이중언어 주말학교도 운영된다. 대한고려인협회와 마을엔이 협력지원을 협약하였다. 또한 한국어마을학당에는 한국어를 배우기 위한 다문화학생들이 매주 소문을 듣고 무작정 찾아온다. 언어장벽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주민의 다급한 심정이 보여 쉽게 돌려보내기가 쉽지 않다. 아이들 데리고 함께 언 엄마들도 함께 한국어를 배운다. 감사한 마음은 손수 준비한 전통음식으로 표현한다. 또 그 마음이 고마워 자국의 음식으로 보답하는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복원하고 싶었던 마을의 모습이지 않은가.

2. 시민참여형 온라인 플랫폼 커먼즈맵 [찾다]

우리교육청에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으로 두가지 유형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그 중에 먼저, 온라인 유형의 마을교육공동체 플랫폼으로 ‘시민참여형 커먼즈맵’으로 교육공동체 주체가 직접 자신들의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이다. 온라인 플랫폼의 기능을 정보교류에 중점되어 본다면 원하는 정보를 찾기 쉬워야 한다. 거기에 모든 정보가 통합적으로 제공 시스템이면 더 편리할 것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은 각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까지 구축된 경우가 많다. 실제로 정보공유나 네트워크를 위한 많은 온라인 플랫폼이 활성화 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유는 개별화된 플랫폼으로 제공되어 찾아가는 과정의 번거로움이 있고 과잉된 정보의 홍수로 필요한 정보를 찾는 것이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을 필요하다. 기존의 홈페이지나 미디어를 한 곳에 모아 검색하게 하는 포털시스템으로 특히 마을교육과 관련된 공공적인 정보를 통합하는 플랫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이러한 통합지원시스템은 컨트롤할 수 있는 역할을 누군가 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분절적인 행정시스템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지 않고서는 해결하기 쉽지 않다. 이러한 통합지원플랫폼을 마련한다면 어느 단위에서 업무를 책임져야 하는 문제부터 시작할 것이다. 또 그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행정적인 문제들도 예상된다. 이런 문제일수록 행정중심이 아닌 협치의 관점으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인천시교육청에서는 마을교육에 관련한 정보를 위치기반으로 제공하고 서로의 정보를 공유, 정보콘텐츠를 함께 만들어가는 공유플랫폼을 제공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이는 한 플랫폼에 가능한 많은 네트워킹이 가능한 구조로 정보 제공자가 직접 참여하는 방법으로 이뤄지게 하고자 한다. 그래서 시민참여형이다. 참여자가 직접 위치를 기반으로 하는 맵형식으로 마을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플랫폼은 마을교육공동체의 온라인에서의 기록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의 성패는 민관학의 거버넌스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거버넌스 논리는 오프라인 공간의 마을교육공동체 플랫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IV

마을교육공동체의 플랫폼의 역할

1. 네트워킹의 작동

마을교육공동체의 플랫폼은 네트워크, 즉 연결의 역할이 핵심이다. 플랫폼에서 상호작용하며 공동 성장하는 공동체를 확인할 수 있다. 때문에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플랫폼의 구축이 요구되는 것이다.

마을엔의 네트워크는 행정기관의 주도로 운영되는 프로그램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전혀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연히 사람들의 만남과 동시에 일어났다. 물론 서로 다른 동기로 마을엔에 온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사람들이 움직인다. 그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만들어낸 공동체가 있다. 기관이 미리 세워둔 계획대로 과정이 진행된다면 가능했을까?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연구(2021. 김민찬외)에 따르면 관의 간섭은 협치의 갈등 요소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요인은 관은 지역사회가

자율적 문제해결을 위한 촉매작용을 해야 함에도 지역공동체를 신뢰보다 관리 대상이라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중간자의 관점에서 조정하고 중재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중요하다.

2.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영역으로 거버넌스(조직)와 예산, 인력, 협력사업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 4가지 영역이 모아지는 곳이 바로 마을교육지원센터이다.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연구(2021. 김정숙외)에 따르면 민간 부문과 연계성이 높을 경우 다양한 주체가 사업의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조정·중재가 필요하며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광범위하게 요구된다. 특히 민간 부문과의 연계성이 높은 마을교육공동체는 협력적 거버넌스로 조정과 중재의 방식의 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에서 거버넌스의 원리는 어렵다. 중간지원조직은 지원의 역할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지점에서 책임을 가장 많이 져야 하는 문제가 있다. 특히 예산과 관련하여 관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공무원으로서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유연하게 법에 접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집행방법을 찾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예산 집행에 있어 책임은 공무원에게 있다 보니 안전한 방법을 찾기 마련이다. 시설관리의 책임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공유공간의 소유가 어디인지에 따라 관리 책임이 따른다. 아주 작은 예로 마을엔의 쓰레기 문제를 들어보겠다. 마을엔에 오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남은 쓰레기는 화장실이나 복도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려진다. 마을카페가 있기 때문에 음료가 담긴 쓰레기가 분리되지 않고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 공유공간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는 성숙한 시민이라면 분리수거에 대한 기대가 있다. 공간을 공유하는 것은 책임과 권한도 나눠지기 때문이다. 쓰레기 문제로 불편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회의안건으로 올라온다. 결국 쓰레기 처리에 대한 규정을 만들고 잘 지켜지는지 관리 감독하게 된다. 자율에는 책임도 따르는 법이므로 자율적인 운영으로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방식이라면 관리 감독은 필요없는 일이다. 또한 공유공간을 소비하는 곳으로 착각하게 되면 후에 사용료를 봉사료를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게 된다. 사정에 따라 최소한의 비용이 필요한 곳도 있지만 공유공간은 공공요금으로 공공재를 지원하기 때문에 시설요금을 따로 부과할 필요가 없다.

3. 지속가능성을 위한 시스템화

공유공간이 사적, 공적 관계가 공존하지만 사회적 관계가 우선이기 때문에 결국 규정과 같은 시스템 운영이 필요하다. 관계는 사적, 공적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아 규정 또는 규칙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해야 한다. 시스템은 마을교육공동체의 본래 기능이 잘 작동되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그것이 회의 구조일 수도 있고 생활 규범과 같은 공동체 문화일 수도 있다. 쓰레기 분리수거가 생활규범이라며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건물 내 자원순환 구조가 시스템이다.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시스템이 더 공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공동체가 공공성을 잃게 되면 관계성과 친밀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사유화되기 쉽다. 또 ‘공유지의 비극’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무임승차나 한 개인의 독점이 공유재가 사유재로 변질되게 한다. 이러한 우려는 수많은 공동체가 경험한 결과를 토대로 하고 있다. 사회적인 제도 안에서 지속가능 할 수 있는 방법은 법제화와 권한과 책임의 분배로 지방교육자치의 실현이자 교마을교육생태계의 복원이다.

V

나아가며 : 운영관리자로서

‘교육문화공간 마을엔’은 민관학 거버넌스의 운영 논리에 따라 조직되었다. 그 곳에서 마을교육지원센터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지역사회의 네트워크와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는 역할로 주도보다는 지원하는 자세로, 수평의 균형을 잃지 않고 소통하며, 적절한 개입과 지원, 주민참여 예산집행과 유연한 사고로 업무 경계없이 일한다. 중간지원조직이 본래의 기능을 위해 권한 이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실질적인 역할과 지속가능한 시스템의 법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마을교육지원센터와 같은 지원조직과 마을엔처럼 마을교육공간이 걸어서 이동 가능한 생활권 안에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아이들의 마을에서 돌보기 위해 자비로 공간을 마련한 모임을 만났다. 학부모 모임에서 시작되어 생각에 생각을 더해 마을의 공공재로 공공적 역할을 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섰다. 이러한 움직임이 계속되는 한 마을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란 확신이 든다. 협력적인 거버넌스, 네트워크, 공동체를 만들기는 어렵다. 시간과 기다림이 필요한 일이다. 우리 사회는 성과를 중시하고, 과정을 중심으로 기꺼이 기다려주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때로는 비효율적인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관이 주도하는 마을교육공동체가 실패하는 경우가 이점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많은 지역공동체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마을교육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은 ‘그대로 두기’가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라는 것을 말이다.

토론 1

마을 공유공간 ‘지음(知音)’을 소개합니다

최영이 (마을공동체 지음 회원)

안녕하세요. 저는 마을에서 아이들을 함께 키우며 살고 싶은 소망으로 마을 공유공간 ‘지음’을 준비하고 있는 최영이입니다. 지음(知音)은 자기의 속마음까지 알아주는 친구라는 의미도 있고, 마을에서 손수 무언가를 일구고 싶다는 소망도 담겨있습니다. 제가 아직 회사원으로 얽매어 있어, 공간을 상시 열지 못하고, 마을공동체 모임 공간 위주로 이용되고 있어, 마을공유공간 ‘지음’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하였습니다. 이 공간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활용될 것이라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없어 아쉽지만, 이 공간은 큰 틀에서 마을에서 아이들이 함께 자라고, 주민들이 연결되고, 경제활동이 일어나고, 지역과 지역의 공동체가 연결되는 매개체가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마을공유공간 지음을 어떻게 마련하게 되었고, 마을공유공간에 대한 저의 생각, 공공기관의 지원 등에 대해 발표해 보겠습니다.

저는 현대사회의 주된 흐름인 입시경쟁, 성과위주의 서열화 구조에 아이들을 내몰지 않고, 아이들이 저마다의 색깔로 자라나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로 키우려면 부모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이 컸습니다. 아이들에게 자유로움과 가치를 일깨워주는 것이 주된 목표인 대안학교로 보낼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 삶을 살아낼 것인가? 두 가지의 길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이 고민도 하루아침에 하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넷이 있는데, 두 아이는 성인이 되었고, 두 아이는 아직 어렵습니다. 성인이 된 두 아이를 키우는 동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시민단체 활동, 혁신학교, 교육혁신지구 사례 탐방 등 관련 책을 읽고 교육을 들으며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대안을 찾았던 결과였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하지요? 저는 아이들에게 제가 생각하는 삶을 직접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길을 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마을공동체를 일구어 마을에서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마을에서 건강한 생태계를 이루고, 그 바람이 지역들과 연결되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좀 더 좋아지는데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그 첫걸음으로 2019년 8월 어린이집 다니는 셋째아이 또래 엄마들과 동네에서 책모임을 만들었고, 2020년부터 현재까지 4년 동안 인천교육청에서 주관하는 마을학습교육공동체 공모사업에 참여하며 마을공동체 강좌를 듣고, 책들을 읽으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꿈에 그리던 마을공유공간을 드디어 계약하였고, 2022년에는 다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가지고 마을의 엄마가 강사로 참여하기도 하는 등 학교수업과 차별화된 8회차 커리큘럼으로 마을학교를 진행 하였습니다.

제가 사비를 들여 공간을 얻은 것은 제가 이직할 곳이 바로 이 곳 마을이기 때문입니다. 공간 월세로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단체들의 어려움을 들으며, 큰 수익을 얻지 못하는 마을공동체 공간 특성상 안정된 기반을

갖추고 싶었습니다. 몇 년간 공간으로 쓸 건물을 보러 수없이 동네 부동산을 다녔었는데, 2021년 마침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공간을 만나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 세상 힘든 사람은 공간을 열어본 사람과 열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었다고 할 정도로 맘고생을 많이 했는데, 제가 공간은 매입했지만 회원들에게 우리의 공간으로 받아들이길 바랬던 마음과 마을공동체 활동은 하고 싶은 마음이 다들 다를 텐데, 제 맘만큼 따라주지 않는다고 회원들에게 많이 서운해 하였습니다. 지금은 조금한 마음을 버리고, 이 공간이 마을에서 필요한 곳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꾸준히 조금씩 가꾸면서 준비해 보자라는 여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김윤희 장학사님이 발제문에서 말씀하신 마을교육지원센터와 같은 지원조직과 마을엔처럼 마을교육공간이 걸어서 이동 가능한 생활권 안에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밝혔습니다. 저희 동네에는 제가 사비로 얻은 마을 공유공간 지음도 있지만, 가까운 곳에 미추홀구에서 제공하는 원래 아파트 모델하우스였던 공간을 시민거점공간으로 탈바꿈한 공감시민협력플랫폼도 있습니다. 이런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거점공간들이 동네에 많이 있으면 좋을 텐데 공적공간은 지속성과 자율성 부분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지자체장이나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그 공간의 주체가 하루아침에 변하기도 합니다. 최근 연수구 지자체장이 변경되면서 공원내 작은도서관에 경험 많은 지역의 작은도서관들에게 위탁했던 정책을 직영으로 변경하는 사례라든지, 연수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지역에서 20년 이상 마을공동체 활동을 했던 활동가를 대표로 위탁운영하다 종료하는 사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선학중학교에서 마을엔 공유공간을 함께 준비했고 현재 활동하고 있는 연수구 어느 시민단체가 마을엔 공간을 그들의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거점공간을 마련하고 있는 사례만 봐도 공적인 자금으로 운영되는 공유공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민관학 거버넌스는 명칭처럼 수평적 구조가 아니고,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지원보다는 관리와 통제라는 이유로 수직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자율적 운영에도 한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적인 영역에서의 마을교육지원센터는 마을공유공간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요?

저는 NO가 없는 운영방식이라 생각합니다. 몇 년전 시민단체에서 하는 마을활동가 역량교육에서 마을활동가는 지역에서 주민들의 제안에 No를 하지 말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Yes라는 부분이 급진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마을에서 만나는 누군가의 제안을 최대한 받아주고, 실행해 주고 싶은 그 마음은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과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 기관에 함께하자고 제안을 하면 자신들이 주도하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들은 매우 수동적으로나 부정적으로 받아들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공적인 영역에서 관리부서의 담장을 허무는 것, 이 공간의 주인은 주민이고, 단 한명의 주민에게도 열어주고 지원해 주어야겠다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이 기준, 저 기준을 적용하며 YES를 못하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다른 지역의 교육혁신지구 성공사례를 들어보면 그 성공의 중심에는 공공기관의 열린 마음과 지원구조에 있었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음의 2023년 마을교육학습공동체 주제는 '예술'입니다. 올해는 대중사업으로 '김중미 작가와의 만남'과 '몸으로 표현하는 문화예술활동'을 계획하였고, 모임 안에서 회원들의 지인들 홍보만으로는 인원모집이

어려워 지역의 공공도서관인 주안도서관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임에서 강사섭외 및 강사비를 지원하고, 홍보와 인원모집, 장소대여 등을 주안도서관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난 6월 김중미 작가와의 만남을 진행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자리를 채워주었고, 행사 후 도서관 관계자 분들과 교육청 공모사업 담당자분들이 지음 공유공간에 오셔서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행사를 공공도서관과 함께 진행해 보니, 저희 모임이 지향하는 가치와 존재를 공공기관이 인정해 주면서 주민들에게 공공성과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과거 저희 모임에서 주안도서관에 이런 마을공동체 사업을 같이 하자고 두어 번 제안했었는데, 도서관 리모델링이라는 이유도 있었지만 담당자가 쉽게 협업을 수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마을공동체 사업이 지역마다 이슈이기도 해서 그런지 공공기관이 문을 열고는 있는데요, 공공기관이 주관이 되는 사업을 공지하고 추진하는 일이 주된 일이기도 하지만, 주민들이나 마을공동체의 제안에 도서관이 지원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가 매우 큼을 생각한다면, 공공기관이 아래로부터의 사업추진을 중요하게 생각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윤희 장학사님은 공동체가 지나치게 관계성과 친밀감을 우선시하면 공공성을 잃게 될까봐 우려하고 있지만 우리가 사람들과 살아가는 기본은 관계성과 친밀감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 되고, 성과가 크게 나지 않는 마을공동체, 마을공유공간 이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점점 타인에 대해 무관심하고, 개인주의 사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회적 동물로써 사회적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이 본성이 해소되지 못해서 사회적 이탈, 폭력, 자살 등 현대사회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학사님이 우려하는 공동체가 무임승차나 한 개인의 독점이 되는 사유재로 변질되는 문제는 그 공간이 지향하고 있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자'는 가치가 공공성의 원칙을 세워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가치는 소수의 의견이라도 배제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이고,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도록 살피는 일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때때로 협력하고 지원해 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마을공유공간을 거점으로 마을에서 아이들이 우정을 나누고, 사랑을 배우고, 꿈을 찾고, 사회가 선호하는 기준이 아니라 오롯이 나의 기준을 정립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어른들이 자신의 허한 마음을 소비보다는 따뜻한 이야기로 채우고, 함께 노동하며 땀의 의미를 알고, 좀 덜 바등바등하고, 좀 더 널널하게 즐기면서 삶의 워라벨을 높이기를 바랍니다. 마을 마을에 이런 건강한 마을교육생태계 거점공간이 있고, 이 거점 공간들이 연결되어 이 사회의 곳곳한 줄기가 되어,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한국사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토론 2 삶과 배움이 일치되는 마을교육에서 공간활용의 문제 [삶과 꿈을 잇고 공공재를 가꾸는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김지은 (인천목향초등학교 교사)

1. 들어가며

코로나 기간동안 줌 등 화상회의 어플을 통해 원격수업을 하고,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가상의 학습공간을 이용하면서 교육분야에서는 물리적 공간의 필요성이 약화되었다. 하지만 2년여 기간 동안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등장했다.

실제적인 대면 교육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가치들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어린 학생들에게는 사회적 기술, 의사소통 능력, 원활한 대인관계 능력 등이 연령에 맞게 발달하지 못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그 문제는 교육현장에서 현재진행중이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통해 가상의 공간으로 도달되지 않는 여러 가지 중요한 가치들이 있으며 역설적으로 물리적 공간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공교육현장에서의 공간의 가치를 짚어보았다면 거버넌스의 한 차원을 담당하는 민주도의 마을교육공동체에서는 공간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고찰해보고자 한다.

삶과 배움이 일치되는 교육은 물론 가상공간에서도 실현가능하지만 마을, 지역이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삶과 배움의 일치라는 의미에서는 더욱 적합할 것이다.

오며가며 쉽게 들릴 수 있는 문턱이 낮은 공간, 동네 어른들, 동네 형, 동생이 있는 공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상주공간의 확보는 지불해야하는 비용이 문제이다. 특히 초기 마을교육공동체에서는 고정비용이 드는 상주공간의 확보는 쉽지 않은 일이다. 한편으로 공간의 확보는 공동체에 정체성을 부여하고 확실성을 부여하기에 어떠한 공모사업에서는 상주공간의 확보를 조건으로 하기도 한다. 그러한 점에서 공간은 마을교육공동체의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마을교육공동체에서 공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현재 이용되는 공공재로써의 공간활용 현황을 짚어보고자 한다.

2. 공공재로써의 공간 유형

1) 학교

학교는 지역의 가장 중심이 되는 교육공간이기도 하고 이미 물리적으로 교육을 위한 환경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시 가장 우선적으로 선호되는 공간중에 하나이다. 실제 학령인구가 줄어 학교내에는

유희교실이 늘어나고 있다.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도 교육이 이루어지기에 가장 좋은 여건이기도 하다.

마을엔의 경우 학교내에 있는 별도의 공간으로서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 공간이기도 하다. 하지만 여전히 관리의 책임문제, 안전문제로 학교교실 자체를 공동체의 공간 문제로 활용하는 데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특히 최근에 학교내에서 발생한 흥기난동 사건으로 인해 안전을 확보할 절차나 방법이 정해지기 전까지 학교내 별도의 건물이 아닌 한 학교건물 자체의 활용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학교내에서 활동하는 교육협동조합, 학교협동조합은 학교를 공간으로 활용한 교육공동체의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는 주로 매점 등의 사업을 주로 하고 있다. 한편 서흥초등학교의 교사가 주축이 되어 청소년과 주민을 대상으로 목공, 도예 생태교육을 하는 서흥꿈세움협동조합은 학교 후문 내의 별도의 공간에서 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수업을 하는 학생들의 안전도 확보되면서 공간의 안전성도 확보되고 학교, 학생, 학부모, 주민, 교사의 삶과 배움이 일치되는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서흥 꿈세움협동조합은 현재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하였다.

2) 청소년센터

학교외에 마을 공공재를 활용하여 마을교육공동체의 활동으로서 서구 네트워크형 마을공동체 띠앗을 새로운 모델로 제시하고자 한다. 교육과 돌봄을 영역으로 하여 검단메이커스, 띠앗, 검단청소년센터가 사업의 주체이다. 검단청소년센터는 시설관리공단 산하의 기관으로 발제문에 나와있는 영역성, 기능성, 접근성을 확보한 공유공간이다.

3d실, 메이커스실, 강당 등을 메이커활동, 돌봄교육활동, 체육활동시 목적에 맞게 교육공간을 활용하고 있다. 안전성과 접근성, 체계적 관리가 확보된 공공재를 활용한 모델이다. 일회성으로 청소년센터를 활용한 적은 있지만 장기적 프로젝트로 청소년센터의 활용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3) 공유공간 활용의 가능성

현재 주민자치위를 중심으로 주민센터를 활용한 마을교육생태계는 가장 기본적인 모델중의 하나이다. 한편으로 지역에 새로 건립되는 문화체육센터에 상주단체로서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마을교육공동체가 있는데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는 바이다. 상주단체로서 문화체육센터에 입주하게 된다면 공공재를 활용하고 가꾸는 새로운 모델이 되리라 생각된다,

3. 마무리하며

발제문에 언급된 커먼즈맵이 공공재와 마을교육공간을 잘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 역할을 부가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면 공유공간의 활성화를 통해 마을교육이 더욱 풍성해질 것이다. 또한 발제문에 언급된 중간관리 조직의 적극행정을 통해 공공재를 활용할 수 있는 장벽이 낮춰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토론 3

공유공간 관리자와 이용자의 역할

하미정 (인천예송초등학교 학부모)

마을을 위한 공간 ‘마을엔’은 마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입니다. 그 아름다운 공간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유지하기 위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관리자도 이용자도 각자의 역할과 책임이 있습니다. 역할 분담과 책임을 갖으려면 관리기준의 세분화가 필요합니다.

1. 홍보관리- 다양한 의견 청취

사용자가 늘고 있다는 것은 중간관리자와 이용자의 역할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용자가 늘어나는 것과는 별개로 이용자 중 중복이용자가 많다면 아직 마을엔을 모르는 새로운 사람들도 찾을 수 있도록 교육분야, 교육 후 활용 방법, 사용자들이 선호하는 시간 등의 설문조사를 통해 학습·휴식·건전한 모임의 장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자 의견을 알아보는 절차가 추가되어 다양성을 확보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2. 공간관리

정해진 규칙을 정하는 것은 중간 지원조직이 맡아서 운영지침을 정하고, 사용자가 지켜야 하는 내용의 교육을 미리 해서 쓰레기 문제 등 관리소홀의 문제를 사용자가 지키지 못하면 패널티를 줘서 이용정지 등의 방법을 채택하면 중간 지원조직의 관리 책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리수거 등의 문제는 남은 음료를 버리고 씻어서 분리수거를 해서 버릴 수 있게 미리 방법을 제시하고 기반시설을 설치해두는 해결책을 만들어 시스템화되면 불편함은 사라질 것입니다. 운영지침을 잘 지키거나 더 나아가 적극적인 관리를 위한 제안을 하는 사용자에게는 포상으로 커피쿠폰이나 무료수강권등의 긍정적인 방법의 보상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3. 관리주체

마을기반 교육협동조합이 학교내 공간을 임대해 사용한다고 하는데 ‘공공재는 개인이 소유하지 않고 모두가 나누고 누구나 쓸 수 있어 자원이 독점되지 않는다.’의 의미로 보면 공유공간은 모두에게 개방되는 공간이라서 임대를 주는 것은 사적소유로 인식할 수 있어 누구나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임대를 주는 것이 맞는지 그 공간도 사용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해야 하는지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을엔 내에 임대를 해서 누군가가 수익을 얻고 있다는 것을 알면 나도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질 단체들도 있을텐데 어느 누군가는 이득을 얻고, 어느 누군가는 얻을 수 없다면 전부 공유공간으로 두고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4. 예약관리

공유공간으로서의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예약한 단체가 어디인지 알 수 있게 월별 스케줄표가 전체 공유 되어 관리조직 뿐 아니라 사용자들도 공유공간의 이용실태를 알 권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턱이 낮아 예약이 쉽고, 다양한 단체가 이용을 해서 활성화되는 것이 마을엔을 만든 이유니까요.

5. 주차관리

마을엔은 주차 공간이 협소합니다. 카페에 가고 싶어도 가기가 어렵습니다. 지하철역이 가깝다고는 하나 여럿이 차 한 대로 가면 교통비도 적게 나오고 이동시간도 줄일 수 있는데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갈 수 없다는 점이 제일 아쉽습니다. 대규모 교육의 경우 선학중학교 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어서 불편하지 않지만 평상시에는 주차장 자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접근성을 높이는 절차가 필요해 보입니다.

각자의 역할을 잘 지키고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관리가 된다면 알아서 찾아오겠죠?

사람 냄새가 나는 공유공간 ‘마을엔’

오늘 회의하러 거기 갈까? 우리 커피 마시러 거기 갈까? 하는 말이 나올 수 있게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하고,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
제2회 2030인천미래교육 콘퍼런스

세션
5

시민교육분과

발제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박철희**

토론 1 인천광역시교육청 세계시민교육과 장학사 **김현정**

토론 2 인천공항중학교 교사 **안미경**

토론 3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 위원 **이 훈**

토론 4 (사)생태교육센터 이랑 사무국장 **성은혜**



발제

2030 인천시민교육의 정책목표와 방향성 탐색

박철희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 시민교육분과에서는 인천미래교육2030에서 시민교육의 정책목표로서 “우리 삶과 사회를 바꾸는 공존과 상생의 시민교육실현”(안)을 제안하였고, 이 글은 이에 대한 검토 요청에 응하여 작성된 것이다. 2030년 인천 시민교육 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고려하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점을 몇 가지 제안하고 시민교육분과의 시민교육 정책목표안과 관련된 지점에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 국가범위를 넘어선 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정부 수립 이후 제헌헌법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표방하였지만, 현실에서는 권위주의 정부에 의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적지 않은 제약을 받았으며 그 결과 민주화공화국이라는 국가정체성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였다. 권위주의 정부하의 교육은 주로 남북 체제대결의 국면에서 국가체제의 정당성과 국가에 대한 개인의 의무를 강조하는 정치교육과 국민정신교육의 성격이 강하였다. 이와 같은 국가주의적 정치교육은 권위주의국가체제와 함께 반민주적 교육이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1990년대 사회민주화와 문민정부의 등장과 함께 정부의 교육정책은 국가주의적 이데올로기 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으로 정책적 기조가 변화하였다. 문민정부 정부 이후 민주시민교육은 시기에 따라 다소 굴곡은 있었지만 우리나라 교육의 주요 방향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한편, 문민정부 시기부터 WTO체제 출범에 따른 세계화의 물결로 인해 교육의 문제를 국내를 넘어 세계화의 맥락에서 바라보기 시작하였다. 다만 이 시기 세계화는 신자유주의적 흐름에 바탕을 두고 논의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인재를 기를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교육체제를 만드는 데 강조점이 있었다. 이후 한국이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발전하면서 외국으로부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유입되었고, 그 결과 한국사회는 문화적 배경이 다양한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 사회로 변화해가고 있다. 또한 한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한국은 더 이상 세계의 변방이 아닌 중심국가로서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적 흐름 속에서 2015년 5월 인천에서 세계교육포럼이 개최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정부에서는 세계시민교육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동아시아시민교육, 인천형세계시민교육 등으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의 삶은 단위국가로 한정되지 않고 다른 나라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경제 위기, 전쟁, 환경오염 등이 우리의 삶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의 공동체로 긴밀히 연결되는 지구촌화 경향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와 같은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시민교육은 국가 수준의 정치공동체를 넘어서 지구촌 공동체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 현실공간을 넘어선 시민교육: 디지털 시민성을 고려한 시민교육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현대사회와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다양한 디지털 공간이 열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인 물리적 공간 외에 온라인 디지털 공간에서 서로 소통하고, 활동하며, 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디지털 공간에서 비대면 소통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디지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은 그 공간에만 머물지 않고 현실 공간으로 연결되면서 우리의 삶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디지털 공간은 사람들이 물리적 공간이 지닌 한계를 넘어서 편리하고 폭넓게 교류, 공감, 소통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삶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러나 익명성에 기대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가짜 정보를 유통하여 여론을 왜곡시키고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부정적 영향도 적지 않다.

정보통신기술이 가져온 디지털 공간이 공동체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확대시키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디지털 공간에 대한 이해 및 접근 역량, 디지털사회에서 개인의 권리와 책임, 디지털 사회 소통 및 참여 역량 등을 함양하기 위한 시민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면서 디지털 공간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져가고 있으며, 이와 같은 추세는 향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래 시민교육의 목표와 방향성을 설정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사회변화를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학교범위를 넘어선 시민교육: 평생교육으로서 시민교육

사회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사회변화에 따라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 등도 변화하기 때문에 시민교육도 평생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사회와 같이 변화의 속도가 빠른 경우 세대 간 시민의식과 문화의 차이로 인해 세대 간 대립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사회는 서구사회와 달리 압축적 성장을 통해 역동적으로 변화·발전해왔다. 압축적 성장의 과정에서 각 세대는 서로 다른 정치, 경제, 사회, 교육적 경험을 하였다. 그 결과 세대 간에 적지 않은 의식의 차이와 문화적 이질성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수준이 높고 다양한 정보통신 문화를 경험한 청년세대, 경제성장과 민주화 등을 경험한 중년세대, 전쟁과 산업화를 경험한 노년세대 등은 가족, 정치, 경제, 복지, 사회문화 등 여러 영역에서 서로 다른 인식과 행동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각종 선거에서 세대 간 투표 경향의 차이를 볼 수 있고, 정년 연장, 노인 복지 등과 관련된 이슈에서도 세대 간 입장의 차이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세대 간 차이에도 불구하고 통합된 공동체 내에서 같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평생에 걸쳐서 필요한 시민교육의 기회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청과 지역사회 내 여러 기관들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 역사적 소명의식에 기반한 시민교육

시민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과제가 무엇인지 공유하고, 역사적 소명의식에 기반한 교육이 된다면 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다. 대한민국이 그 동안 급속한 발전을 통해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과는 다른 역사적 경로를 거쳐 왔다. 유럽, 미국, 일본 등의 기존 선진국들은 모두 제국주의 국가로서 식민지 지배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반면 대한민국은 제국주의 국가로서 식민지배의 경험이 없고 반대로 식민 지배를 받은 역사적 경험을 가진 국가이다. 일본의 식민지배로부터 독립하였지만, 분단과 전쟁이라는 아픔을 경험하였는데, 이와 같은 고통과 고난을 딛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성장한 나라는 대

한민국이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과 한류 확산의 흐름 속에서 세계화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역사적 경험이 우리의 시민성과 시민교육에 밑바탕이 되면 좋을 것 같다.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대한민국의 시민은 과거 서구 열강들과는 달리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삶과 문화를 존중하고, 같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가치와 비전을 제시하고 공유하며,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자민족 중심의 국수주의를 넘어서 인류가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를 내면화하고, 포용과 상생의 가치를 삶 속에서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이 우리의 시민교육이 지향해야 할 핵심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시민교육분과에서 제안한 ‘공존과 상생’이라는 키워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 삶에 기반한 시민교육

앞서 언급하였듯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시절의 교육은 반공교육과 같이 국가체제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이데올로기적 정치교육의 성격이 강하였다. 권위주의 정부가 물러가고 민주시민교육이 정책적 기조로 자리 잡았지만 보수 정권과 진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의 방향과 흐름이 달라지면서 민주시민교육의 정치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근현대 주요 사건과 정권에 대한 인식, 북한에 대한 관점과 태도,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주변국가에 대한 태도, 기업과 노조에 대한 인식 등이 시민교육과 관련하여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쟁점들은 식민지배, 좌우대립과 남북분단,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의 역사 속에서 형성된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와 같은 쟁점들이 정치적 진영에 의하여 공동체 구성원들의 대립과 분열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교육이 정치적 진영에 의하여 지나치게 정치화되면 시민들이 체감하는 공동체 삶의 문제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 잦은 홍수와 가뭄, 폭염 등과 같이 기후 위기로 인해 공동체 구성원의 삶이 위협받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해결방안을 찾고 함께 실천하기 보다는 정치적 이슈로 변질시켜 정치적 공방을 벌이는 사태를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향후 시민교육은 정치적 진영에 기반한 이념적 접근을 넘어서 구성원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공동체의 문제들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역량을 기르는데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삶을 바꾸는~’ 역시 시민교육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키워드라고 여겨진다.

■ 지역사회에 기반한 시민교육

삶에 기반한 시민교육을 추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에 기반한 시민교육으로 연결된다. 지역사회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삶의 기본단위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지역사회에 속하게 되고 지역의 구성원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소속감을 지니고 함께 성장해간다.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인적, 물적 자원들은 모두 구성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그 자체로 중요한 학습 자원이 된다.

인천에는 평화, 환경생태, 문화다양성 등과 관련된 많은 인적 물적 자원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자원들은 시민교육의 주요 자원이 될 수 있다. 지역의 주요 자원들을 활용하여 시민교육을 한다면 학습자들은 자신의 삶과 연관된 학습경험을 할 수 있다, 또한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으로 이어진다면 자신의 삶을 바꾸는 실천 활동이 될 수 있다. 요컨대 시민교육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이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으로 이어지고, 삶의 원리로 내면화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연관성을 지닐 필요가 있다.

토론 1

2030 인천시민교육의 정책목표와 방향성 탐색

김현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세계시민교육과 장학사)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 시민교육분과에서 제시한 인천미래교육 2030에서 시민교육의 정책목표로서 “우리 삶과 사회를 바꾸는 공존과 상생의 시민교육 실현”(안)에 대해 경인교대 박철희 교수가 제안한 목표와 방향 설정에 대해 검토하고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국가 범위를 넘어선 시민교육: 동아시아시민교육에서 세계시민교육으로

시민교육이란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데 요구되는 지식이나 태도, 가치, 정신 그리고 지향성 등을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민주화와 병행하여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공히 주목받는 평생학습 주제다. 세계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 통일시민교육, 평화시민교육, 디지털 시민교육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우리 사회에서 활발히 펼쳐지고 있다.

먼저 국가범위를 넘어선 시민교육으로서 세계시민교육 관련 우리 교육청의 정책 을 안내하고자 한다. 지구촌 곳곳에서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갈등, 불평등, 기후 위기 등과 같은 문제가 인천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그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우리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인천형 세계시민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형세계 시민교육은 발제자가 언급한 것과 같이 동아시아시민교육에서 인천형 세계시민교육으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인천형 세계시민교육이란 인천의 이해 및 지역자원을 연계한 교육 활동을 통해 세계시민성과 글로벌 역량을 함양하여 자신의 진로를 주도적으로 개척하고, 지속가능한 지구촌 실현을 위해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세계시민 을 양성하는 교육을 말한다. 중점사업으로 교육과정 연계 세계시민교육 운영을 위해 인정도서를 개발·보급하고, 다양성 존중, 협력적 의사소통을 위하여 다국어교육을 통한 국제교류를 활성화 하며 인천지역자원연계 글로벌 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현실 공간을 넘어선 시민교육: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한 디지털 시민교육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면서 디지털 공간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도 사회변화를 고려한 디지털 시민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교육역량강화 조례 제정을 통하여 디지털 시민이 갖추어야 할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을 지원하고자 한다. 주요 정책으로 디지털 공간에 대한 이해 및 접근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정보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회복사업, 노트북을 활용한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디지털 사회에서 개인의 권리와 책임교육을 위한 디지털 안전 및 윤리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사회 소통 및 참여 역량 등을 함양하기 위한 교원역량강화 연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한 정책을 2024년에도 적극적으로 계획하여 실행할 계획이다.

■ 평생교육으로서 시민교육의 시작 ‘학교 민주시민교육’

학교 민주시민교육은 학생들이 평생교육으로서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시작 단계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19년 학교민주시민교육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해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지식·가치·태도를 배우고 실천하게 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학교민주시민교육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하 “학교시민”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는 민주시민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조례에는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정의, 책무, 기본원칙, 내용, 기본계획, 학교 민주시민교육협의회, 교육과정 편성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민선 4기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학생시민을 위한 학교민주시민교육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 사업으로 토의·토론수업 활성화 지원, 학생사회활동활성화 사업, 2022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민주시민교육 교육과정 및 인정도서 개발 및 보급, 민주시민교육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 역사적 소명의식에 기반한 시민교육: 과거에서 배우는 미래를 위한 지혜, 역사 바로 알기 교육

인천광역시교육청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2020.3.2.)를 제정하고 ‘과거에서 배우는 미래를 위한 지혜, 역사바로알기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이 교육은 지역사 및 우리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인천지역에 기반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기회 제공하고, 과거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과거를 성찰하고 현재를 이해하며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계기 마련하며, 역사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비판적 사고력을 신장시키고 건전한 민주 시민역량 강화 및 올바른 역사관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기존 지식 위주의 역사교육에서 벗어나 참여와 체험 중심의 역사교육 기회 제공하고 인천 지역사회 관련 다양한 교육 자원을 활용한 탐구·체험 중심의 활동 자료 개발·보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 인천 학생들이 탐구와 체험 중심 역사교육을 실천하여 비판적 사고력을 함양함으로써 건강한 민주시민역량 신장하고 지역에 기반한 우리 역사에 대한 바른 인식과 정체성 확립으로 미래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한다.

■ 삶에 기반한 시민교육: 학생 주체성을 발현하는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시민교육은 정치적 진영에 기반한 이념적 접근을 넘어서 구성원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공동체의 문제들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역량을 기르는데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역량 신장을 위해 우리 교육청은 자기 결정권과 책임감을 갖춘 학생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과감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관내 모든 중, 고등학교에 학생회장 공약이행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교육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학생들이 주도하는 인천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학생참여위원회, 학생자치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 지역사회에 기반한 시민교육: 학생 사회참여활동 지원

학교, 마을 등 사회참여를 통한 실천하는 민주시민 역량 함양과 공동체의 문제를 공동의 숙의 과정을 통해 해결하는 교육 공공성 실현을 목적으로 우리 교육청은 ‘학생 사회참여활동 프로젝트 운영’을 하고 있다. 사회참여란 자신이 속한 학교, 사회(마을)에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여 공동체 발전을 추구하는 사회적인 행위로 공공정책 제언, 법률 고치기 등 직접 참여하여 실천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를 위해 학생사회참여 관련 인정도서를 개발 보급하고 교과 활동,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등과 연계한 사회참여활동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 나아가며

사람과 자연, 인공지능이 공존하는 시대에 시민성에 관한 교육적, 미래지향적 접근이 필요한 때이다. 이에 민주시민교육의 기반 아래 디지털·생태교육을 강화하고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천교육주체 모두가 뜻을 모아야 한다. 이는 인천의 특수성과 정체성을 반영하는 시민교육, 인권 존중과 평화공존의 시민교육, 글로벌 시민성교육을 갖추는 것과 관련이 깊다. 우리 학생들이 인천에서 태어나 배우고, 인천에서 자신의 결대로 성장하고 꿈을 이루면서 세계의 인재와 시민으로 자라가는 것을 꿈꿔본다.

토론 2

교육 현장에서 바라본 2030 민주시민교육 정책

안미경 (인천공항중학교 교사)

I. 들어가며

학교는 다양한 학생과 사람들이 모여 개성을 발휘하고, 꿈을 키우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의 공간이자 사회의 축소판이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사회를 경험하고, 배우고 익힌 지식을 통해 어엿한 시민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학교는 여전히 19세기의 교실에서 20세기의 교사가 21세기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회가 학교에서의 시민교육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각 나라에서 정의하는 시민교육의 의미를 알아보고 인천의 시민교육의 방향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각 나라마다 시민교육에 대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저마다 조금씩 다르다. 독일은 정치교육(civic education), 프랑스는 대중교육운동, 영국은 citizenship을 함양하고 고양하는 교육, 스웨덴은 민중교육(folkbilning, 포크빌팅)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시민교육은 무엇일까? 어떠한 경로를 통해 발전 또는 변형되어 왔는가?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하나의 공동체로 긴밀히 연결되는 지구촌화의 흐름에 따라 동아시아시민교육, 인천형세계시민교육 등으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현재 학교 현장에서의 시민교육을 되돌아보고, 2030 민주시민교육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II. 교육 현장에서의 민주시민교육 현황 분석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교육 현장에서의 시민교육은 점점 자리잡아 가고 있는 모양새이다. 하지만 더 효율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교육 현장에서 구현되고 있는 시민교육의 현황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첫째,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이 쉽지 않다.**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적인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습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아직 경직된 교직문화, 학생과 교사 사이의 위계질서 등 아직 다른 집단이나 다른 나라의 문화에 비해서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가 잘 조성되어 있지 않다. 예전에 비해 각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되고는 있으나,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현상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금 생소하다. 이에 교육 주체가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 현장에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서로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공동체의 교육에 대한 참여 방법 및 시스템이 효율적이지 않다.**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의 교육에 대한 참여도는 높아지고 있다. 또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도 많이 마련되고 있고, 자치회의 활동의 범위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학생회 또는 학부모회가 많이 활성화된 것은 주체적으로 학교 교육과정 및 교육 현장에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학교 행사의 참여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캠프에 참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

이다. 또한 교육 현장에 관심이 있는 학교 내 자치회, 또는 소수의 학부모 및 지역사회단체를 제외한 다수의 교육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및 시스템이 부족하다. 이에 교육공동체가 교육활동에 쉽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셋째, **2022 개정교육과정에 발맞출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2022 개정교육과정의 추진과제 중 학교 현장의 자율적인 혁신 지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를 위한 행·재정적 체제가 뒷받침되어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 학기 17주 수업을 16+1 체제 자율운영으로 개선하였고, 학교와 지역의 교육 여건 등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개발할 수 있는 지역 교육과정을 지향하고 있지만, 교육공동체의 교육과정에 대한 낮은 인지도, 모두 똑같은 교육을 받아야 공평하다는 만연한 생각, 교육과정 자율화를 진행을 위한 교육공동체의 전문성 부족 등의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방면으로의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Ⅲ. 2030 민주시민정책의 방향

첫째,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기폭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시민성은 자신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문화로써 체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 3주체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시민 모두가 시민성 함양에 대한 중요성과 미래의 상생을 위해 꼭 필요한 역량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 SNS, 옥외광고, 동영상 등 홍보를 진행하도록 한다. 또한 각 주체들의 시민성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육 3주체가 함께 소통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포럼, 공청회, 컨퍼런스 등의 자리를 마련하여 시민성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교육공동체의 교육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구성되어야 한다.** 교육 3주체가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미래에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시민성이 길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학교교육활동 혹은 교육정책 등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바탕으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SNS 창구, 학교장 또는 자치단체장 등의 문턱을 낮추어 학생 및 시민의 목소리를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시간과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러한 목소리가 직접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체들 스스로 낸 의견이 어떠한 절차에 따라 논의되고 있는지에 대한 경로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로써 주체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내고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시민성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셋째,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시민성 함양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의 시민성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은 학생이 자기 자신과 공동체적 삶의 주인임을 자각하고, 비판적 사고를 통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제를 상호 연대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2022 개정교육과정의 한 테마인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 확대를 중심으로 지역교육과정을 통해 공동체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가며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는 것이다. 교육 3주체의 시민성과 집단지성이 요구되는 만큼 각 주체들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 및 교육, 다양한 집단의 주체들의 의견을 모아 함께 지역교육과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포럼 및 컨퍼런스 개최, 단위학교로의 권한 위임, 지역 네트워크를 통한 벨트형 교육과정 운영 등 행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미래사회에 피룡한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을 길러낼 수 있을 것이다.

Ⅳ. 나가며

세계적인 대문호 괴테는 ‘변화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하였다. 학교가 얼마나 빠르게 변해야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해야 하는가이다. 미래를 함께 살아가기 위한 민주시민교육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시대 흐름에 맞게 잘 맞추어야 한다. 이에 인천광역시교육청이 학교의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 and 교육공동체의 학교교육에의 참여를 지원하고 2022 개정교육과정의 방향에 따라 다양하고 개별화, 개인화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면 인천의 민주시민교육은 미래의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토론 3

시민교육 속의 시민

이훈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 위원)

안녕하세요, 사회적협동조합 함께 시작에서 인문학 수업을 강의하고 있는 이훈이라고 합니다. 박철희 교수님의 발제 “2030 인천시민교육의 정책목표와 방향성 탐색”을 잘 들었습니다.

박철희 교수님은 발제에서 총 6가지 즉, 세계시민교육, 디지털시민교육, 평생교육으로서 시민교육, 역사적 소명 의식에 기반 시민교육, 삶에 기반한 시민교육, 지역사회에 기반한 시민교육을 2030 인천 시민교육의 정책목표로서 그 방향성을 제시하셨습니다. 하나하나가 모두 현재 인천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필요한 시민교육의 정책목표이자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역사적 소명 의식에 기반한 시민교육이라는 정책목표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식민제국주의 정책을 펼쳤던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식민 지배의 아픔을 경험했던 나라라는 점. 또한 분단과 민족상잔의 비극을 경험한 나라라는 점. 이 두 가지 역사적 배경 안에서 시민교육을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는데, 이러한 시민교육의 방향성은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방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발제를 읽으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속에 존재하는 시민이란 어떤 능력을 가진 존재일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박철희 교수님의 발제에 따르면 시민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국가 수준을 넘어서 지구공동체를 지향함과 동시에 지역 사회 문제를 고민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실적인 문제와 더불어 디지털 세계와 같은 가상 세계의 문제도 고민해야 합니다. 거기에 더불어 세대 간의 갈등과 이념적 갈등을 해결하는 문제도 고민해야 합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만 보이는 문제들, 심지어 마치 딜레마처럼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 듯한 문제들을 고민하고 해결해야 나가야 하는 시민에게는 도대체 어떤 능력이 필요한 것일까요?

쉽지 않은 문제지만 답은 사실 이미 발제에 나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 의식에서 비롯된 나와 다른 그리고 우리와 다른 삶과 문화를 존중하고 포용하며 상생하려는 태도입니다. 존중, 포용, 상생, 아마도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꼭 필요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시민에게 매우 중요한 태도일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시민에게 이런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언어로, 명제로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했을 수는 있었겠지만 현실의 삶에서 우리 모두는 분명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아이들에게 존중, 포용, 상생의 태도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육 현장에서 교육되고 있는 배려, 이해, 공감 등의 덕목이나 자유, 평등, 평화 등의 가치가 바로 존중, 포용, 상생의 태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또 다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실제 우리 시민들의 삶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배웠지만 현실의 삶에서는 우리 모두는 존중, 포용, 상생의 태도를 잘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현실의 삶에서는 이런 시민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저는 그 이유를 요즘 제가 만나는 십대 친구들의 이야기를 빌어 말해보려고 합니다. 착한 건 어리석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는 착한 건 어리석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존중, 포용, 상생 물론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어리석은 것으로 치부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사회에서는 치열한 경쟁과 승리 그리고 승자독식을 통한 차별을 정당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것을 공정한 경쟁이라는 거짓으로 달콤하게 포장해 놓았습니다. 다 알다시피 우리 현실 사회에는 공정한 경쟁이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회는 태어날 때부터 다른 조건 속에서 태어나고 평생 살아가면서 다른 조건 속에서 경쟁을 해야 합니다. 결코 공정하지 않죠.

우리 사회가 이런 모습인데 존중, 포용, 상생을 하라고 교육한들 아이들은 코웃음을 칩니다. 아이들도 다 알기 때문입니다. 어른들 자신들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자신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그런 것들은 그저 다 꿈 같은 소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른들은 이미 이런 사실을 내면화 했죠. 여기 있는 분들조차도 거짓 공정 경쟁이라는 제 말에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결국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민교육의 정책 목표와 방향성을 고민하고 함께 토론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이런 자리가 많이 있어서 시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내놓고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회가 바뀌지 않는다면 이런 고민들이 자칫 탁상공론이 돼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시 제도를 바꾸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려고 노력했지만 다들 실패했습니다. 사회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모두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시민교육을 위해 애쓰겠지만 사회가 계속 거짓 공정 세계 속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한 승자독식구조 속에 남아 있다면 변화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시민교육의 정책 방향성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시민교육이 어떻게 하면 사회 변화와 함께 가야할지를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것으로 제 토론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4

인천의 다양한 시민교육, 모으고 연결하자. 그리고 지금 당장 해보자.

성은혜 [(사)생태교육센터 이랑 사무국장]

1. 인천의 다양한 시민교육 콘텐츠를 모으고 학교와 연결하자

인간은 자기 주변에 관심을 갖고, 그 변화에 본능적으로 적극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자기와 육체적, 심리적으로 거리가 먼 환경, 즉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고 느끼는 환경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져 반응을 하지 않거나 소극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

인천은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시민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세계시민교육을 지향하는데 이를 위해서도 나의 삶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시민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나와 내 주변의 문제를 먼저 해결할 줄 알아야 더 나아가 타인의 문제, 지역사회, 국가, 세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 마을 자원, 동네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를 주제로 한 삶과 삶이 함께 하는 시민교육이 이루어질 때 사람들은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 되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교육에서는 학교라는 근대적인 물리적 공간에서 벗어나 학생들을 함께 키울 수 있는 학습생태계가 매우 중요하다. 학교도 사회의 일부이며 학교와 마을의 연계를 중요시 여기고 있는 미래교육의 흐름속에서 학교는 학생의 개인적인 관심을 세상 밖으로 확장 시켜주고 학교 바깥의 다양한 전문가와 네트워킹할 수 있도록 인적자원을 연결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

인천에는 생태, 환경, 평화, 인권, 다양성 등의 시민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들이 활발히 활동 중이다. 인천지역에서 활동 중인 시민교육 기관의 프로그램과 인적자원을 우선 모으고 학교와 연결시키자.

현재 인천시교육청 시융합교육과 생태전환교육팀에서는 교육청 역점사업인 기후생태환경교육 사업들을 50여 개의 생태환경교육 기관 및 단체들과 협업하여 학교 및 지역사회 기관 모두가 함께하는 생태전환 교육을 활발히 이끌어내고 있다. 이를 참고하여 생태, 환경 뿐만이 아니라 더 다양한 시민교육 분야의 지역 자원들을 모으고 이 자원들이 학교와 활발히 연결되었으면 좋겠다.

2. 일회성 교육이 아닌 학생들의 일상에서 자주 접할 수 있게 하자

나와 내 주변의 환경자원, 문제를 기반으로 한 시민교육이 일회성 교육, 이벤트성 교육으로만 끝나서는 의미 있는 교육이 될 수 없다. 시민교육이 지구환경, 평화, 인권, 다양성과 같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교육이라면 학생들이 이런 가치를 내면화 할 수 있도록 일상적으로 자주 관련 내용을 접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의 삶에서 자주 시민교육의 내용을 만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학교 교과공부 안에서도 시민교육 내용을 만나고, 교과 바깥에서도 시민교육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학교 생활 외에 가정생활에서도 부모와

함께 시민교육이 지향하는 공존과 배려의 가치를 학습할 수 있어야 한다. 때문에 학부모 역시 주된 학교교육의 주체로 설 수 있어야 하며 학부모를 위한 시민교육도 빠지지 않고 고려되어야 한다.

교과안에서 시민교육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경기도교육청 사례를 살펴보자. 경기도교육청은 2015 개정교육과정연계 시민교육시리즈를 발간하여 공유하고 있다. 각 교과가 실천할 수 있는 시민교육 사례를 엮은 것인데, 2018년에는 도덕·윤리, 역사, 사회, 미술교과와 시민교육과의 만남이 있었고 2019년에는 14개 교과연구회 선생님들이 직접 수업을 개발하고 실천한 기록을 담고 있다. 이를 보면 각 교과 안에서도 충분히 시민교육 사례를 다루고 학생들이 참여하여 학습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인천에서도 교과연계 시민교육 사례를 발굴하고 개발하는 과정이 이루어진다면 좋겠다.

인천시교육청에서도 작년에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정규 수업에서 다루기 위해 전국 최초로 '학생자치와 사회참여'라는 이름의 교과서를 개발했다고 한다. 작년과 올해 일부 학교에서 이 과목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니 앞으로 더 많은 학교에서 이 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이 적극적으로 확대되기를 바래본다.

사실 모든 교육이 그러하겠지만, 민주시민교육은 교과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이 아니다. 오히려 교과를 넘어서, 지역을 넘어서 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학교 문화에 대한 접근, 학교 바깥의 전문가 혹은 파트너와의 네트워킹, 협업이 필요하다. 앞서 말한 것처럼 미래교육에서 학교와 마을의 연계는 필연이다.

3. 학생주도학습의 교육환경을 조성하자

미래교육의 가장 주된 원칙은 배움에서 학생이 주체가 되는 것이라고 한다. 한국사회에서 4.16 세월호 참사 이후 던져진 민주시민교육의 주된 화두 역시 주체성이다. 따라가는 수동적인 교육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사고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역량, 변화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 등이다.

인간이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기 위해서는 내재적 동기가 중요한데 '네이키드 애자일'이라는 책 본문의 일부를 인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동기이론 분야 석학인 심리학자 리처드 라이언과 에드워드 데시는 인간이 내재적 동기를 갖기 위해서는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욕구가 충족되어야 하며 이는 인간의 보편적이고 선천적이며 심리적인 욕구'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율성'은 개인이 외부 환경으로부터 압박 혹은 강요를 받지 않고 자신의 행동이나 추구하는 바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감정을 말한다. '유능감'이란 환경에 대처할 힘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관계성'이란 타인과의 교제나 관계에서 조화를 이룰 때 느끼는 안정성을 의미한다. 즉, 주위 사람과 의미 있고 안정된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구라 할 수 있다.

이 3가지 욕구에서 볼 수 있듯이 교육현장에 필요한 문화도 이러한 것이 아닐까.

주체적 사고와 행동의 자유를 허락하는 문화(자율성), 능력 범위 안에서 도전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주는 문화(유능감), 소통과 공감에 기반해 상호피드백함으로써 공동체, 사회적 자본을 지지하는 문화(관계성) 말이다.

이제는 형식적인 민주시민교육의 틀에서 벗어나자. 그리고 학생이 주도하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자. 학생주도 학습은 학생이 스스로 기획하고 결정하고 학습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고, 실제 세상의 경험을 익히고, 자원을 연결하고 선택하고, 실패를 통해 배우는 주도적인 학생 참여의 장을 제공하고 지원하자. 나의 관심과 역량이 세상에 필요한 일과 만났을 때 변화는 자연스레 가능해질 것이다. 삶의 변화를 이끄는 인천형 시민교육,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자.